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

2040

대통령 공고 제 295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국토기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 나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차 례

CONTENTS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3
1. 계획의 수립 배경	3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4
3. 계획의 특징	7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0
1. 국토의 현황	10
2. 여건변화 전망	15
3. 국토의 문제와 과제	19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25
1. 계획의 비전	25
2. 계획의 목표	26
3. 6대 추진전략	27
제2장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30
1. 기본 방향	30
2.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31
3. 국토 공간의 미래상	32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37
1. 현황과 문제점	37
2. 여건 변화와 전망	40
3. 주요 정책과제	43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57
1. 현황과 문제점	57
2. 여건 변화와 전망	61
3. 주요 정책과제	64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79
1. 현황 및 문제점	79
2. 여건 변화와 전망	84
3. 주요 정책과제	87
제4장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05
1. 현황 및 문제점	105
2. 여건 변화와 전망	108
3. 주요 정책과제	110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127
1. 현황 및 문제점	127
2. 여건 변화와 전망	131
3. 주요 정책과제	134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54
1. 현황 및 문제점	154
2. 여건 변화와 전망	155
3. 주요 정책과제	156

제4편 계획의 실행방안

1.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169
2.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170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운영 172
4. 협력적 국토정책 추진과 국민참여 활성화 173

제5편 지역별 발전방향

부 록 국토계획현장

표 차례

[표 I -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6
[표 I -2] 국민참여단의 목적과 운영	8
[표 I -3] 국토계획 현장 :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9
[표 I -4] 국토의 지리적 현황	10
[표 I -5] 지목별 국토이용	12
[표 I -6] 도로 현황	12
[표 I -7] 철도 총연장 및 복선화·전철화율 비교	13
[표 I -8] 공항 수송 현황	13
[표 I -9] 국토기반시설 현황(2018년)	13
[표 III-1]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시책 추진 계획	38
[표 III-2] 광역 연계·협력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예시)	44
[표 III-3]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50
[표 III-4] 우리나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조성시기	60
[표 III-5] 도시내 거리의 유형별 특징 예시	67
[표 III-6] 국토생태축의 단절·훼손 현황	105
[표 III-7]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 전략	114
[표 III-8] 도로 교통사고율 변화	132
[표 III-9]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요 내용	157
[표 IV-1]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모니터링 지표 예시	171

그림 차례

[그림 I -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4
[그림 I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8
[그림 I -3] 인구 이동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1975~2015)	11
[그림 I -4]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11
[그림 I -5]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14
[그림 I -6] 2040년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전망	15
[그림 I -7] 2040년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	16
[그림 I -8]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국민의식조사(2018) ..	17
[그림 I -9] 국토의 현안 문제: 국민의식조사(2018)	19
[그림 II -1] 계획의 기초: 비전, 목표, 전략	25
[그림 II -2] 국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예시	30
[그림 II -3]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국토공간 인식 변화	30
[그림 II -4]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 전략	32
[그림 II -5] 국토공간 형성에 필요한 요소	33
[그림 II -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34
[그림 III -1] 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	37
[그림 III -2]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도	37
[그림 III -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41
[그림 III -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41
[그림 III -5] 저밀도 경제 지역의 예시: 프랑스의 인구희박지역 및 체류인구 분포 ·	42
[그림 III -6]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43

[그림 III-7] 지역 간 연계·협력 유형	45
[그림 III-8]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사업 유형 예시	46
[그림 III-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55
[그림 III-10]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57
[그림 III-11] 국가혁신클러스터와 혁신도시별 특화 산업·프로젝트 ·	64
[그림 III-1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66
[그림 III-13] 도시공간을 활용한 혁신공간 개념도	67
[그림 III-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향	73
[그림 III-15] 관광분야 지역 연계·협력사업 예시	74
[그림 III-16]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77
[그림 III-17] 전국 쇠퇴지역 현황 및 노후건축물 전망	79
[그림 III-18] 생활SOC 공급의 공간적 불평등 수준 변화(2007~2016년) ·	82
[그림 III-19] 교통시설 및 방재시설 노후화 현황	83
[그림 III-20] 장래인구전망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84
[그림 III-21] 1인 가구 및 고령자가구 전망	85
[그림 III-22] 재해취약지역 전망(2100년)	86
[그림 III-23]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88
[그림 III-24]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93
[그림 III-25]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특화모델 예시	94
[그림 III-26]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 : 시간적·공간적 확장 ·	101
[그림 III-27] 국토 라이프라인 그리드의 개념도	103
[그림 III-28]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106
[그림 III-29] 국토생태축 구상	110
[그림 III-3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구상	113

[그림 III-31]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가이드라인 예시	116
[그림 III-32]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122
[그림 III-33] 경관도로 구상	124
[그림 III-34] 주요 도시의 접근성 (도로+KTX 기준)	128
[그림 III-35] 광역대중교통 예시	136
[그림 III-36]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137
[그림 III-37]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2030)	138
[그림 III-38]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2030)	138
[그림 III-39] 교통수단 통합 결제 개념도	144
[그림 III-40] 항만별 특화 전략	148
[그림 III-41] 단계별 글로벌 진출 전략	149
[그림 III-42]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구현 및 지능화된 공간 활용 연계 구상 ·	152
[그림 III-43]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념도	157
[그림 III-44] DMZ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사업 구상	160
[그림 III-45]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161
[그림 III-46]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철도노선(안)	162
[그림 III-47]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166
[그림 IV-1]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의 구성 방향	170
[그림 IV-2] 국토·환경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안)	172
[그림 V-1] 시·도별 발전 비전	177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1. 계획의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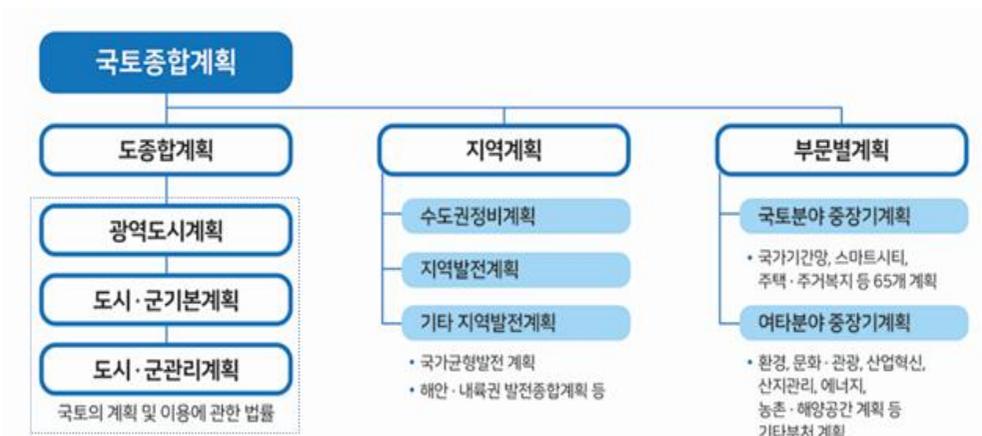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공간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제시
 -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추세로 전환에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제시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누적된 국토현안문제 해소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 증대에 따라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되는 국토기반 조성 방안 모색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중앙정부의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간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소통·참여 강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 계획의 위상

-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토기본법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림 1-1]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4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장기적 정책방향을 포함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연혁

-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 국민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 계획기간 변경(10년→20년), 2006년과 2011년에 수정계획 수립·운영

[표 1-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분	제1차 국토개발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개발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2020)
수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수도권의 과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현정부 출범 -분권-분산에 입각한 균형발전이 국정기조로 강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정부 출범 -국가경쟁력이 국정기조로 강조 -4대강 살리기사업 등 국책사업 반영 -FTA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
비전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분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글로벌 녹색국토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역제 및 관리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지대 조성 및 산업구조고도화 ○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추진 ○개방형 국토축 +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 Ⅱ형 국토축(7+1)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5+2광역경제권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 국토개발계획, 1982. 제2차 국토개발계획, 1991. 제3차 국토종합계획, 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2006, 2011

3. 계획의 특징

□ 계획의 성격

-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
- 지침형 정책계획 :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 강화
 - 부문·지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정책 과제별 계획지침(예시)을 통해 부문·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예시: 지침 3-1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도시개발 관련사업 추진 시 적정 수준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한다.

- 실증기반 계획 : 부문·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증적 자료·분석 제공
 - 국토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에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 활용, 계획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부문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활용
 - 계획 모니터링-국토계획 평가를 연동하여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환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소통·협력 계획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과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¹⁾를 통해 의견 수렴
 - 온라인 플랫폼(www.cntp.kr) 구축·운영, 국민참여단²⁾을 구성하여 미래 국토상과 핵심 가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환경과 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
 -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의 연동³⁾ 추진

1) 어린이 글짓기대회, 청소년 의식조사, 청년소통세미나, 일반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 추진

2)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을 170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9월부터 계획 종료 시까지 활동

3)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에 따라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력과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및 공동 이행방안 도출을 추진

[그림 1-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표 1-2] 국민참여단의 목적과 운영

<p>◇ 국민참여단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통협력형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추진 1차 계획은 외국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되었고, 2차~4차 계획은 국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수립된 반면, 5차 계획은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 <p>◇ 국민참여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참여단 모집 : 자발적 신청, 무보수 명예직 원칙 계획전용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2018.8.27.~9.27) 국민참여단 선정 : 170명 (지역별 최소인원 배정, 성별·연령별 단계별 무작위 선정) 성별(여 69, 남 101), 연령별(20대 이하 22, 30대 32, 40대 34, 50대 47, 60대 이상 35) <p>◇ 국민참여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전체회의(3회: 2018.11~2019.4)를 운영, 세 차례의 숙의과정과 직접 투표를 통해 「국토계획 헌장」 마련, 국토 비전과 발전전략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 1차 회의(2018.11.17.) : 국토 현재·미래 이슈 및 핵심가치 공유하기 2차 회의(2019.02.23.) :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 3차 회의(2019.04.20.) : 깨끗한 국토 만들기 온라인 플랫폼(www.cntp.kr) 제안, 공청회 국민패널 직접 참여, 설문조사, 유튜브 참여

□ 계획의 핵심가치

- 국민참여단 숙의과정을 통해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핵심 추구 가치 도출
 -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별 중장기 계획, 중앙행정기관 부문별 중장기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 제안

[표 1-3] 국토계획현장 :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국토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소중한 터전이다.
국토는 국민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균형된 국토, 안전한 국토,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국토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 하나.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조성한다.
- 하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국토를 관리한다.
- 하나. 지역을 개성있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국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지역과의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 하나.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는 공동 이익의 실현을 우선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보전·관리한다.
- 하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특성을 살려 세계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경쟁력 있는 국토를 조성한다.

2019년 4월 20일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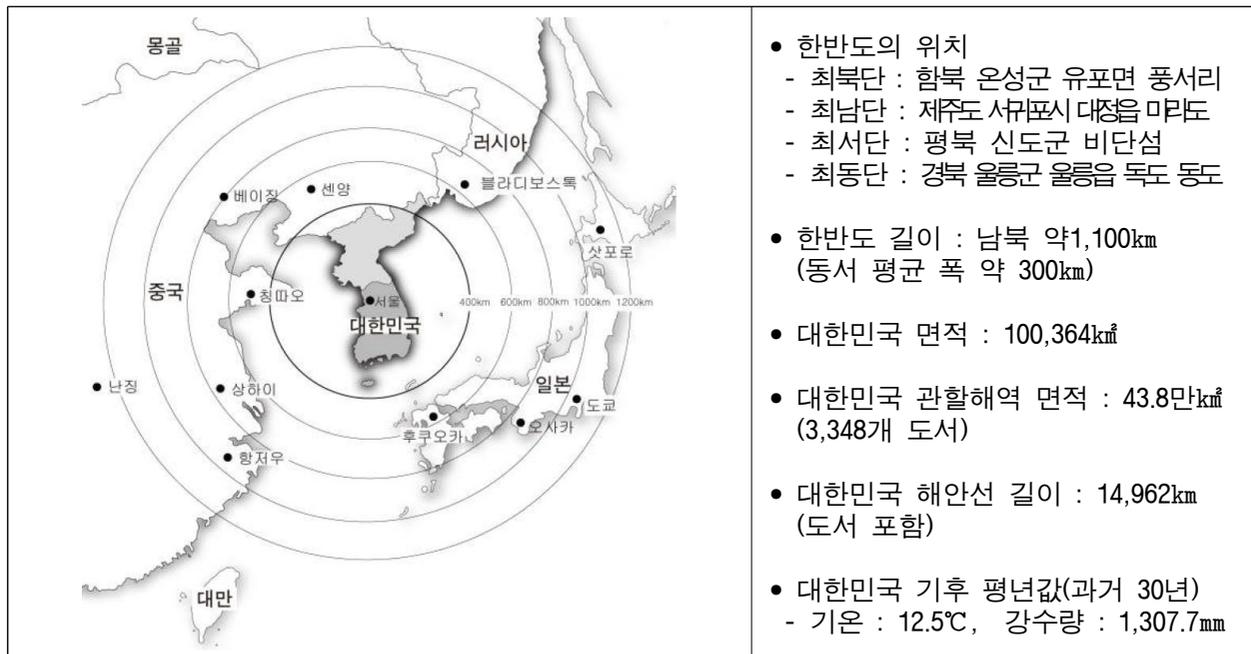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 국토의 현황

□ 지리적 여건과 자연 환경

- 우리나라는 총 100,364km²의 육지부와 관할해역 43.8만 km², 해안선 14,962km, 3,348개의 도서로 구성
 -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에 위치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약 63%에 달하는 산지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백두대간이 국토 골격을 형성
 -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단조로우며 사구와 석호가 발달되어 있고, 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어 다도해를 이루며, 서해는 연안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간석지를 형성
-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난 30년(1981~2010년) 간 1.2℃가 상승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뚜렷한 기온 상승 경향

[표 1-4] 국토의 지리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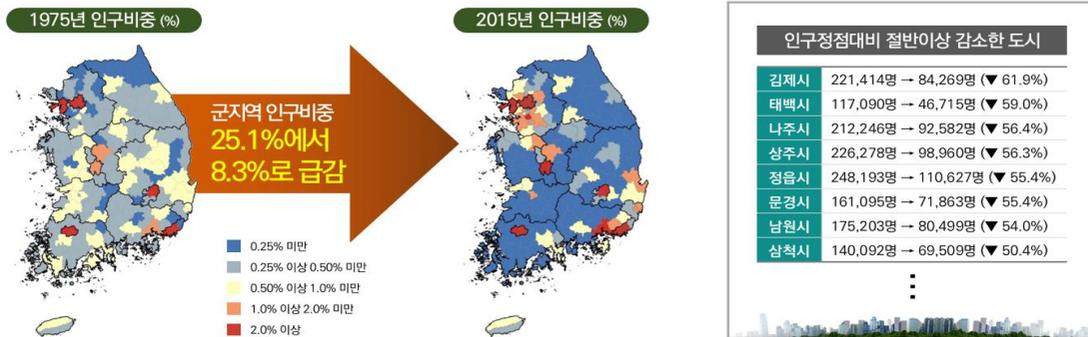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인구와 경제 활동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 명(2018년)이며, 출산율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0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을 기록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실질적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14.3% 수준
-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경향으로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 91.8%를 기록
 - 지역 간 인구 이동은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 경향이 강하며, 지방은 인구유출감소로 인구정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중소도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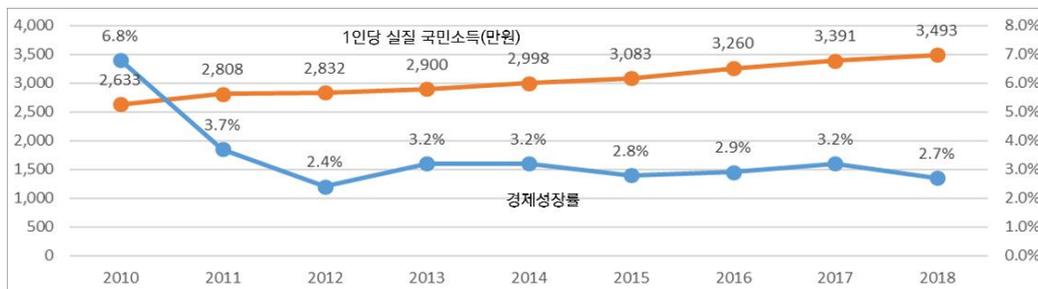
[그림 1-3] 인구 이동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1975~2015)



자료: 민성희외.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49면 재구성
 구형수외. 2016.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65면 참조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이후 2~3%대의 낮은 저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493만원 수준

[그림 1-4]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국토이용과 기반시설

-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권 유입으로 공장용지와 대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답은 감소 추세
 - 지목별로는 임야 63.5%, 농지 19.4%,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 11.0%를 차지
 -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46.5%, 관리지역 25.6%, 도시지역 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1.3%로 구성

[표 1-5] 지목별 국토이용

(단위 : 백만㎡,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면적	비율								
전	7,783	7.8	7,796	7.8	7,716	7.7	7,637	7.6	7,610	7.6
답	11,834	11.8	11,690	11.7	11,518	11.5	11,357	11.3	11,223	11.2
과수원	547	0.5	601	0.6	595	0.6	595	0.6	612	0.6
임야	64,504	64.5	64,216	64.1	64,081	63.9	63,918	63.7	63,711	63.5
대	2,744	2.7	2,827	2.8	2,930	2.9	3,041	3.0	3,143	3.1
공장용지	749	0.7	814	0.8	896	0.9	959	1.0	1,013	1.0
학교·도로·철도·하천·공원	6,236	6.2	6,401	6.4	6,581	6.6	6,734	6.7	6,884	6.9
기타	5,636	5.6	5,844	5.8	5,967	6.0	6,098	6.1	6,182	6.2
계	100,033	100.0	100,188	100.0	100,284	100.0	100,339	100.0	100,378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총110,714km로 1970년 40,244km에서 약 2.75배 증가
 - 고속도로 4,767km, 일반국도 13,983km, 지방도 91,964km로 구성
 - 인구당 도로연장은 2.15km/천인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고속도로IC에서 30분이내 접근가능 면적이 1970년 14.3%에서 2015년 70.7%로 확대

[표 1-6] 도로 현황

구분	연장(km)	포장율(%)
고속국도	4,767	100.0%
국도	13,983	99.7%
지방도 등	91,964	91.8%
계	110,714	-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8. 도로현황통계표(연도별 도로현황).

- 철도 연장은 2018년 기준 총 5,444km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만, 전철화율은 80.4%로 비교적 높은 수준
- 여객 수송실적은 2018년 기준 157백만 명/년, 화물 수송실적은 30.9백만 톤/년

[표 1-7] 철도 총연장 및 복선화·전철화율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전체연장(km)	5,444	29,190	33,440	15,848	7,457	67,515
복선화율(%)	60.0	56.5	55.4	74.3	49.6	52.4
전철화율(%)	80.4	57.4	60.7	37.9	73.5	66.4

자료: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8. 철도통계연보
UIC Statistics. 2019. 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

- 항만 시설은 2018년 기준 무역항이 31개, 연안항이 29개 등이며, 전국 무역항 항만 시설 확보율은 100%, 하역능력은 1,188백만 톤
- 공항 시설은 2018년 기준 총 15개소로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이며, 2018년 국내·국제 여객 총수송인원은 약 150백만 명, 화물 총수송실적은 4.7백만 톤

[표 1-8] 공항 수송 현황

운항횟수(회/년)			여객(명/년)			화물(톤/년)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885,955	442,964	442,991	150,517,417	75,340,636	75,176,781	4,715,192	2,336,236	2,378,956

자료: 한국공항공사(<https://www.airport.co.kr>) 공항별 통계

- 2017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1%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3.6%
- 상수도의 1인1일당 급수량은 341l이며 수도관 총연장은 209,034km
-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4,072개소로 총 시설용량은 26,107천 m³/일

[표 1-9] 국토기반시설 현황(2018년)

- 도로 : 110,714km
- 고속도로 : 4,767km
- 항만 : 무역항 31개, 시설 확보율 100%
- 공항 : 15개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 철도 : 5,444km
- 철도 : 전철화율 80.4%, 복선화율 60.0%
- 상수도 보급률 : 99.1%(2017)
- 하수도 보급률 93.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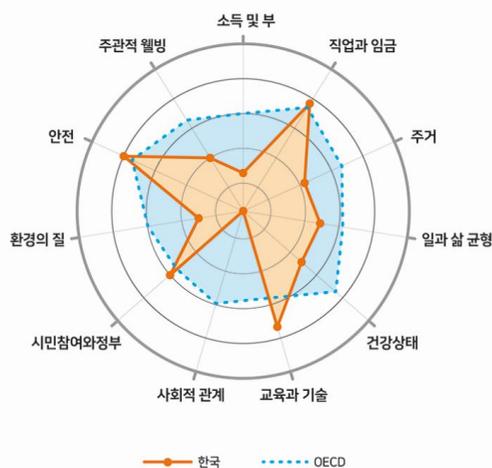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8,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삶의 질 체감 수준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 체감도를 측정한 결과(2017)⁴⁾, 우리나라는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일과 삶 균형, 커뮤니티 등이 OECD 평균을 하회
 -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Better Life Index(BLI) 순위는 29위이며, 삶의 만족도는 5.9점, 전체적인 삶의 점수는 3.8점으로 30위 기록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안전, 교육, 기술 관련 점수는 OECD 평균을 상회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의료, 교육, 녹지,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국내 시·도 지역 간 체감 격차 심각
 - 주거환경 요소 중 시·도 지역 간 격차(체감)가 가장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로 불만도 최고(경북)-최저(울산)간 149배의 격차를 보이며, 교육 55배, 대기오염 47배, 녹지 38배, 문화시설 37배 등의 순으로 체감
 - 치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시·도 간 격차가 14배(경기 2.47-광주 0.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림 1-5]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OECD와 한국의 삶의 질 지표 비교〉



자료: OECD Statistics. 2017

〈주거환경 요소별 불만족 비율〉

항목	최고	최저	시·도간 체감 격차
의료시설	10.49(경북)	0.07(울산)	149배
교육	8.25(전남)	0.15(광주)	55배
대기오염	3.29(서울)	0.07(광주)	47배
녹지	5.39(경북)	0.14(울산)	38배
문화시설	11.64(경북)	0.31(울산)	37배
...
치안	2.47(경기)	0.17(광주)	14배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7년 주거실태조사.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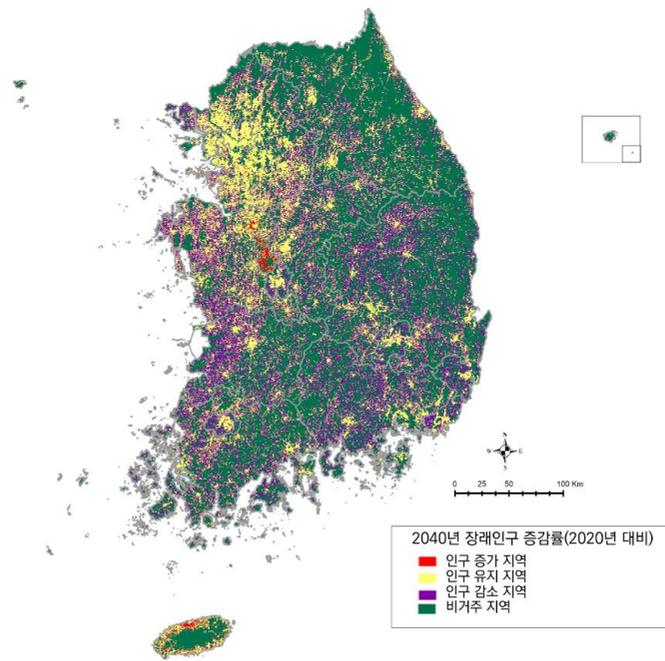
4)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BLI(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ow's life?』를 발간. OECD Better Life Index(<http://oecdbetterlifeindex.org>)

2. 여건변화 전망

□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정책 방향의 전환 불가피

-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치를 기초로 2040년 장래인구분포 분석결과, 2019년 현재 국토의 거주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81.03%,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8.96%로 전망⁵⁾

[그림 1-6] 2040년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전망



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초)를 토대로 분석, 격자별 현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2040년까지 격자별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이 결과를 시·도 내 격자별 장래인구 분포 가중치로 활용하여 2040년까지 500m 격자단위 인구 변화를 예측
자료: 이보경, 2019. 2040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 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5%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1인 가구⁶⁾,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와 가족형태 변화 예상
 -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거시적·총량적인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삶의 질·건강·안전 등 미시적·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상

5) 인구증가 지역은 2020년 대비 인구 규모 20% 초과 증가, 인구유지 지역은 증감률이 -20 ~ 20% 사이, 인구감소 지역은 2020년 대비 인구 규모가 20% 초과하여 감소가 예측되는 지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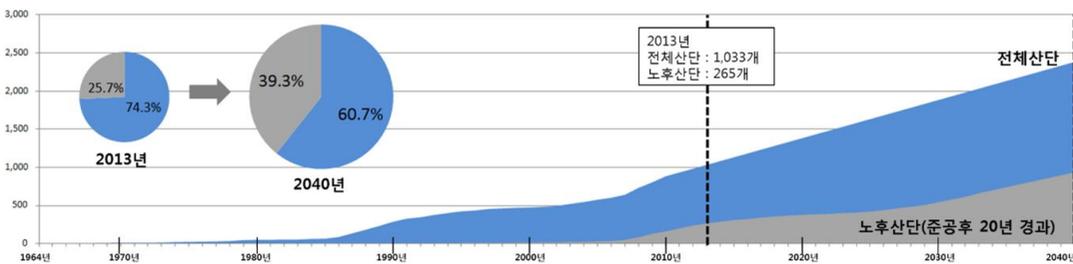
6) 2040년 1인 가구는 36.4%,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4.2%로 전망(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노후화

-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8.12)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30년 2.3%, 2040년 1.5%로 지속 감소 전망⁷⁾
 - 1970~8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 저성장의 지속으로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프라 신규투자보다는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그림 1-7] 2040년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

노후산업단지 전망(준공 후 20년 경과, 2040년)



주: 2018년 기준 노후산업단지 비중은 31.2%를 차지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미래 국토발전전략 수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 2017년 기준 전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소유 상위 1%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편중이 고착화되는 추세⁸⁾
 - 생활SOC 등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

7) 국회예산정책처, 2018.12.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8)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로 지구적 차원의 공조 필요
 - World Economic Forum(2019)⁹⁾은 미래 발생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로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적응실패, 자연재해, 인공 환경 재해 등 환경요소를 선정
 - 에너지와 자원부족, 온실가스 국제기준 준수 강화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이용방식의 변화 요구가 증대할 전망
- 삶의 질·환경·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국토이용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예상
 - 국민의식조사(2018) 결과,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삶의 질, 친환경 등을 중시해야할 가치로 선정

[그림 1-8]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국민의식조사(2018)



자료: 국토연구원. 2018. 국민의식조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기술 발달은 경제사회와의 융합, 국토관리와 생활공간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전망¹⁰⁾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노선 조정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행방식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책요구 수준도 높아질 전망

9) WEF(2019). The Global Risks Report 2019 14th p.5

10) 가트너(2019)는 향후 3~5년간 큰 영향력을 미칠 데이터 및 분석기술 10대 트렌드로 증강분석, 증강 데이터관리, 지속적 지능화, 설명 가능한 AI, 그래프, 데이터 패브릭, NLP 및 대화형 분석, 상용AI와 머신러닝, 블록체인, 퍼시스턴트 메모리 서버를 선정

-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 출현으로 전 국토의 변화 예상
- 새로운 정책 수요와 기술의 결합으로 혁신적 국토이용방식의 확산
-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문화향유 요구, 공유경제 행태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
- 기술 발달로 인한 거리 단축, 산업입지 및 주거·이동·경제활동에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등 국토이용방식의 변화 확산 전망

□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합적 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 증가 전망
- 중국의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조성 등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모델이 형성될 전망

□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 요구

- 지방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자치분권체제 확립으로 중앙-지방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확대
-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행정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확산 전망
-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 요구 등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 실현 전망
- SNS 등 소통도구를 활용하여 국정 및 지자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가 확산 되는 등 참여와 소통 기반의 거버넌스체제 운영 확대

3. 국토의 문제와 과제

□ 국토균형발전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 저조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성과 및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대한 체감 제고 필요
 -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교육·의료, 교통여건 등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 미흡으로 생활 만족도 저조¹¹⁾
 -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2018), 수도권-지방 간 격차, 양극화와 주거격차 등 격차의 문제(52.0%)를 국토의 현안문제로 가장 높게 인식

[그림 1-9] 국토의 현안 문제: 국민의식조사(2018)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와 지역 간 격차,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강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필요

□ 인구 감소·저성장에 대한 국토정책 차원의 대응방안 필요

-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
 -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 고령자 가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사회통합형 국토정책 추진전략 마련 필요

11)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2017, 국토교통부) : 교통환경(44.5), 여가활동 환경(45.2), 편의와 의료서비스 환경(49.9), 교육환경(50.9)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는 52.4점 수준(100점 기준)

- 저성장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와 유희토지·시설의 적절한 이용, 노후인프라 정비·재생 등 국토이용·관리 필요

☞ 성장과 개발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국토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의 발굴·대응

□ 인간다운 삶, 품격있고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난개발과 환경훼손,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소 증대로 국민건강·생명·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심화와 사회적 불안감 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재난·재해위험 및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토 조성 요구 증대
 - 환경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게 국토를 관리·보전, 에너지와 자원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감 및 압축개발 요구 증대
- 소득수준 향상, 근무시간의 단축, 삶의 질 중시 등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요구 증대
 - 국민 생활·정주환경의 질적 격차 해소로 국토 어디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인 국토기반 조성 필요
 - 생활·정주 환경과 자연 환경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 품격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국토관리방안 모색

☞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국민 요구의 증대를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품격있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과 국토 환경 조성

□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국토 이용·관리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발달로 국토 분야에서 스마트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산업생태계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사회 분야 혁신 확산으로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국토·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지능형 국토관리 실현
 -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국토공간의 지능화 촉진

☞ 초연결·화지능화시대에 걸맞게 과학기술 기반의 국토이용 및 관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와 분권형 거버넌스 형성 필요성 증대

- 지역산업생태계 구축과 관광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미래 국가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및 관광혁신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혁신 성장과 지역발전 기회로 활용
 -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자,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활성화 촉진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개성 있는 지역 자산을 토대로 자율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요소로 활용하고, 국토이용·관리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역산업생태계 구축과 관광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및 분권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글로벌 국토·도시경쟁 여건 미흡

- 매력적인 도시·생활기반 취약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저조한 실정
 - 높은 집값¹²⁾, 교통혼잡 등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매력있는 생활 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전략 필요
 -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륙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가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필요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토 조성 필요
 -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한편,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추진
 - 장기적으로 신북방, 신남방(아세안)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대륙연결형 국토 실현을 위한 한반도 통합 인프라와 제도 정비방안 모색 필요

☞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공간 조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 매력있는 도시·생활공간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발전 도모

12) 한국의 주택구입 부담비중은 24.7%로 일본(23.1%), 싱가포르(16.4%)보다 높음. Moody's. 2018. Moody's: Variations in housing affordability across Asia mean varying levels of risk for securitization transactions.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장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그림 11-1] 계획의 기초: 비전, 목표, 전략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현장)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UN SDGs), 국토계획현장)

-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생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토자원과 경관관리를 통한 국토매력도 제고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 네트워크 효율화와 고속서비스로 전국을 평균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지능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국토계획현장)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대륙연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글로벌 국가경쟁기반을 강화

3. 6대 추진전략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해 지역 간 협력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
 -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마련, 교통인프라·정주여건 등 지원기반 개선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수도권은 지방과의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대도시권은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중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권은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속도감있게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
 - 농산어촌은 생활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매력 제고로 유입·체류 인구 정착을 확대하고, 낙후·위기지역 지원 내실화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 기존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성장 공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 조성·확산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추진
-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쇠퇴관광지·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도심내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 등 도시의 적정개발과 관리,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회통합형 생활공간을 조성, 보육·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의 질적 확충,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주거기준 검토 등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 방재체계 구축, 지역별 통합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국토방재기반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건축물·교통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 국토생태축 보전·복구, 도시내 녹색인프라 확충 등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오염·방치공간 재생 추진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수자원, 해양자원, 산지자원, 에너지자원 등 국토자원 특성을 고려한 미래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국토 경관 및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의 경관관리 추진, 일상생활 경관 향상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 자율주행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하이퍼루프 등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후 인프라의 적기 개량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고도화
 - 어린이·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교통 이용플랫폼의 통합(MaaS¹³)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
-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등 성장 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조성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과 블록체인 도입 등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신북방·신남방 정책, 도시개발모델 수출 등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13) Mobility as a Service: 타 교통수단 서비스와의 통합 등을 통해 중간에 끊김 없이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

제2장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1. 기본 방향

-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공간을 형성
 - 획일적·고정적 공간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교통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실생활을 고려한 국토공간 대응 강화
 - 행정구역 단위의 폐쇄적·단절적 국토공간에서 탈피하여 경계의 유연화와 무경계화(borderless)가 진전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간정책으로 체감도 제고

[그림 11-2] 국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예시



- 국토의 개발에서, 국토의 관리·활용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을 반영
 - 성장과 개발시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응
 - 국민의 생활편의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 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해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등 국토공간 형성·관리

[그림 11-3]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국토공간 인식 변화



- 인구 감소·저성장과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토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회복력이 높은 국토공간 구조 개편 및 관리 전략을 마련
 - 초연결·지능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리적 경계의 유연화와 광역화가 확대될 전망으로 IoT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

2.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 이념

- 다양성과 연결성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
 - 다양성(diversity)은 다양한 공간 및 추진주체,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지역성을 유지·강화
 - 연결성(connectivity)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대

□ 국토공간 형성의 추진 전략

- 혁신적 지역발전
 -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 주요 거점 간 광역·순환형 고속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연계 강화 유도
 - 지방대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적정한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중심 국토공간을 조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산업 개발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재정립
- 자율적 지역발전
 - 지자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선택권을 강화
 - 일자리와 교통시설 확충, 생활SOC 확충 등에서 지역 주도의 공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국토공간 형성 촉진·지원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 공급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녹지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개편 유도
- 협력적 지역발전
 - 인구감소와 저성장, 분권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구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
 - 복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주요 정책의 연계, 필수시설의 공유 등 다양한 도시-지역 협력권을 육성

[그림 11-4]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공간 형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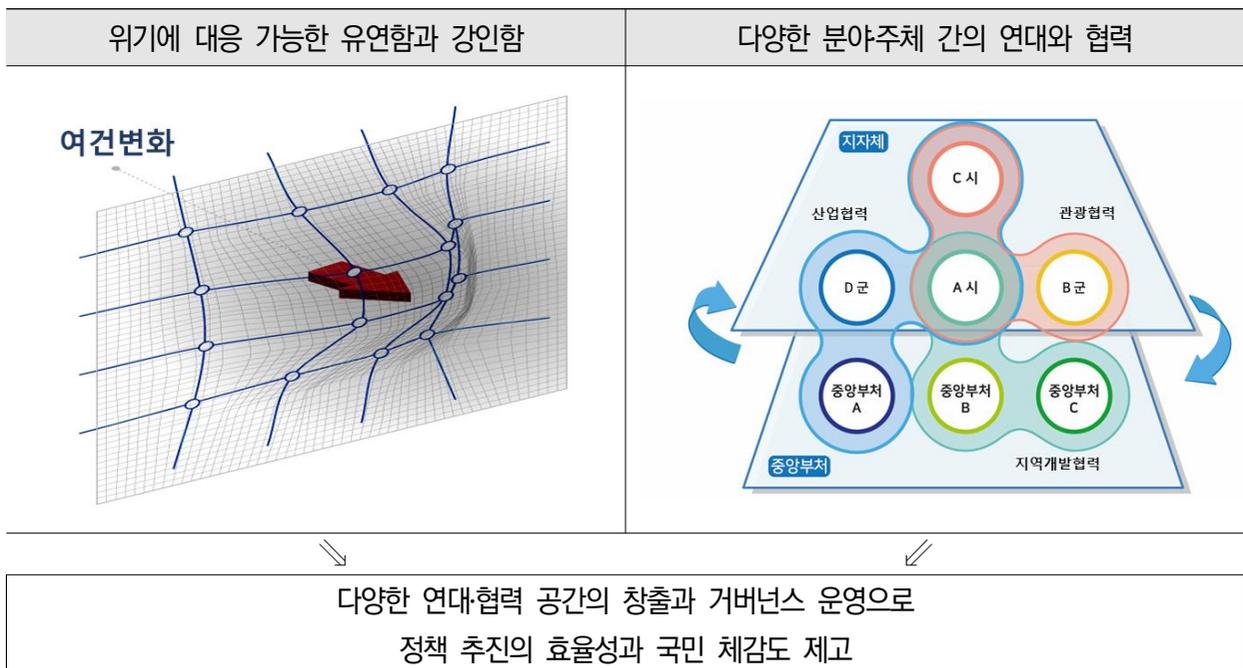
3. 국토 공간의 미래상

□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 창출과 거버넌스 운영

- 국민 생활공간과 정책공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교통, 산업, 관광, 환경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로 최적의 자율적인 협력권역을 형성·촉진함으로써 상생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광역교통 관리,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이익 극대화, 광역관광개발 및 루트 공동개발·운영 등 정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연계·협력권 형성 촉진·지원
- 유연한 국토공간구조 재편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 국토공간 구조 재편을 촉구
-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효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다원적 거버넌스 운영으로 사업중복 저하 및 재정의 효율적 이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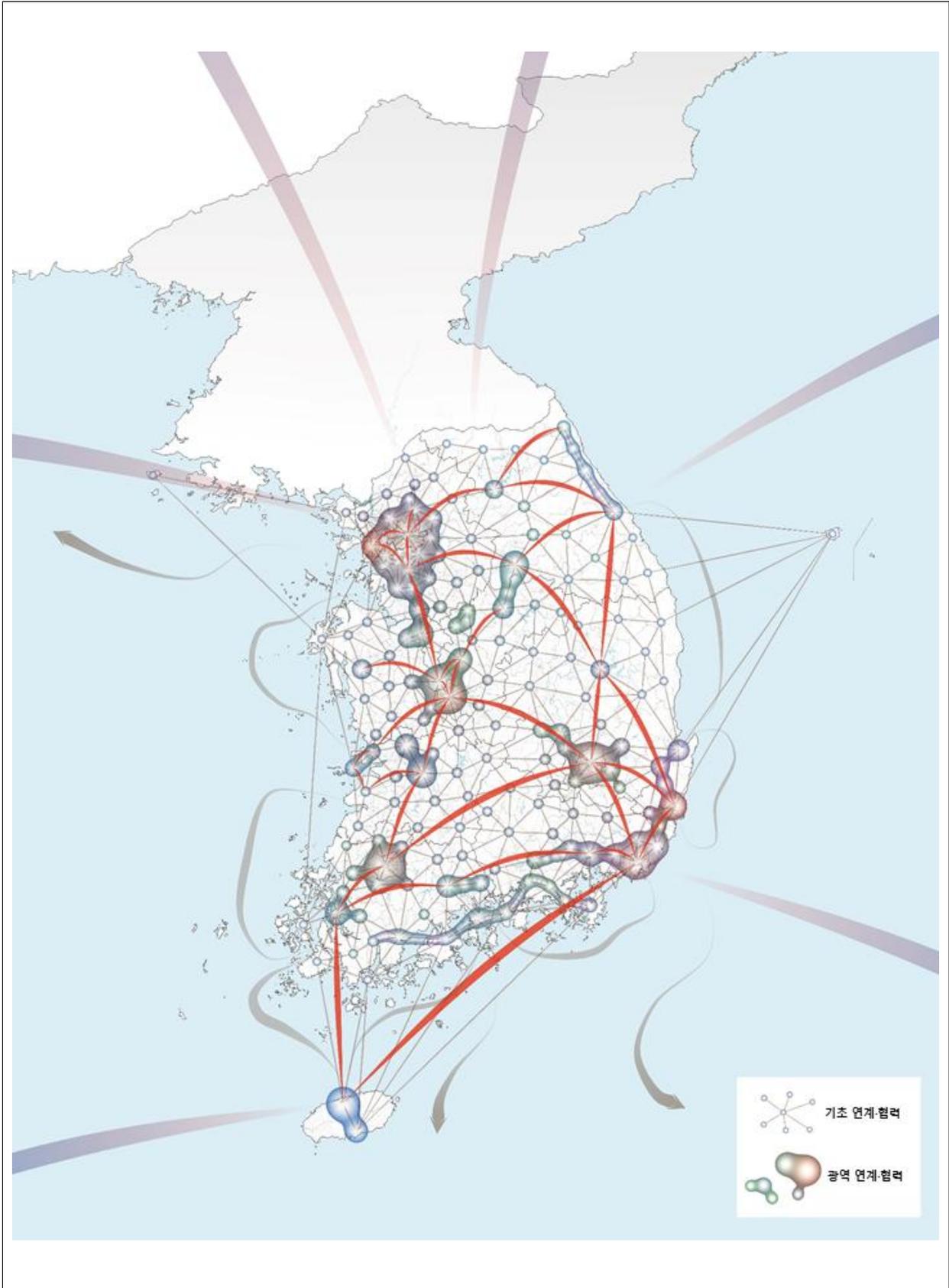
[그림 11-5] 국토공간 형성에 필요한 요소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 국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탄탄한 연대를 구축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간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이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구축
- 지역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제고

[그림 11-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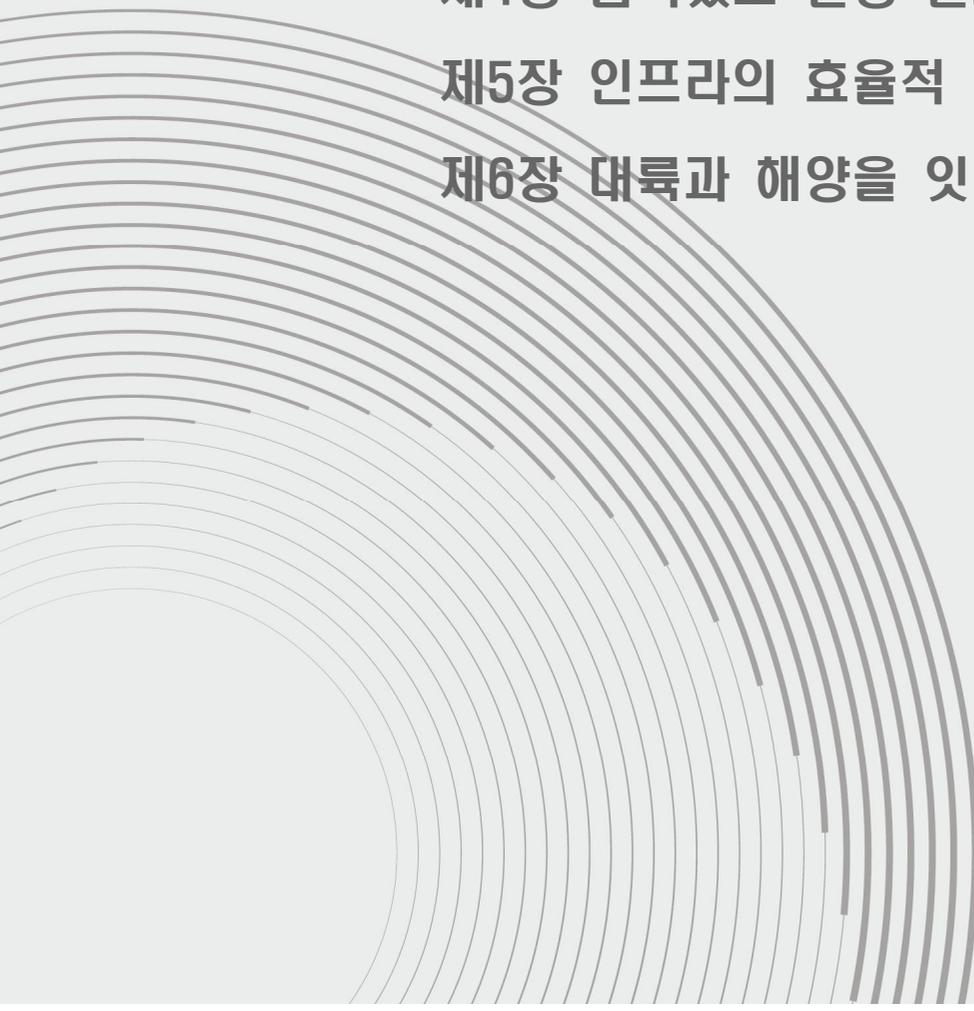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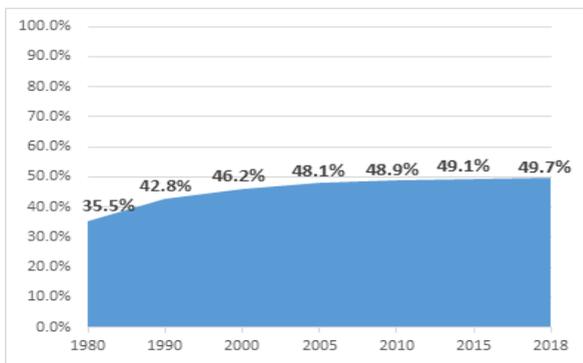
제1장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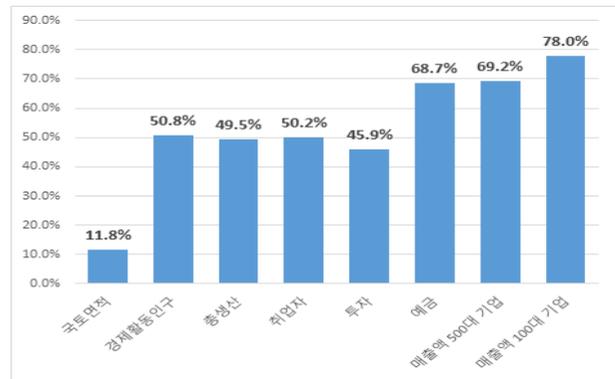
□ 지역 간 불균형의 지속과 자립적 발전역량 미흡

-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등 총량적 격차의 폭은 완화 추세¹⁴⁾이나 경제력·질적 격차는 여전
 - 경제활동인구, 취업, 투자 및 기업 활동¹⁵⁾ 등의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각
 - 공연예술, 전시 등 문화향유 기회¹⁶⁾와 응급의료 수혜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은 질적인 격차는 지속

[그림 Ⅲ-1] 수도권 인구집중도 추이



[그림 Ⅲ-2]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도



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에 포함

자료: 통계청. 2016. KED 빅데이터.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 수도권 내 시·도 및 비수도권 시·도 간의 격차 심화 등 새로운 지역 간 격차가 발생
 - 시·도 간 격차를 측정한 지니계수(2008~2015)에 의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0.314에서 0.295로 완화되나, 수도권 내 시·도 간 및 비수도권의 시·도 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¹⁷⁾

14) 수도권 인구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18년 현재 49.6%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완화되어 증가세 둔화

15) 한국기업데이터(KED) 빅데이터 기준 2016년 매출액 100대 기업의 78%, 500대 기업의 6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해 100대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높아졌음

16) 문화행사 관람률(2018) 대도시 85.2% > 중소도시 82.1% > 읍면지역 71.7% (문화체육관광부)

17) 수도권내 사도간 지니계수는 2000년 0.007에서 2015년 0.06으로, 비수도권내 사도간은 0.17에서 0.18로 격차가 확대

- 지방자치 실시 20여 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하며,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저성장·양극화 등 위기의식이 확대

□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행정수요 증대와 대응 미흡

- 개별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적인 차원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이나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지역발전 효과로 이어지는데 한계
-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 도시권 발달로 서비스 공급범위가 광역화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광역적 국토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지역 간 협력 요구 증대

□ 국가균형발전거점의 일부 효과 가시화, 정주 여건은 취약

-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등 1단계 완료, 산·학·연 유치 등 2단계 추진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기업 유치 등 일부 지역발전효과 가시화¹⁸⁾

[표 Ⅲ-1]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시책 추진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2007-2015) · 중앙행정기관 이전 · 도시인프라 구축	(2016-2020) · 자족기능 확충 · 도시인프라 확충	(2021-2030) · 자족기능 완성 · 도시 전체 완공
혁신도시 (10개)	(2007-2012) · 도시 건설 · 이전공공기관 정착	(2013-2020) · 산·학·연 정착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 및 연계·협력	(2021-2030) · 혁신확산 단계 -혁신도시 내 전략산업 성장동력 확보 -혁신클러스터 확산
새만금	(2011-2017) · 내부개발 착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내부매립공사 추진	(2018-2022) · 내부개발 본격화 -기반시설 공사 -1단계 내부개발 착수	(2023년 이후) · 1단계 내부개발 완료~ 2단계 내부개발 지속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마당(<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즈2(<http://innocity.molig.go.kr>)

- 세종시, 혁신도시를 비롯한 균형발전거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저조¹⁹⁾

18) 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상 153개 중 153개 이전 완료('19.12), 입주기업 증가('17.12, 412개 기업 → '19.6, 1,017개), 정주민구('17.12, 17.4만명 → '19.6, 20만명)와 가족 동반이주율('17.12, 58.1% → '19.6, 64%)도 증가

19) 세종시의 생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교육(49.9%), 대중교통(40.3%) 개선이 필요하며, 혁신도시는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가 52.4점에 불과. 혁신도시의 경우 대중교통(44.5점), 여가활동(45.2점), 의료서비스(49.9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국토교통부, 2017)

-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주변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구도심 공동화 및 활력 저하, 주변도시와 갈등 발생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²⁰⁾

□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서비스 접근 열악

-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청년층 중심으로 선별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과소화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
 - 최근 귀농·귀어·귀산촌 인구의 소폭 증가로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고령화와 인구과소지역 발생의 문제는 상존²¹⁾
- 소득 측면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
 - 201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4.8%인데 비해 어가소득은 79.8%²²⁾, 임가소득은 56.2%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발생²³⁾
- 생활SOC 및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
 -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이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접근성 하위 20%의 서비스 취약지역에 175만 명이 거주²⁴⁾

□ 산업위기지역, 생활SOC 취약지역 등 국가적 관심지역 대두

- 성장촉진지역 외에 산업·고용, 생활SOC, 환경 등 새로운 위기지역이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발굴과 대응책 마련 필요
 - 조선·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 생활SOC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²⁵⁾

20) 세종시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2013-2017)을 보면 충청권(61%), 수도권(28%), 타 권역(11%)이며, 혁신도시의 경우(2012-2016)는 동일 시군(59%), 수도권(28%), 동일 시도(13%), 타 시도(8%)로 나타남(국토연구원, 2018).

2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도시지역(13.1%)에 비해 농촌지역 22.4%, 특히 면(面)부는 29.5%로 10명 중 3명이 고령자이며, 가임 연령대 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소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송미령외, 2016. 농촌 취약계층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농가대비 어가의 총생산액은 적으나 소득 및 가구당 생산액은 높아 생산성은 양호한 편(한국어촌어항공단, 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연구)

23)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1995년 95.7%에서, 2005년 78.2%, 2018년 64.8%로 격차가 지속 확대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의 농가소득 추정자료(2019.4)를 토대로 산정)

24) 전체 1,413개 읍면 중 하위 20%인 282개 읍면이 '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선정. 송미령외, 2016. 128-131면.

25) 2019년 현재,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6)은 70개 시군(강원(8), 충북(5), 충남(6), 전북

2. 여건 변화와 전망

□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경쟁 심화

- 대도시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중추기능과 인적자원, 시장,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하여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대도시권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경제활동의 엔진이자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과 집행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서 공공정책을 통한 개입에 이상적인 공간 수준²⁶⁾
-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대도시권이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단위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대도시권 상호 간에 경쟁이 심화
 - 대도시권은 거대 중심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공간으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특성을 보유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외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을 육성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
 - 영국의 도시권(city region), 프랑스의 그랑파리 광역시(Grand Paris), 독일의 유럽 대도시권(EMR), 미국의 메가리전, 일본의 대도시권, 중국의 도시군 등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 확립

-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로 전환
-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촉진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²⁷⁾ 위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요구
 - 지방자치의 경험과 자산이 축적되고,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노력 증대

(10), 전남(16), 경북(16), 경남(9)), 고용위기지역(「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영 제29조)은 7개 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8 의2)은 5개 지역(울산 동구, 경남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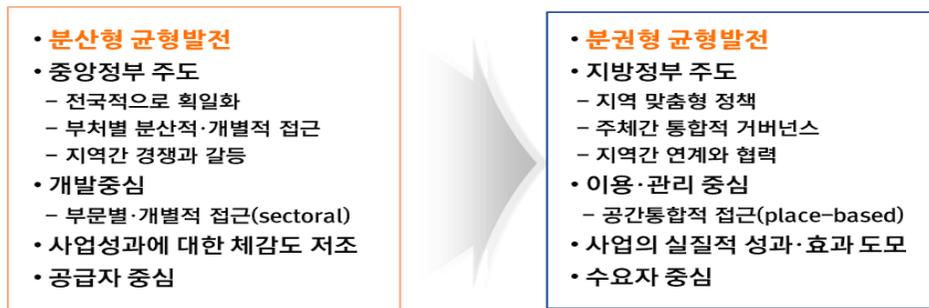
26) Rodreguez-Pose, Andres. 2009. Are City Regions the Answer? in the Future of Regional Policy, The Smith Institute.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에서는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자율성 확대

-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성과의 한계와 반성을 토대로, 향후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추진이 확대될 전망
-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자율적·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가 높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요구 증대

[그림 III-3]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9~2023)」은 분권, 포용, 혁신 3대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발전적 복원,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

[그림 III-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구분	과거 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지역 주도		
정책목표	지역특화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특화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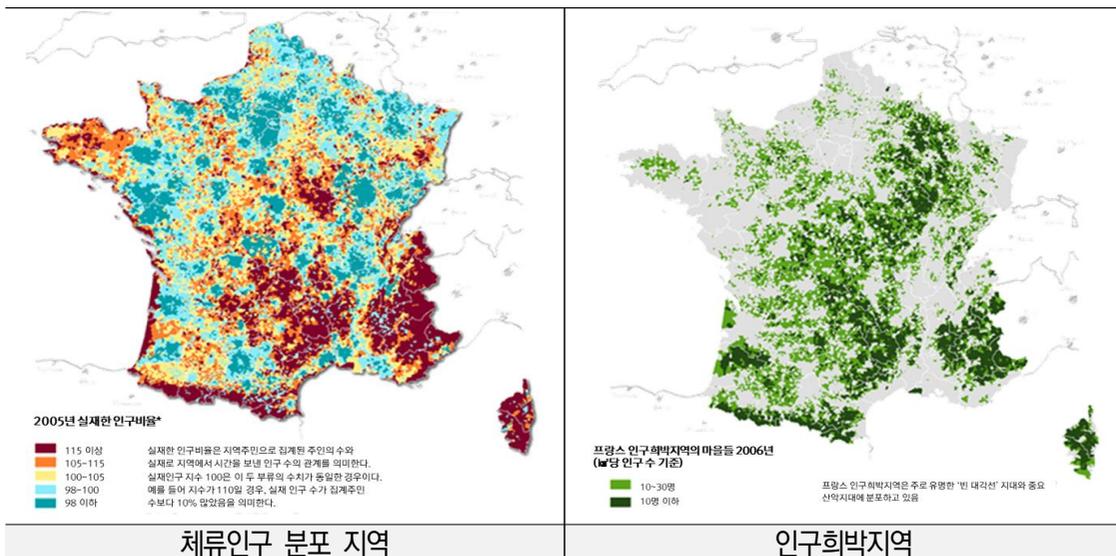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 2면.

-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응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동 비전과 도시계획의 협력적 수립,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요구 증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광역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운영이 확대될 전망
- 교통, 관광, 도시계획, 생활SOC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초하여 공동사업 및 거버넌스체계 운영이 확산될 전망

□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과 농산어촌 체류 수요 증대

- 워라벨(work-life balance), 반농반X(半農半X)²⁸⁾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귀농·귀촌 증가 추세
 - 귀촌인구 10명 중 4명은 20~30대가 대다수로 직장과 주거 목적이, 50~60대는 은퇴 후 전원·여가 생활 목적으로 조사²⁹⁾
 - 귀농·귀촌이 기존 거주지 인근의 근교 농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원격 지역은 공동화되고 근교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양극화 심화 전망
 - 귀산촌 가구, 은퇴한 고소득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치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산촌으로 모여면서 산촌공동체 발달 전망
-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지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여가·휴양 등 체류 수요 증대
 - 맑은 공기, 자연치유 등 산지자원의 무형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여가문화 활성화
 - 저밀도 경제 지역인 농산어촌이 여가·휴양 등 쉼터로서 기능이 강조되면서 도시와 농촌에 동시 거주하며 교류·체류하는 인구 증가 전망

[그림 III-5] 저밀도 경제 지역의 예시: 프랑스의 인구희박지역 및 체류인구 분포



자료: 미셸 루소(Michel Lissault). 2010. 국토예측 2040 제3호: 7개의 공간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현황 조사.

28) 반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반은 농업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
 29) 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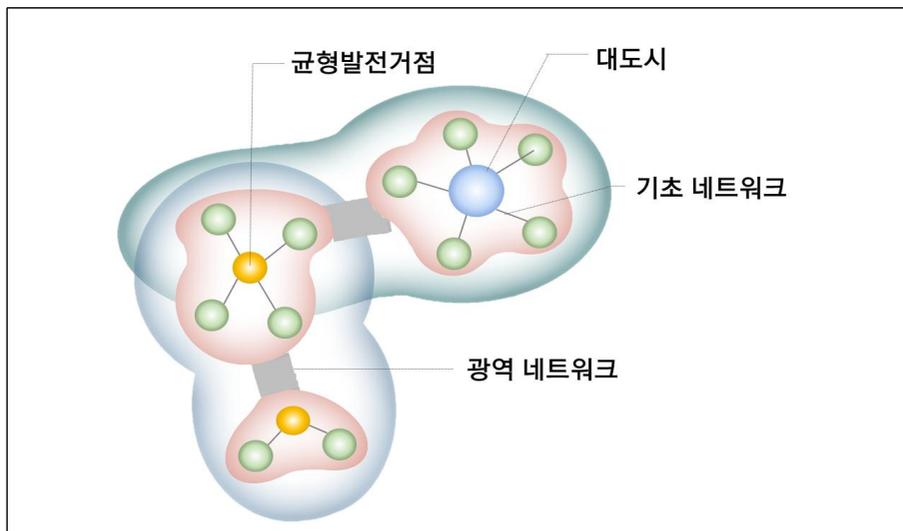
3. 주요 정책과제

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

- 행정구역을 초월해 특정 권역이나 경계의 고정 없이 산업, 관광, 교통, 환경, 생활,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 중앙정부는 협력 가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의 원활한 연계를 보조, 협력 분야에 따라 때로는 주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적극 협조
 - 협력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여건을 조성
- 인구규모, 산업연계,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분야 별로 다양하게 연대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
 -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광역 관광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물관리·생태축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환경 보전, 지역 간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검토
-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고차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주변지역과 생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지에서 공항, KTX역 등 광역교통시설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공유 및 환승체계 강화

[그림 III-6]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 지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광역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 광역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개 이상의 시·도가 연합하여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표 III-2] 광역 연계·협력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예시)

구분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		해당 지자체
산업경제	·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부산, 울산, 경남 등
	·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		인천, 서울 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 (대덕특구, 오송 등)		충북, 대전, 충남 등
	·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인천공항-김포공항 연계경제권		인천, 경기 등
환경	수자원	·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부산, 울산, 경남 / 서울, 경기 등
		·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한강 수계권, 대청호, 충주호 등)	충북, 대전 등
		· 한강 하구의 공동 관리 및 개발	경기, 인천 등
	대기	·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미세먼지 공동 대응) · 광역적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수도권 상설기구 설치 추진	울산, 부산, 경남 등 인천, 서울, 경기 등
문화관광	관광	·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전북, 전남, 광주
	역사, 문화	· 충청 유교문화권 조성 사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부산 등
교통인프라	도로	·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 연계 등)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북 등
		·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전북, 전남, 서울 등
		·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대구-광주 달빛동맹사업)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	충북, 강원 등
	철도	·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GTX 구축 및 연계 등)	서울, 인천, 경기 등
		·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부산, 광주, 전남 등
		·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항공	·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대구, 경북 등
	해운	·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주, 부산, 강원, 인천 등
복합	·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 8개 시도	

주 : 지자체 제안사업은 기획단계로 구체화되지 않음

□ 지역 연계·협력 지원기반 구축

- 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와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계획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적·효율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³⁰⁾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 기관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를 활용³¹⁾
- 중앙정부는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광역적 행정수요와 신산업 도입, 현안 문제에 유연한 대응을 지원
 - 교통, 산업, 환경 등 지역협력 분야의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지역과 협력하여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
 - 중소도시 연계형 : 기업-대학-혁신기관 간 연계 강화, KTX·공항 등 교통거점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 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강화
 - 관광·휴양자원 연계형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화 및 체류인구 공동 유치 추진 등(광역관광루트 구상과 연계)
 - 필요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등 광역적 연계·협력 지원이 가능한 기관 활용

[그림 III-7] 지역 간 연계·협력 유형



자료: 국토교통부, 20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30) 단일한 유형의 기관 구성으로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및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차별화된 주민수요 반영을 위한 자율적인 기관 구성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조, 제3조, 제176조~제18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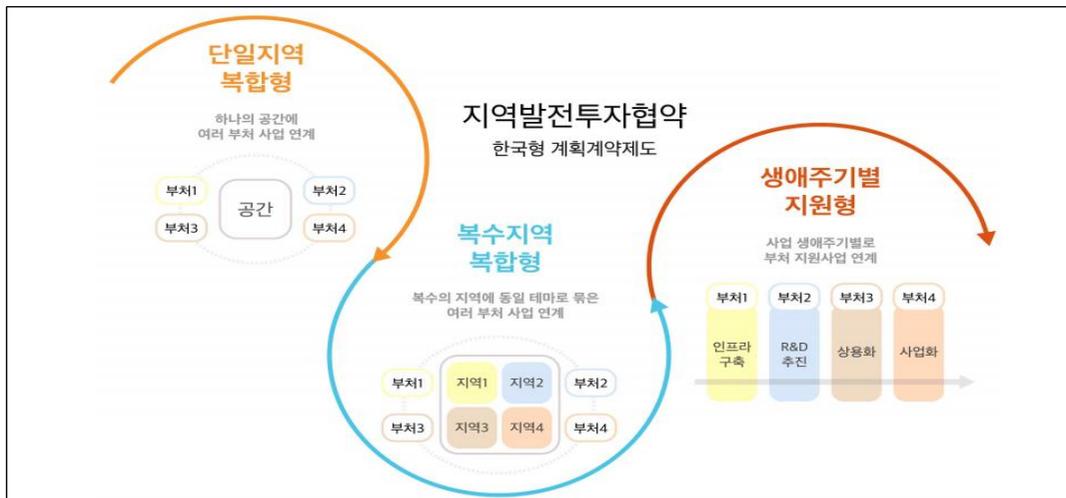
31)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로 행정협의회 결성을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47조 및 제152조)

-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과 정비
 - 경제, 교육 등 지역거점기능 강화, 장거리 지역 간 고속 교통인프라 구축, 주변지역과 광역·순환형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행정시스템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능화를 통한 편의 향상, 교통인프라 연계의 스마트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

□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관리체계 마련
 -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기관으로 지역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
- 지역 주도로 지역혁신 관련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연계·조정·실행하기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
 -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토대로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화 추진
-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전략 마련·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확산을 도모
 -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부처 묶음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그림 III-8]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사업 유형 예시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발전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적 현안 수요를 파악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자율적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관리를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 교통시설·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대기질·수질 등 환경보전과 관리,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 생활인프라 관리를 통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도약
 -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수도권에 첨단산업 및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방대도시권의 증추거점 및 연계 기능 강화

-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증추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강화
 - 도시재생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신산업 도입 등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의 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
 -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등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교육, 문화 등 생활 SOC 시설을 접근성 고려해 공급·복합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방대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순환·고속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대도시권의 경제기반 향상
- 지방대도시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미래형 협력 도시권 구축
 - 시·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대도시와 광역지자체를 연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촉진
 - 지역산업 간 연계와 상호 보완성 강화를 위해 유사한 지역혁신지원기관³²⁾ 간 연계와 통합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광역 단위로 특화형 플랫폼 공동 구축·운영
 - 지방대도시가 주도하며 민간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광역 추진기구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대도시는 주변 지역과 교통, 행정서비스 등 통합적인 정책공간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

□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 거점은 지속 육성
 - 행복도시는 국가행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연계 강화와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로 완성
 -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 교통편의 향상, 문화·교육·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이주 확대 등 정주민구 증가 추진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여성·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등 지역발전 공헌사업 지속 확대

32) 산업부(지역특화센터, 지역사업평가단), 중기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전략산업기획단), 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지원단,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지역혁신센터(교육부) 등

-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역으로 육성
-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자치단체와 협의해 산업단지·연구개발(R&D), 문화, 교육, 주거타운 등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고루 갖춘 자립형 도시로 육성
- 균형발전거점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권으로 육성하여 지역성장 및 생활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
- 지역 연계·협력권 내 주요 혁신자산을 연계한 자생적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자체 간 생활서비스 및 교통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지방의 재도약을 촉진하는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산·학·연 유치 및 민간투자 활성화, 명품 도시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
- 교육, 의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력 있고 쾌적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에너지, 안전,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 및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

계획지침 Ⅲ-1-2

- 시·도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의 문제나 광역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인구 감소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이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계획의 수립 및 공동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촌을 모든 국민에게 매력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OECD(2019)는 사람중심의 저밀도 지역경제 전략을 새로운 농촌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정책 원칙을 제시

[표 III-3]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과거의 패러다임	새로운 농촌패러다임 (2006)	농촌정책 3.0 (사람중심의 농촌개발접근법)
정책 목표	평등화	경쟁력 제고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웰빙
정책 중점	한 개의 지배적 부문에 대한 지원	경쟁력에 기반한 다수 부문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저밀도 지역경제
정책 도구	기업 지원금	자격을 갖춘 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통합적 농촌개발 접근법: 민간부문, 기업, 제3의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스펙트럼
정책 접근법	균일하게 적용된 하향식 정책(Top-down)	상향식 정책(Bottom-up), 지역전략	다수의 정책영역으로 통합된 접근법

자료: OECD. 2019.9. 농촌정책 3.0 사람중심의 농촌정책.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 대응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통합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등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유희화 대응 및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도시·생활서비스 강화로 교류·체류인구 유치 촉진

□ 농촌을 매력적이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

- 농촌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 농촌의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집약하여 조성하고, 이를 배후지역과 연결하여 어디서나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불편 없는 농촌 3·6·5생활권³³⁾ 구축, 농산어촌 내 지역거점과 집단거주마을, 한계마을 등 정주계층별 관리 강화³⁴⁾
 -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충·고도화하여 서비스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33) (30분) 소매, 보건, 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문화, 교육, 의료, 창업 등 복합서비스/ (5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연락체계(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19)

34) 학교, 소방, 관공서 등 공공서비스와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지역거점에는 기초인프라 제공을 위한 개발전략을, 기초 생활서비스가 유지 가능한 집단마을에는 재생전략을 통한 정주환경개선을, 기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한계 마을에는 유희지 관리 등 스마트한 공간 관리 전략 추진(영국 사우스 캠브리지셔의 정주계층별 마을 관리 사례)

- 인구감소지역은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등을 추진하여 기존 기반시설과 유희자원을 최대한 활용
 - 공간의 유희화에 대응하여 농산어촌의 환경을 기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경관·생태 자원을 보존·증진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
- 귀농·귀촌 청년 및 도시 은퇴자 등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비롯해 농촌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유희시설, 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 귀농·귀촌 같은 고정된 인구의 개념을 넘어 여가·휴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
-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비즈니스 혁신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지원
 - 원격의료·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고도화, 스마트화 촉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
 -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순환경제로 전환을 지원하여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

□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촌 발전 유도

- 산촌의 사회적 경제 실현체계 구축으로 산촌 활력 제고
 - 지역주민(원주민+귀산촌인)이 중심이 되어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검토, 산촌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마을별 경관계획에 따라 주택, 도로, 조경 등 산촌개발사업 종합적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 전달, 원격 문화교실·의료지원 등 생활복지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지원

- 귀산촌 정착 지원 강화 및 ICT 기반 산림관광 육성
 - 도시민의 귀산촌 정착과정 지원 및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귀산촌 정착을 지원
 -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한 국공유림 활용,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및 임산물재배단지 등 생산활동기반 제공으로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
 - 국립공원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리와 경영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산악관광벨트 수립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산림관광 자원·정보를 결합하는 산림관광정보 통합플랫폼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어 확대
 -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어촌뉴딜300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 어촌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지원
 - 도로 등 기반시설과 의료·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어인 확대를 위한 귀어·귀촌마을 조성
 - 낙도지역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어업인 의료서비스 강화, 어촌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
-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 해양치유자원 등 新관광·레저 산업 육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 해역별 특성에 따라 권역³⁵⁾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로 개발
 - 마리나항, 해안누리길-자전거길-해안도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우수환경 보유지역에 해중경관지구 지정 추진

35) 수도권(도시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생태), 동해안권(해양레저), 제주권(수중레저) 등 권역을 설정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어촌지역의 혁신 성장 동력 확보

□ 새로운 낙후·위기지역의 선제적 발굴·예방과 맞춤형 지원

- 소득, 환경, 재해 등 다양한 차원의 낙후·위기지역을 국가적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
 - 성장촉진지역, 도서·접경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부처별로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제도를 장소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발전효과 제고
-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취약·위기지역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
 - 산업위기지역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우선지원 등 회복력 강화
-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계획의 역할 재정립
 -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의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확대
 -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계획 중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포함하여 지원 강화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현행 단위사업 수준에서 지역개발계획으로 협약의 범위 확대
 -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별·칸막이식·단년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는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각종 공모사업 등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 공급

- 현재 공급된 생활SOC는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있으나, 낙후지역·비도시지역에도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형평성 실현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체계적 공급을 추진하고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

계획지침 Ⅲ-1-3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기초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정주체계의 집약화와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주체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 인프라 정비, 토지이용의 난개발 방지, 경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활SOC, 산업·일자리·교통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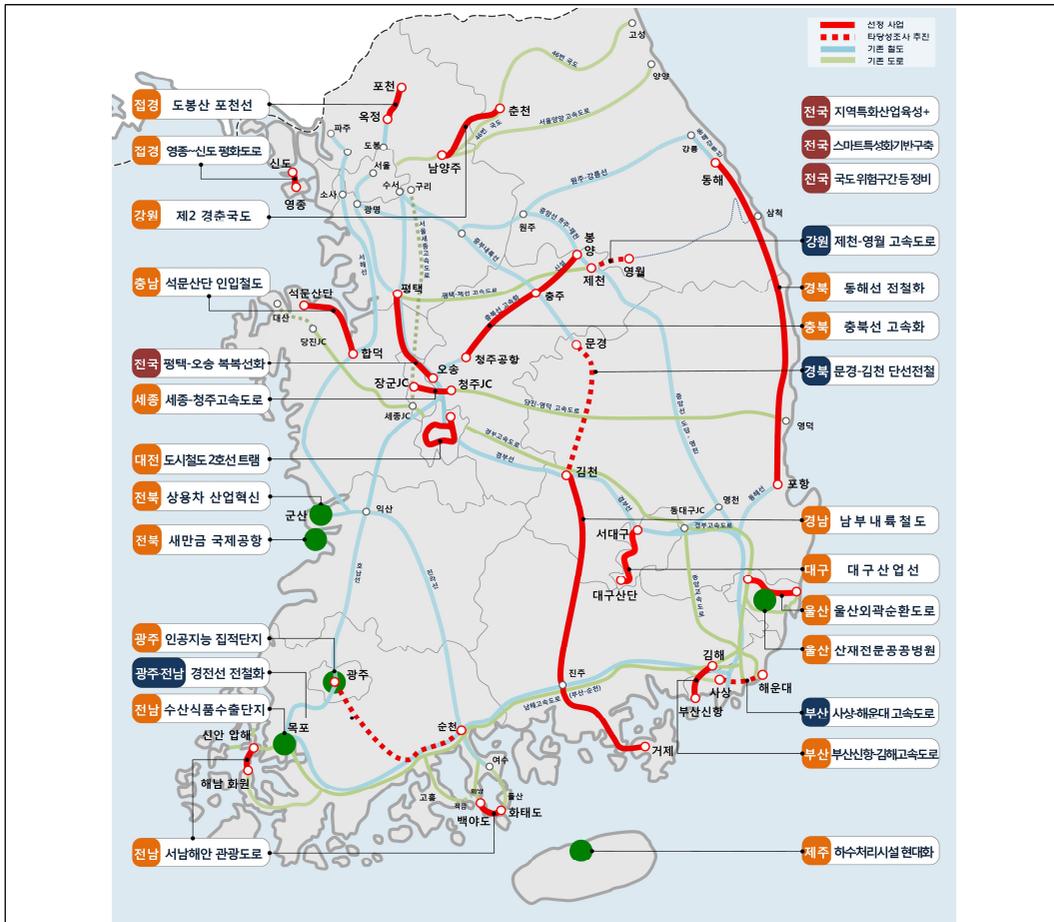
□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체계 운영의 다양화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으로 공공서비스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촉진·확대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등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관을 분야별로 구축·확대하고, 자치발전협력회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체계 운영의 다양화
 -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종합 관리
 - 지역혁신주체(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특별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분원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운영 활성화
- 장소기반형 통합적 지역지원제도 운영
 - 복수의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낙후, 위기지역 등에 대한 지역지원정책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계획적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그림 Ⅲ-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

- 지역 주도의 발전 촉진과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운영 확대

-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지원방식(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등 제도 개편·운영
- 공공과 산업 기능의 지속적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 자립역량 확충
 - 혁신도시,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 거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 및 산업기능의 분산 추진

계획지침 Ⅲ-1-4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낙후·위기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프라 구축 및 전략산업 추진 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를 제고한다.

제2장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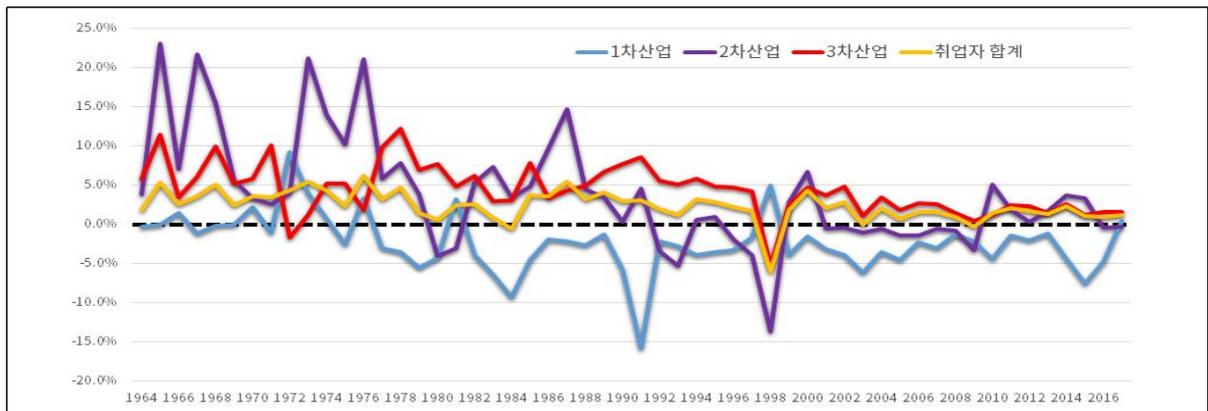
1. 현황과 문제점

1)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지역산업 기반 취약

-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
 - 중국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우리의 주력산업 수출 증가율과 지역산업 기반인 제조업 성장세 둔화³⁶⁾
 - 핵심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기반 취약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며, 기술과 산업 분야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흡
- 잠재성장률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역일자리 증가폭 감소 우려
 - 1, 2차 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 모두 취업자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³⁷⁾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³⁸⁾의 성장세 둔화가 지역경제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그림 III-10]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6) 제조업 수출 증가율은 2000-2010년 연평균 10.5%에서 2010-2017년 연평균 2.8%로 크게 감소

37) 통계청의 경제총조사(2015년 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은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에서나 종사자당 급여 수준에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우위

38) 2018년 기준 시도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을 보면, 울산(32.2%)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충북, 충남, 경남 지역은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의 20%를 초과

□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 제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³⁹⁾ 창출에 중요한 역할
 - 한국형 제조업은 대규모 장치형 산업⁴⁰⁾ 비중이 높고, 대기업 의존도가 크며, 이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 특히, 과거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일부 산업도시들은 주력산업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험⁴¹⁾
-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위면적당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지속 감소
 - 지역 내 기업입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기업생산체계의 문제만은 아니며 지역의 정주여건과 밀접히 관련⁴²⁾

2) 지역의 신산업 성장기반 취약

□ 도시형 산업 수요 및 산업 융복합화에 대한 대응 미흡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서 도심 내 입지 등 산업 입지 형태의 전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맞춤형 산업용지는 부족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산업 입지형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도심 내 산업용지 확충을 노력 중이나 판교 등 일부 지역 외에 가시적인 성과 부족
- 제조업은 세계6위 제조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화, 융·복합화, 선진국의 제조업 강화⁴³⁾, 친환경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39) 통계청의 경제총조사(2015년 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은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에서나 종사자당 급여 수준에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우위에 있음

40) 2017년 현재 한국의 주력수출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석유정제, 특수목적기계, 철강, 일반목적기계, 통신기기, 조립금속, 전기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정밀화학 순(자료: 산업부·산업연구원, ISTANS)

41)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경기하락에 따라 거제, 울산 등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지원 중

4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5%가 생산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층은 산업단지 취직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산업단지 주변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 낮은 단계의 스마트화⁴⁴⁾로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며, 기술 간, 기술과 산업 간 융복합화를 위한 개방적 기술도입 미흡, 신산업의 기존 제도 적용 등 문제 상존

□ 산업단지 노후화와 활력 저하

-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을 견인한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었으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⁴⁵⁾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해지고 산업 활력도 지속 저하
 - 기반시설이 오래된 산업단지일수록 입주기업 영세화와 부가가치 저하, 문화·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인력은 취업을 기피하고 혁신역량 저하
 - 외곽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주변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노후 산업단지의 열악한 외관 등은 주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노후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저하
 - 노후 산업단지 내 융·복합 혁신공간 부족은 입주기업들의 산업변화 대응 부족으로 이어져 강소기업 양산에 한계
 - 과거 공장용지 위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과 신산업을 위한 융·복합 용지가 부족하나, 경직된 토지이용으로 인해 수요에 대응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한계

3)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문화시설 향유 격차

□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쏠림 현상과 콘텐츠 부족

- 주52시간 근무제·휴가분산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으로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지역 방문 집중현상 지속
 - 서울·제주 외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가 없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특정 지역(서울, 경기, 부산, 제주)에 방문 집중

43) 미국의 첨단제조업발전전략(2018), 독일의 인더스트리 4.0(2012), 영국의 산업전략(2017), 중국의 중국제조 2025(2015), 일본의 신산업구조비전(2017)

44) 2017년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 수준이 78.7%이며, 중간 1단계가 19.9%, 중간 2단계 1.4%이며, 고도수준은 없음

45) 국가, 일반 산업단지 709개 중 16%인 111개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면적기준 40%), 2019.7월 기준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해외 관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도 확대⁴⁶⁾
- 지역 제조업 등의 성장률 정체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주요 도시 외에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
-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교통시설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모바일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미흡
- 콘텐츠 부족은 국내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도 미흡

□ 노후 관광지 증가와 관광여건 변화 대응 미흡

- 1990년대 까지 조성된 대규모 관광지의 노후화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한 시설은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
- 전국의 관광지·단지·특구(총 301개소) 중 62.8%가 2000년대 이전 조성되었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관리수단 부재로 재방문율이 저조
- 지역의 관광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해있고,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조직도 부재
- 지역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업 다각화 등에 선제적 대응 곤란
- 서울과 수도권⁴⁷⁾ 이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관련기업의 성장기반이 미흡한데다 사업체도 대부분 영세

[표 III-4] 우리나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조성시기

(단위: 개소, %)

구 분	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계	301 (100.0)	227	43	31
1980년대까지	105 (34.9)	103	2	0
1990년대	84 (27.9)	59	6	19
2000년대	75 (24.9)	51	17	7
2010년 이후	37 (12.3)	14	18	5

자료: 관광정보지식시스템(<http://www.tour.go.kr>) 등.

46) 관광수지 적자가 2016년 64.89억불에서 2017년 146.96억불로 급증하였고, 2018년 132.08억불로 증가(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47) 관광사업체 수(2018년 기준)는 서울시 31.8%, 경기도 13.2%이고, 종사자 수(2016년 기준)는 서울시 37.1%, 경기도 11.5% 차지

□ 문화시설 향유 격차와 지역문화 소실 우려

- 문화·예술·체육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격차가 지역 간, 지역 내 여전한 실정
 - 인구당 시설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농산어촌 지역 등 문화·체육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률과 체감도 저조⁴⁸⁾
 - 문화·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국고보조의 공모방식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시설 공급 곤란
-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한 관광객 저하와 상주인구의 감소는 오랜 세월 축적한 지역문화의 소실을 야기
 -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역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보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의적 지역문화 관리·활용 방안 부재

2. 여건 변화와 전망

□ 기술발달과 산업구조 변화로 주력산업 위기 심화

-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의 기술발달은 향후 지역산업의 성장과 공간 구조 및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에서 생산보다 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전 전망
 -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혜지역과 일자리 손실지역이 불일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학력자 비율이나 비도시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부정적 영향 소지⁴⁹⁾
- 자동화 등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대체로 단순반복 업무 집약도가 높은 기존 주력산업 집중지역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48) 문화기반시설(2018년)은 수도권이 36.8%(1,013개소)이고, 지방이 63.2%(1,736개소)로 인구대비 시설 수는 지방이 많은 편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수준

49) OECD. 2018.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 임해지역 등 산업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위기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동시에 진행될 우려
- 세계적인 저성장 지속 등으로 중국이 자국 내수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필요
- 자율주행차, AI 등 첨단기술 분야와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플랫폼 등 데이터 분야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안정적 인구유지 기반 약화 우려
 -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이 전망⁵⁰⁾ 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가속화
 -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다시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부족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및 쇠퇴 심화 우려
-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심화
 -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지역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심화 전망
 - 지역 간 인구가동률 감소는 장기적으로 도시권 간 발전격차와 도시 내부 쇠퇴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새로운 산업입지 수요 대두와 가치의 변화

- 기술의 고도화는 기존의 산업 입지구조에서 탈피하게 만들고, 우수한 인재 수급을 위한 도심형 산업입지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편 전망
 - 연구와 생산 공간이 수직적으로 도심내 입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공간 확대 전망, 교육·생산·생활·문화가 구비된 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50) 2020년 2.8%, 2030년 2.3%, 2040년 1.5%(국회예산정책처, 2018.12.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산업 운영도 공유형 오피스, 공유형 차량 등 공유경제 영역 확대 영향을 받고, 사업의 플랫폼화와 클라우드화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를 요구
- 환경·생태적 가치는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 업무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형 산업 추진, 생태 보전산업 활성화 전망

□ 저성장시대의 국가지역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가치 증대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의 가치 재조명
 -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이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중요성 부각
 -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며, 아시아 비중이 더욱 증가할 전망⁵¹⁾
-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적인 문화·관광 향유권에 대한 요구 증가
 - OECD(2018)는 2040년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로 여행객 수요의 변화,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기술진보, 여행이동성 증대를 전망
 - 가치형 소비 확대, 나홀로 소비계층 증가, 시니어의 건강한 삶 추구, 친환경소비 선호 등으로 문화·관광 관련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
 - ICT 등 기술진보와 교통망 발달로 여행의 공간적 제약이 줄고, 여행이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관광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전개
- 한류의 확산과 다양화는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에서 한국 관광, 한국제품 소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국가브랜드 가치⁵²⁾ 제고에 기여할 전망

51)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2030년 약18억 명으로 전망되며, 이중 동북아시아의 관광객이 2억 9,300만 명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약 55%, 세계 시장의 약 16.2%에 이를 것으로 예상(UNWTO. 2017)

52)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2018년 국가브랜드 가치 발표에서 한국의 가치를 2조 달러로 추정 하였으며,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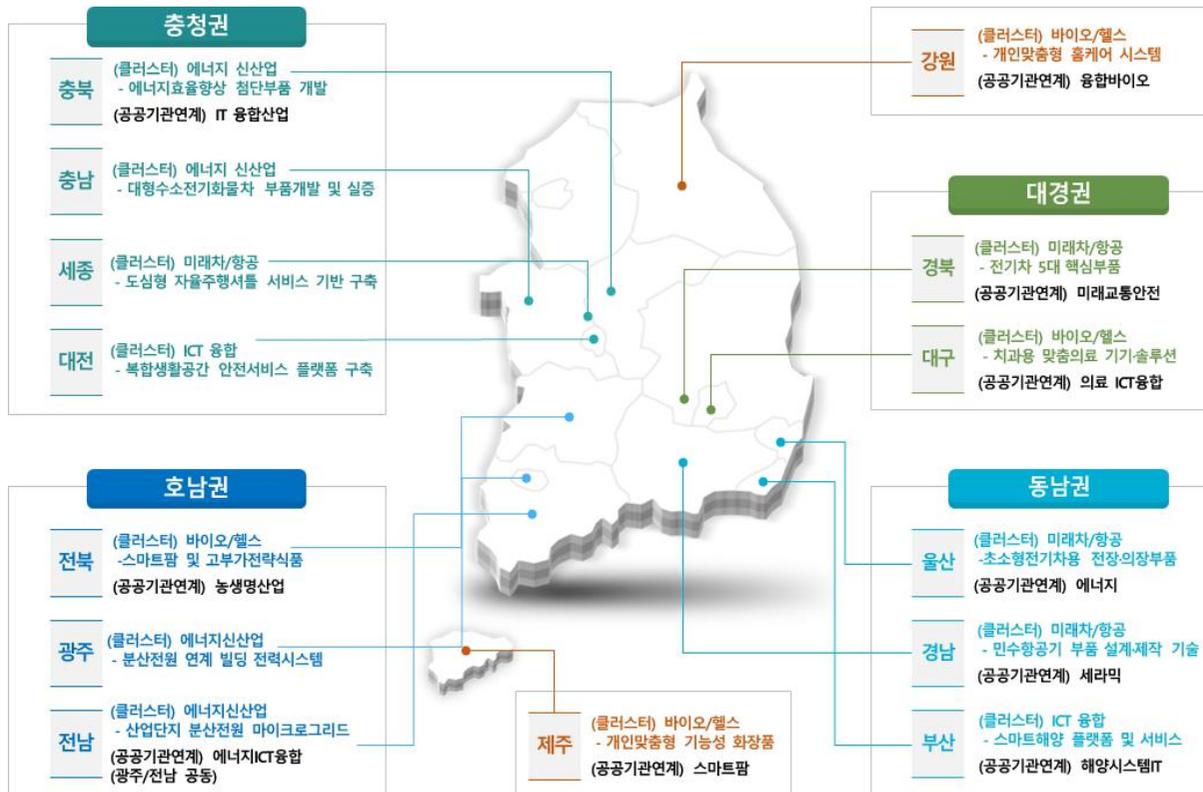
3. 주요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 국가혁신클러스터⁵³⁾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구를 연계하여 대규모 클러스터로 육성함으로써 생산~비즈니스~생활이 선순환되는 거점으로 육성
 -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의 중핵기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R&D 혁신프로젝트 및 네트워크 지원
 - 투자선도지구, 규제자유특구, 지방투자보조금, 금융지원 등을 활용하여 국가 혁신클러스터의 기술혁신과 지역투자를 촉진

[그림 III-11] 국가혁신클러스터와 혁신도시별 특화 산업·프로젝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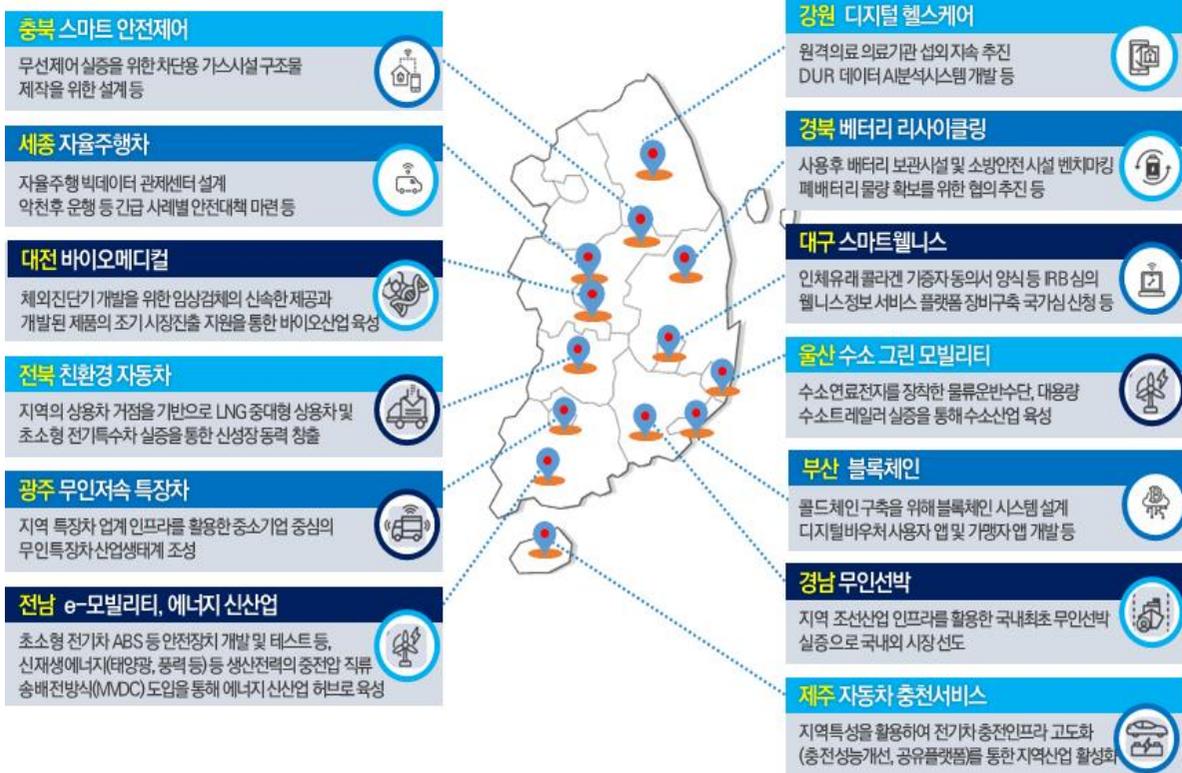
53)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특구 등을 통근권으로 묶어 클러스터로 육성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화,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을 혁신하고,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해 세계 친환경 시장 선점
 - 제조업 생산시설의 스마트공장 확대 및 스마트 산업단지 등 제조공간의 스마트화 추진, AI·5G 기반 업종 특화를 통한 지능화된 산업구조로 전환
 - 기술 인재양성,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촉진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신산업 육성
 -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하여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추진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 부여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
 -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예산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⁵⁴⁾
- 지역의 기능적 특성, 주변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발전특화 추진
 -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주변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신산업 특화발전 추진
 -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 산·학·연 협력 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유도
- 지역주도 맞춤형 산업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전환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지역산업위기 대응력 강화 및 지역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54)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규제자유특구 2차 선정, 2019.11, 중소기업벤처부)

-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
- 신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그림 III-12]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2차 규제특구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 내 가로와 거리 등을 활용한 선(線)형 클러스터 구축
 - 도시 내 가로와 거리를 제조와 상업,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선형의 집적지로 구획하여 융·복합형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 가로형 외에 상가형, 단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내 소상공인 집적지 보호와 활력 증대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가로 경관정비 사업 등을 시행

[표 Ⅲ-5] 도시내 거리의 유형별 특징 예시

유형	지역	창업/기업지원 사업 예시
역세권 중심	주요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환승역과 연계한 상가 등	도곡역 여성창업지원센터, 서울역 중소기업명품마루 사업 등
특화산업지구 중심	청계천 전자, 전기, 기계 부품 상가, 낙원상가, 문래동 기계금속산업 지구,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의 안경거리 등	낙원상가의 팹랩, 노원동 안경산업 지원센터 등
전통산업중심	공예, 미술 등 지역 연고(전통)산업에 기초한 거리	서귀포 이종섭 거리의 예비창업 부스 등
활성화된 도심상가 중심	명동, 홍대입구, 이대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청년 창업 활동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산발적으로 존재

- 도심, 대학 등을 신산업 입지와 창업, 일자리 창출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 공간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에 지식산업, 환경친화산업 등 신산업 입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반과 경제적 자산 및 네트워크 자산을 집중 배치
 - 도심지역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확대
 - 대학,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을 융복합 산업 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그림 Ⅲ-13] 도시공간을 활용한 혁신공간 개념도



자료: Brookings Institution. 2017. Advancing a new wave of urban competitiveness: The role of mayors in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확산
 -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술요소(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안전 등)를 도입한 스마트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확산
 - 표준모델 개발 시 대도시·거점도시형, 중소도시형, 교외 및 농촌형 등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델 개발,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모델 개발·보급
 -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산업단지 구축, 지역 우수 인재·기술자와 연계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산업입지를 지원

□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
 -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 부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여건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
 - 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기업, 연구교육시설이 집적된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개발 검토
 - 스마트 교통,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도입 등 스마트 인프라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용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단지 신규 조성 또는 재생 시 역사·문화·건축경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 제조업과 다양한 연관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신산업 유치, 신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지규제 등 규제의 획기적 개선
 - 생산(지식산업센터), 창업(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연구개발, 주거 및 문화·상업시설 등 산업단지내 공간의 융복합화 촉진
-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 정책에서, 지역주도의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

- 거점 산업단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기능을 집적하되, 연계 산업 단지·대학·지역 등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 계획입지 중심의 기존 산업입지구획계획 제도를 개편하여 개별 입지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개별입지 인허가 권한 확대를 관리 강화

계획지침 Ⅲ-2-1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형 산업단지 등 미래산업 형태에 적합한 산업기반 확충에 노력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주체 간의 협력과 융·복합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한다.

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 기업성장 전(全) 주기에 걸친 기업입지 지원체계 확립
 - 창업 후에도 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⁵⁵⁾를 구축하여 기업성장 전 주기를 고려한 기업입지 공급 및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 지역 노동시장이나 기업 거래권 측면에서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 시 기업입지의 효율적 기능배분이 가능하도록 유도
 - 지역의 자발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유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역량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장소 중심의 통합적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등 기업입지 시설 개발 시 혁신지원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사전에 검토
 - 지역 내에서 산업(클러스터)정책, 지역과학기술정책, 지방노동시장 및 인력양성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55) 기존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나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라는 기업입지정책이 주류

- 도시재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입지 개발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창업·주거·커뮤니티 기반 혁신거점을 구축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기획, 준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역 건축사·시공자 등이 창업하여 집터·일터·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터새로이 사업) 분야를 제도화하고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에 종사하는 비영리 조직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경제조직으로 활성화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 지원 기능을 보장하고, 주변의 쇠퇴한 주거·상업 지역도 재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 연계 도시재생사업 추진

□ 쇠퇴 산업도시의 회복력 제고와 구조전환 촉진

- 기존 산업도시의 예방적 진단시스템 도입
 - 사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위기에 대한 사전진단 및 경보체계 도입 검토⁵⁶⁾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관계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쇠퇴가 미칠 수 있는 공간적 영향권을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 시행
 - 쇠퇴가 예상되는 산업도시는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산업도시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반 시설의 지원 등 다양한 산업도시 구조 전환 지원방안⁵⁷⁾ 추진
- 기존 산업도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산업단지과 산업공간별 정주환경, 교통여건을 진단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검토
 - 주변 지역 또는 관련 산업의 대학, 연구기관, 첨단기업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

56) 특정 대기업 의존도, 특정 산업 의존도, 주력산업의 성장률 전망 등 지표를 활용

57)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 노동자, 지자체간의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 산업도시내 소재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우대, 산업도시가 보유한 산업인프라자산을 활용한 공유방식의 창업지원,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및 지역소재 대학의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 강화

□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추진

- 노후 산업단지 내부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체에 효과를 확산
 -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 부지, 유휴부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토지용도 전환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에 부족한 산업·지원시설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고밀도 복합개발하여 혁신거점으로 조성
 - 혁신거점에 창업지원·교류협력 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부처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 혁신거점 조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인근 노후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 개별 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입주기업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여 경쟁력 제고
-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 부처별 하드웨어 사업(혁신거점 확충, 공장 리모델링,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망라하여 패키지로 지원
- 노후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재생 추진
 - 산업단지는 주변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 입주기업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 생활SOC 등을 제공하여 산업단지의 매력도를 제고
 -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 경관 개선 사업, 노후공장 리모델링 지원, 도심 비적합 업종 전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산업단지 기반 및 환경 구축
 - 산업단지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많이 활용하고 쉽게 체감하는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
 -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 지자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여 개별 시설물(진입도로, 마이크로그리드, 내부도로, 교차로, 주차장 등)을 스마트화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시 지역산업생태계의 특징과 기업성장 단계별 산업입지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구조 개선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방안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함께 정비하는 통합 재생 및 스마트화 방안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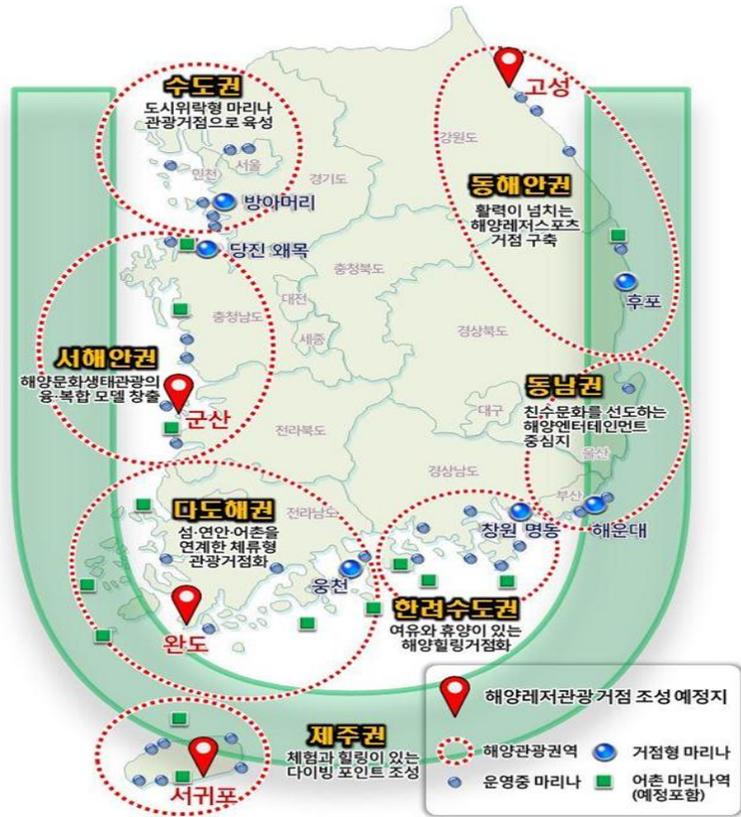
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지역문화·자연 유산을 특화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 한류, e-스포츠,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유산, 대규모 국제회의(MICE), 웰니스·의료·뷰티 등 지역별 테마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산업 육성
 - 산림·호수 등 내륙 생태·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둘레길, 걷기여행길 등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육성
 -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섬·해안이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고, 해안 관광루트 조성, 수상 레저활동 등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추진
- 다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문화예술·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분야별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발전 촉진
 -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전통도시 육성과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의 보존·계승과 창조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 상품 개발
 - 전통주, 지역 명인 등 한국 만의 희소성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산지승원 등을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

-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접목하여 테마 콘텐츠로 활용, 지역별 개성 있는 축제와 연계
- 국내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섬·해양 관광의 콘텐츠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그림 III-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향



자료: 해양수산부. 2019.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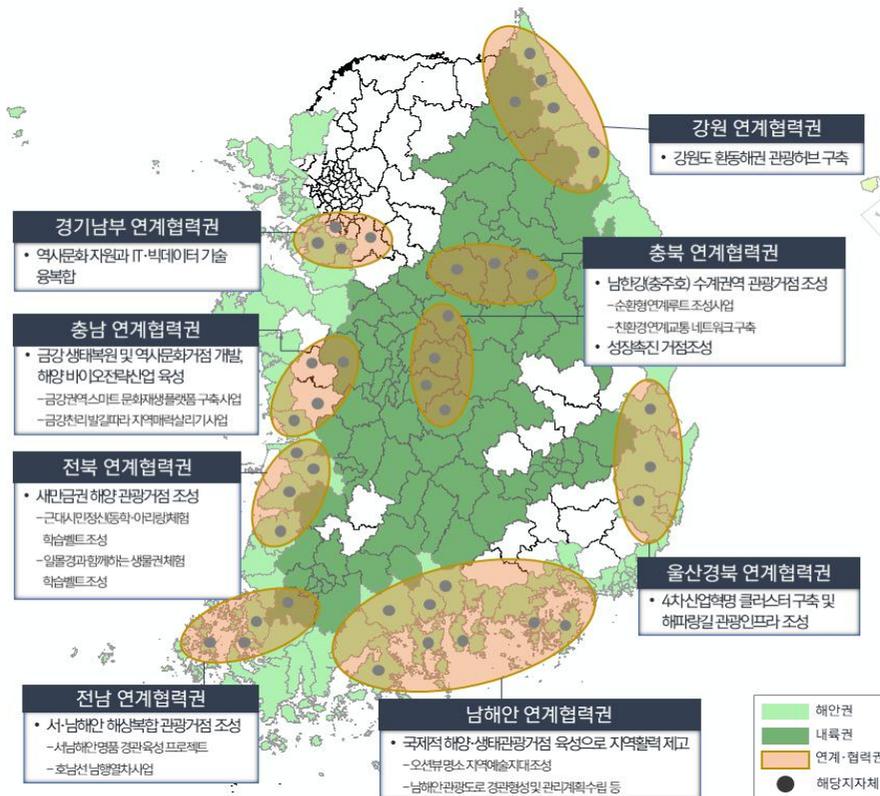
□ 지역 문화·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체계, 전문인력 등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 지역사회 스스로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 주민참여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역에 전수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지역소재 관광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도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루트 육성,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연계, 공모사업 복합화 촉진 지원
 - 지역 곳곳에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확대
 -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류·교류인구 유치로 지역 활력 유지
- 연계·협력 관광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노선 발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편의를 향상
 - 교통인프라는 특별한 테마를 활용해 관광요소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자연-문화-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관 인프라로 조성·활용

[그림 Ⅲ-15] 관광분야 지역 연계·협력사업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http://www.molit.go.kr>)

□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여가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노후관광지 재생
 -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미래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지의 주요 기능 및 시설 개선 전략 마련
 - 체험·모험 등 신규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 모색, 노후 시설 개선과 주변 인프라 정비 등 노후 관광지 재생 종합방안 마련·추진
- 노후 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 폐산업·생산시설, 노후 상업·생활시설,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유휴공간 및 시설을 새로운 콘텐츠와 접목하거나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생
 -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과 주차장 설치, 폐교를 문화공간·야영장으로 개발하는 등 체험시설과 결합, 폐조선소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유휴시설 개선

계획지침 Ⅲ-2-3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노후관광지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방안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을 다른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

-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서비스 공급방식 전환
 - 문화시설의 지역격차 해소와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수요자의 접근성에 기반하여 확충·관리
 - 지역문화실태조사 강화, 지역문화균형지수 개발, 인구규모와 접근성, 이동성 등이 고려된 생활문화 인프라 공급 최소기준 개선 추진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공간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주변과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활용도 제고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점형·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내 거점형 문화서비스시설과 공공도서관,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시설을 접근성을 고려하여 확충
 - 소외계층 문화 순회 등 이동식 문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인접 시·군과 생활문화시설 공동이용을 촉진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 체육시설 등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한 시설을 확충하고, 폐교 등 활용도가 감소한 기존 시설들은 기능의 전환 및 융·복합 유도
- 지역 문화주체 간 협력·소통 촉진 및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
 - 문화·예술동호회와 공공스포츠클럽 활동 촉진, 지역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운영주체 간 상호교류 강화 등 지역 내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

□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 지방공항·항만·KTX역과 연계한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 접근이 용이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여 글로벌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
 - 공항이 있는 지방거점은 호텔이나 쇼핑몰 등 배후시설 유치와 지역 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게이트웨이로 활용
-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및 시설이용 편의성 제고
 - 공항-KTX역, 항만 등 주요 교통 결절점-지역관광자원 간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 카셰어링 등 공공교통시설 확충 및 이용 플랫폼 개발, 플랫폼 간 연계 가능한 지역관광교통안내시스템 확대
 - 외국어 통역, 관광정보안내 등을 ICT 기술과 접목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안내무인시스템,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 비자발급 제도 정비, 다언어 음성번역기 등 관광 관련 기술개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홍보 방식 다양화 등 서비스 제공시스템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숙박·교통 등 관광인프라 개선, 콘텐츠 개발, 서비스, 홍보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관광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 방한 접근성(국제공항, 항만 등)이 높은 지방거점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호텔 등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와 서울 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활용

[그림 III-16]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 설명자료.

□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한국적인 문화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서 브랜드화 및 세계화 촉진
- 신규 등재를 위한 지역 문화 유산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 역할과 협력 강화 등 추진체계 정비

○ 새로운 한류 창조와 확산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창출

- 우리 전통문화적 요소와 현대적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한류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한류의 지속성 확보와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K-POP 콘서트, K-beauty, 한류 드라마 등 한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스타와 협업하여 한국 음식, 문화 체험 등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 해외 시장별 선호를 반영한 전략적 해외광고와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유치 등 다자간 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남북한 간 문화·관광 교류·협력기반 구축과 한반도 평화지대 조성
 -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를 생태문화공원, DMZ 평화의 길 등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국제평화·협력의 상징으로 관리 검토

계획지침 Ⅲ-2-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향유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관광지 조성 시 지방공항·항만·KTX역 등 광역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와 연결성 강화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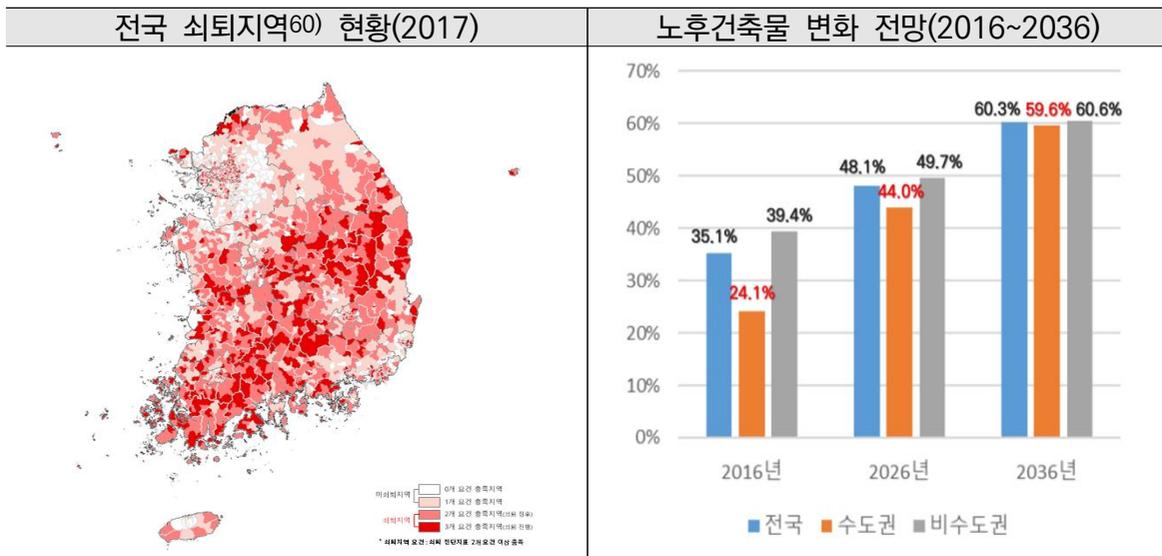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의 쇠퇴와 성장관리 미흡

□ 도시 쇠퇴와 주거지의 노후화 심화

- 도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도시는 노후 건축물 확산 등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우려가 부각
 - 광역시의 물리적·환경적 쇠퇴는 2013년 75.9%에서 2017년 86.9%로 증가하였으며, 도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51.7%에서 67.3% 증가⁵⁸⁾
 -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인구 정점을 지난 지 10년 이상 된 지방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⁵⁹⁾

[그림 III-17] 전국 쇠퇴지역 현황 및 노후건축물 전망



주 : 국토교통부·LH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전국 쇠퇴현황(2018)(좌) 세부자료 및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2018)(우)
 자료: 서민호·이혜민, 2019. 국토연구원(좌); 서민호 외, 2018.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국토연구원(우).

58)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 판단 3개 세부지표 기준 : ▶인구 :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산업 :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 최대치 대비 현재 5%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수가 감소 ▶노후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

59) 특광역시 제외한 77개 도시를 분석(구형수 외,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41면)

60) 여기서 쇠퇴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인구사업체수노후건축물 중 2개 이상 쇠퇴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2005~2016년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후주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비·수선 등 주거지의 물리적 정비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
 - 노후건축물은 현재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노후화로 2036년에는 건축물의 약 60%에 달할 전망
 - 노후주택은 특·광역시와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인구 15만 이하의 도시는 30% 이상으로 관리가 시급
 -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30년 이상의 단독주택은 58.8%, 공동주택은 13.5%로 주택 유형에 따른 노후도 격차 심각
 - 향후 10년 후에는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있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지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건축물 크게 증가 전망

□ 도시성장 관리 미흡과 난개발 심화

- 성장시대의 도시계획 논리와 과잉 도시개발 지속
 - 인구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 지역의 과잉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등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물량 확보 노력 지속
 - 도시 외곽의 지속적인 개발로 도시 내 저이용 유휴토지 증가, 인구 유출 등으로 원도심의 쇠퇴가 발생하여 신·구시가지 간의 불균형 심화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지속
 -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⁶¹⁾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지속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축 확보로 도시의 허파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한 훼손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원칙 재정립 필요성 증가

61)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을 통한 토지이용관리체계 일원화, 용도지역 세분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2) 거주 만족도와 생활서비스 수준의 격차 심화

□ 주거안전성 취약과 거주 만족도 격차 심화

-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로 총량적으로 주택부족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실 수요자의 자가 마련은 어려운 실정
 -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후 100%를 넘었고, 2017년 전국평균 103.3%이나 자가 점유율은 전국 평균 56.8%(서울 42.1%, 수도권 48.9%) 수준
 - 임차가구는 증가(2006년 715만→ 2016년 826만)했으나,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부족하고, 최저주거기준⁶²⁾ 미달가구가 103만 가구(5.4%)에 달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안전성은 취약
- 주거유형별 거주 만족도⁶³⁾가 상이하여 만족도·서비스 격차 심화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06~2016)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단독·연립·다세대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높는데, 이는 생활편의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차이에 기인
 - 아파트 거주가구와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의 격차가 12.1%p(2006)에서 14.1%p(2016)로 확대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격차 심화

□ 생활서비스 수준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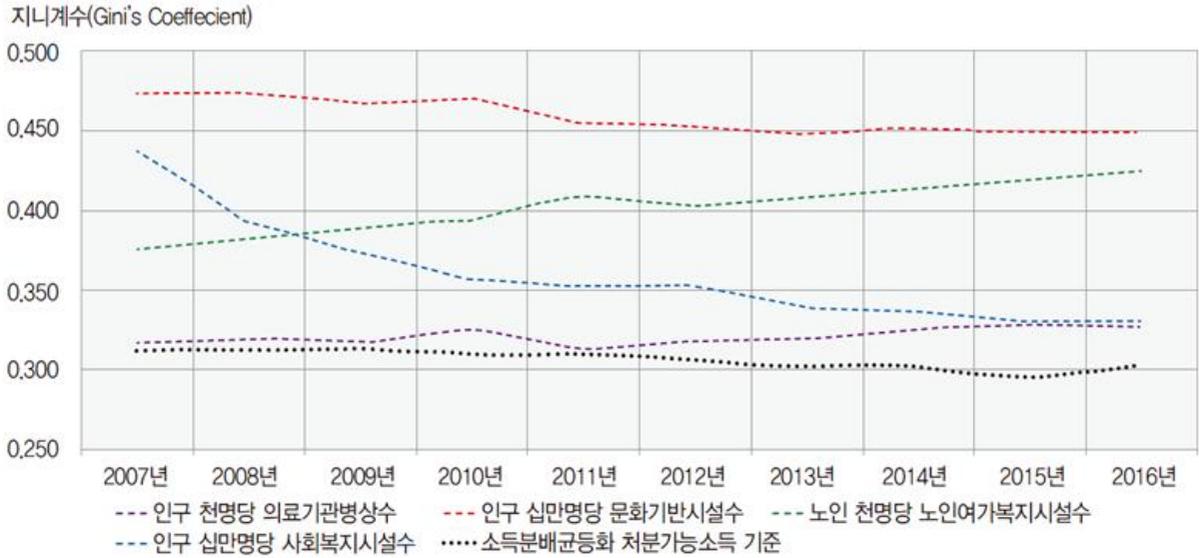
- 생활 SOC 시설⁶⁴⁾의 양적·질적 부족
 - 그간 대규모 기간시설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이뤄냈지만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의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
 -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등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격차를 유발하고, 소득계층별 불평등도 높은 수준⁶⁵⁾

62)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상하수도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구비 여부, 구조강도, 방음, 환기, 채광, 난방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의미

63) 거주만족도 지표는 상업·의료·공공문화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접근성, 대중교통주차편리성, 보행안전, 교육, 치안 방법, 소음, 청결도, 대기오염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

64)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생활SOC 3개년 계획, 2019.4. 관계부처 합동)

[그림 III-18] 생활SOC 공급의 공간적 불평등 수준 변화(2007~2016년)



자료: 구형수. 2018. 생활SOC정책의 주요 이슈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 수요에 부응한 생활SOC 시설 공급 미흡

- 현재의 생활SOC 공급방식은 칸막이식 공급체제로 지역과 주민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재정 수준에 따른 지역 간 편차도 심각
- 지자체와 주민들은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위해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복합화를 선호, 설치 후 유지관리도 문제

3) 재난의 다양화·대형화와 통합 대응체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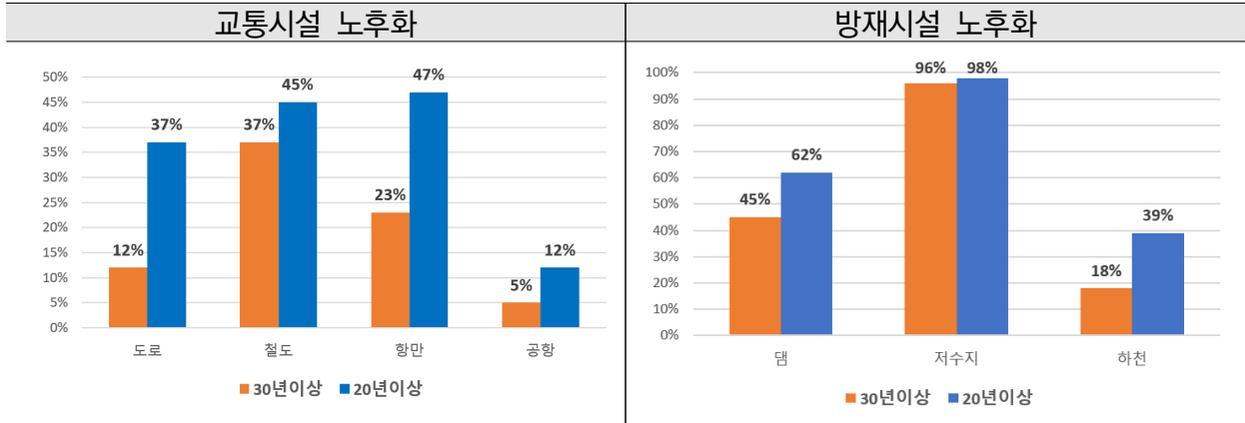
□ 노후 인프라 증가와 유지·관리 미흡

- 1970~19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주택·건축물과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
-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저수지(96%)가 가장 높으며, 댐(45%), 철도(37%), 항만(23%) 등으로 노후화가 높은 수준⁶⁵⁾
-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최근 5년간 노후시설물 손상·붕괴로 인한 대형사고는 없었으나 향후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증가

65) 생활SOC 공급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생활SOC 지니계수는 2007~2016년 기간 동안 0.3~0.5로 심각

66) 국토교통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6.

[그림 III-19] 교통시설 및 방재시설 노후화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지하공간 개발 증가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대형 복합재난 우려
 - 지하시설물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통신구 37%, 공동구 25%, 하수관로 23% 외에는 낮으나, 20년 이상은 높은 편으로 향후 관리 필요성 증가⁶⁷⁾
 - 가스관, 열수송관 등 지하관로는 관로 손상과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누출 우려, 통신구 등 지하구는 구내 화재사고와 구조물 파손으로 2차 사고 우려

□ 대형 복합재난 증가와 통합적 대응 부족

-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 태풍·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난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8.6배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약 78% 감소
 - 2000년대 이후 호우 및 대설발생 횟수와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⁶⁸⁾가 증가하며, 취약지역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증가
 - 기후변화가 계속되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해 대비의 통합적·협력적 관리체계는 미흡
- 자연재해와 건축물 노후화의 복합작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증가

67) 20년 이상 지하시설물 비율이 송유관 98%, 통신구 91%, 공동구, 43%, 하수관로 40%, 가스관 35% 등(국토교통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6)

68)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역대 최고 폭염인 2018년에는 환자 4475명, 사망자 48명 발생하였으며, 향후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건강영향비용은 2020년 12.6조원, 2050년까지 57.5조원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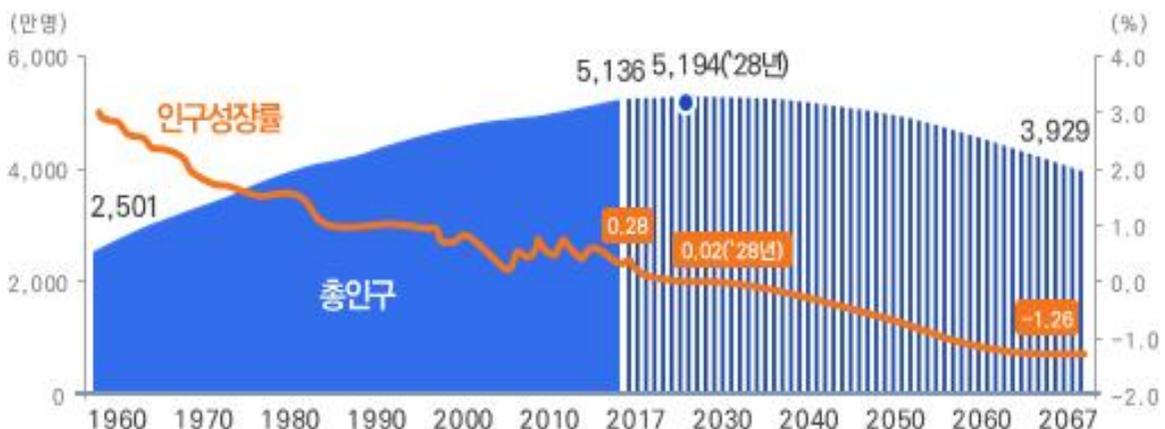
- 건축물 수명주기 향상으로 2018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40% 수준이고, 202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전망
- 노후건축물 증가와 지진 등 늘어난 자연재난 주기가 맞물려 건축물 외벽 붕괴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관리의 사각지대 상존

2. 여건 변화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도시공간 재편 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일부 도시는 기능이 쇠퇴하면서 도시경쟁력 약화 전망
 -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절대인구감소가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⁶⁹⁾
 - 시·도별로는 2047년에 이르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에 노출 전망⁷⁰⁾
 - 인구 감소는 인구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고령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며, 도시경쟁력 약화와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그림 III-20] 장래인구전망 :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자료: 통계청. 2019.3.27.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69)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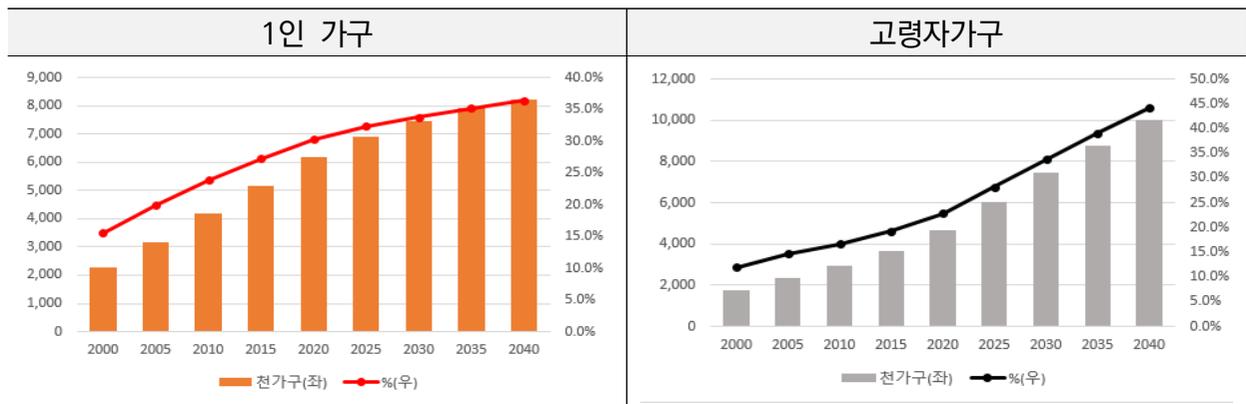
70) 한국고용정보원. 2018. 한국의 지방소멸.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 필요
- 특히 지방 중심으로 인구감소 → 시설수요 감소와 폐시설 증가 → 공급 저조 → 인구감소 가속화의 악순환으로 생활SOC 취약지역 증가 예상

□ 주택 수요의 다양화와 빈집 문제

- 1인 가구, 고령자 가구⁷¹⁾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요구되는 주택의 면적, 위치, 형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1인 가구의 증가는 소형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령가구의 증가는 주거 공간 개선 외에 의료·복지시설 등 생활공간의 개편 요구
- 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정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지속 추진 예상
- 귀화·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구와 외국인가구도 급증하는 추세⁷²⁾

[그림 Ⅲ-21] 1인 가구 및 고령자가구 전망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 첨단기술 발달과 기후변화는 주거공간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홈, 제로에너지 주택 등 스마트 친환경주택 공급의 필요성 증대

71) 1인 가구는 2017년 약 558만 가구(전체 가구의 28.5%)에서 2040년 약 823만 가구(36.4%)로 급증 전망,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도 2017년 현재 약 399만 가구(20.4%)에서 2040년에는 약 1,001만 가구(44.2%)로 급증 예상(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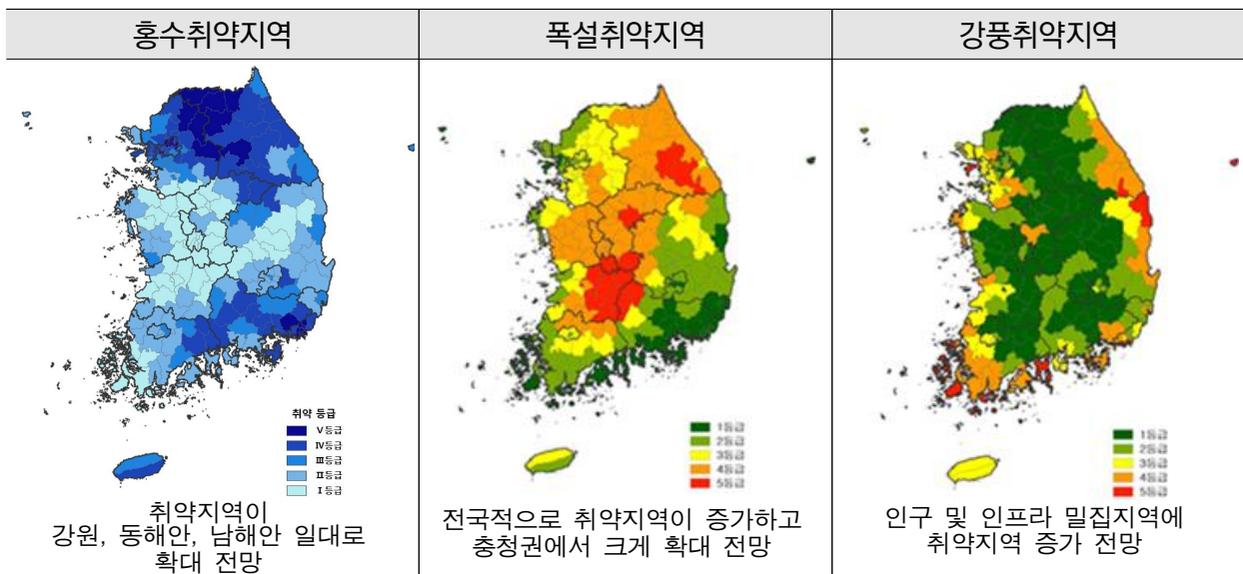
72) 다문화가구는 2015년 229천 가구에서 2018년 334천 가구로, 외국인가구는 2000년 65천 가구에서 2017 478천 가구로 급증하는 추세(통계청, www.census.go.kr). 다문화가구의 증가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결혼 이민 2세)가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한편, 인구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증가⁷³⁾하여 정비 요구가 증가할 전망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 기금 등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빈집 해소 방안 마련할 필요

□ 안전한 국토공간 확보 필요성 증대

- 기후 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폭설, 폭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발생시기·패턴이 다양해지며,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전망
 - 사회적 재난⁷⁴⁾도 증가하여 국토관리 방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재난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증대

[그림 III-22] 재해취약지역 전망(2100년)



자료: 국토연구원, 2019.

- 기후변화와 재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변화가 필요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의 신설·유지관리와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책 필요
 -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스마트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요구

7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택 미래예측모형을 활용한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빈집수는 2030년 128만호(5.1%), 2050년 302만 호(10.1%) 수준으로 증가 전망(한국국토정보공사, 2016)

74)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등 취약인구가 증가하여 이상고온에 의한 건강영향비용이 2020년 12.6조 원, 2050년 57.5조 원으로 전망(질병관리본부)

3. 주요 정책과제

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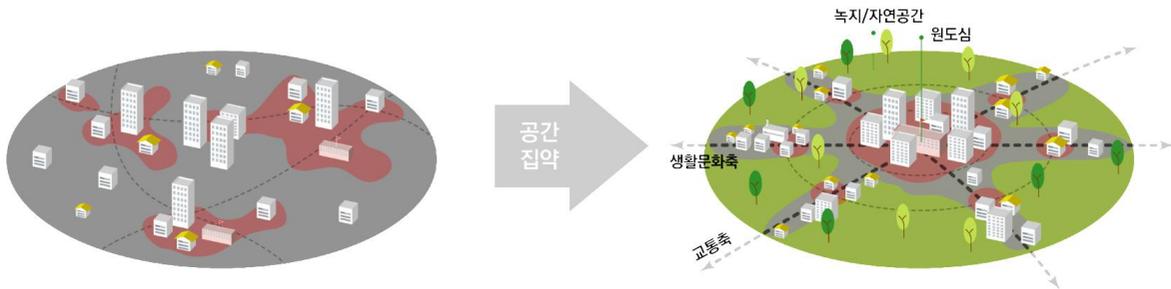
□ 도시의 적정 개발과 관리 강화

-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
 - 도시계획 수립 시 과도한 인구예측을 현실화하고, 계획인구 외 인구구조, 지역 기능 등도 고려하여 도심 내외 공간의 계획적 관리
 - 도심은 확장적 개발을 지양하고 복합·입체 개발을 유도하며,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도시 정비 추진
 - 비시가화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난개발 가능성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적 관리 추진
 - 다가구·다세대 밀집, 주거·공장 혼재 등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한 지역의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재생·정비
-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은 중점 관리
 - 성장관리 대상지역의 개발수준, 정비방향을 고려해 중점·일반 관리로 세분화하는 등 차등적 관리 강화
 - 개발압력 양상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되, 농촌생활권의 지구 중심이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집중 관리
 -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상업형, 여가휴양형 등 유형별 관리 추진
- 통합적 도시 성장관리모델 개발
 -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강화, 주거공간 조성, 첨단인프라 구축 등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화 지역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정비를 유도하고, 미·저이용 토지를 우선 활용
 - 미·저이용 토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미·저이용 토지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 인구 감소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의 감소를 녹지공간화하고,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공간 구조 형성 및 관리 전략 검토⁷⁵⁾
- 과잉 기반시설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공원, 휴식공간, 도·농 통합공간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계획하고, 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공간 정비
- 주요 교통축, 생활문화축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행태를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스마트한 공간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
-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등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 삶의 질 보장

[그림 III-23]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 지역-도시 간 통합적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 경제·생활 공간 공유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압축 정비되는 도시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적 도시계획 연계 및 통합 추진
- 체육관,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장례식장, 하수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자 필수기반시설의 공유와 활용, 분쟁 해소 등을 추진
-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도시를 공동 생활권으로 편성하고, 도시 간 대중교통망 확대, 기반시설 확충, 고속교통망 정비

75) 일본은 콤팩트 & 네트워크 전략, 미국은 스마트한 축소 전략, 독일은 적정규모화 전략, 프랑스는 매력공간 창출전략 등 주요 선진국들도 도시의 적정개발 및 관리 전략을 적용 중

□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

- 도시재생로드맵에 따른 도심 및 주거지 도시재생의 실효적 추진
 - 신규 주택과 상업·업무·산업공간 공급은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부지의 집약적·복합적 활용을 통해 공급하는 등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
 - 빈집, 유휴·방치건축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유주택의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우선 활용
- 지역 자산을 활용하고 소셜 비즈니스를 지역 단위에서 구축·활용
 - 지역에 산재하는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인적·경제적 자본 강화 목적의 사회적 관계 육성
 - 청년·여성·퇴직자들이 공유경제 창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빈집,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제공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주체와 수요자로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셜비즈니스 기반 재생 활성화
-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체계, 지역 발전투자협약 및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의 경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 마련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을 지원
 - 지자체는 지역 특화 및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사업·예산체계 확보와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형성 노력

□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 노후·방치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방식 강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경관 개선
 - 노후·방치건축물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방식의 재정비를 확대·강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확대
- 빈집 모니터링 추진과 빈집으로의 전환 방지 대책 강화

-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노후불량주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빈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자산으로서의 활용가치 극대화 검토
- 개발수요가 낮은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성시가지에 있는 재활용에 부적합한 빈집은 철거하거나 녹지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 녹지 유지관리 등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
-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은 빈집 재생,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빈집을 지역자산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빈집의 적정관리와 활용성 제고 도모
 -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지원·감독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칙 수립
 - 빈집에 대한 활용과 인식 제고를 위해 공개율 등 관련 통계 기반 마련

□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추진
 - 용도지역별로 허용행위와 밀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유사한 개발행위는 집합시키고, 갈등구조에 있는 행위는 제한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용도지역 등의 변경절차 중복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정목적 등이 유사한 용도지구 등의 통폐합 및 간소화 검토
- 용도지역의 조정권한 위임을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 유도
 -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 공간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세분화 운용을 권장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허용용도의 폭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제도 운용을 도모
 - 국가 또는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정책 수요 및 민간의 창의적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
- 공간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

- 공간계획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일원화하되, 지역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체계의 대응성 강화
- 지역의 토지이용체계에서 주민 참여단, 주민 공동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이 계획수립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및 매력 있는 여가공간 조성
 -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민들에게 매력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위법 사용되고 있거나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조성
 - 보전가치가 낮고 일상생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 유도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의 공공성 강화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도시권 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의 해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 공간으로 관리
-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확립
 - GIS·드론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단속 전담인력 확보 등 국가·지자체의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훼손지 복구·정비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 유도

계획지침 Ⅲ-3-1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유휴·방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가지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등 적정 개발을 지향한다.
-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개발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미·저이용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한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생활 공간 구축
 -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영유아 기반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제공

□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⁷⁶⁾ 미달지역 해소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공급
 -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되, 도시와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 지자체는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노력
 - 인구밀도, 시설 수용능력,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시설 전환, 복합화, 지역 간 연계, 교통 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76)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을 법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관련부처가 생활SOC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마련하였으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

[그림 III-24]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 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 사립, 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 노외, 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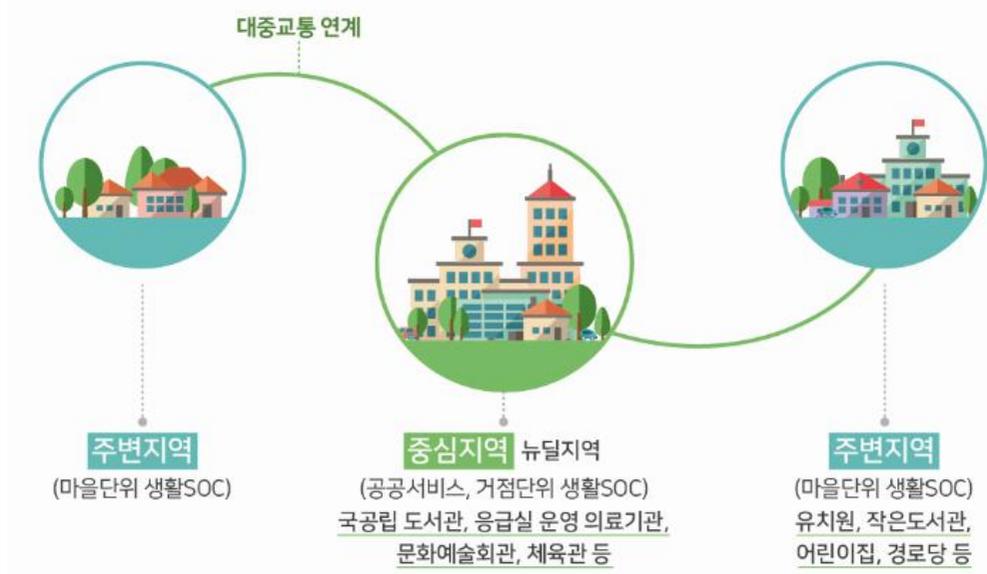
주: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되어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
 - 생활SOC를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별적으로 배치하고, 지역맞춤형 공간복지전달체계와 결합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접근성 향상

- 어린이집, 주차장, 경로당 등 소규모 마을단위로 배치가 필요한 시설은 마을이나 동네에 직접 공급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보건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거점 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거점에 배치
- 도시 외 지역에 서비스 범위가 넓은 지역거점 생활SOC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 간 연계·운영,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활SOC 공급 시 대중교통 등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그림 III-25]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특화모델 예시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수요 응답형, 시설 복합화 등 생활SOC 공급방식 다원화
 - 새로운 생활SOC 시설 공급 시 지역주민의 수요, 활용 전망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급방식을 적용
 - 인근에 기존 생활SOC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의 복합화를 검토하고, 활용도가 부족한 시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
- 지자체 단위의 접근성 기반 생활SOC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생활SO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최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

- 중앙정부에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SOC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SOC 취약지역을 발굴·진단하고,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지자체에 제공
- 생활SOC 정보플랫폼 운영, 공급 및 활용 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활SOC 전문지원센터 설치
-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SOC 관리·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 지자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기업 등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과잉 투자 방지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

□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 1-2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 현행 4인 가구 중심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조정하고, 소형 가구 수요자인 청년, 고령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면적 및 시설기준 차등화 등 맞춤형 최저주거기준 검토
- 고령자, 다문화·외국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추진
 -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공 분양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추진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거주민의 건강 모니터링, 주택의 단열 강화·시설 개량 지원을 통한 기존 시설의 이용도 제고 검토
 - 다문화·외국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불편함 없는 주거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 공유형 주거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
 - 공동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유형 주거 유형을 반영한 주거기준 등 시설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

- 공유주택, 코하우징, 세대분리형 아파트, 서비스 레지던스형 공유주택 등 다양한 공유주택의 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거정책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와 주거정책을 유연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

계획지침 Ⅲ-3-2

-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국공유지, 노후 건축물·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보행 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SOC 접근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공급한다.

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주거사각지대 해소

-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소요와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
 -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면적, 임대료 등을 포함한 정책대상 가구의 선호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를 감안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일자리와 주거복지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도 지속 공급 확충
 -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의 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사회적 금융기법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자금지원 및 자산형성 방안 모색
- 지역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 선택권 다양화

- 주택유형, 주택생산방식, 주택입지 등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 및 주거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주택 공급 등 포괄적인 선택사항을 제공
- 지역인구, 지역경제 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지속 개편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공간의 주거기준 마련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주택 거주가구 축소를 위한 주거지원 전략 수립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애단계별, 소득단계별로 소득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수준을 분석하여 주거복지 대상가구 기준을 설정하고 계층별로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주거복지정책 설계에 반영
 -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성 확대와 주택조사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지자체 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업무 전담조직의 역할 확대
 -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관리비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거주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및 주거지원 강화
- 빈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거안전망 마련
 - 1인 가구는 소득증대 및 일자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한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주거지와 일자리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 고령자 가구는 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립형 주거시설, 주거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건강주기별 주거시설의 공급 및 지원방안 수립
 - 소득이 불안정한 건강한 고령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하고, 기초·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과 주거지원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
- 주거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법제도를 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전략 및 목표를 구체화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환경 조성
 -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주택과 기초편의시설,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함께 제공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형 주택공급프로그램 시행
 - 지역 거주민의 계층별, 세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뿐 아니라 단지 배치, 학교, 일자리 등과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설계 강화
 - 이웃존중 주거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입주가구 생활문화 조성 및 분쟁 조정 지원, 방문객과 거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안전 문제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조성의 양립 유도
 - 지역이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한 복합 농산어촌 마을계획 활성화
 - 은퇴자 및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주거서비스 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을 포괄하는 마을계획 활성화
-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
 - 전문 중재자가 구체화된 중재 원칙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 중재자 육성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마련

□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협력적 주거 거버넌스 운영

- 장수명주택, 모듈러 주택, 스마트 홈 등 미래형 주택 보급 확대 추진
 - 모듈러 주택, 생애주기별 수요변동에 맞는 가변형 주택공급과 연령혼합,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홈 보급을 확산하고, 기존 주거환경 시스템에 스마트 기술을 부착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설계, 경량 고강도 건축 재료의 사용,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주택 보급의 확대
 -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확대, 공동주택의 친환경(패시브) 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 검토
 -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및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발생 시 주거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거비 절감
 - 주택소유자가 임대용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의 지원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⁷⁷⁾,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 억제
-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지역 주민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지방분권형·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주거복지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공급 확대, 민간자금 활용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 정책수요계층의 분포를 고려한 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정보전달체계 개편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

77) 미국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내후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지역 내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주거종합계획,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거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형 주거 기준을 제시한다.

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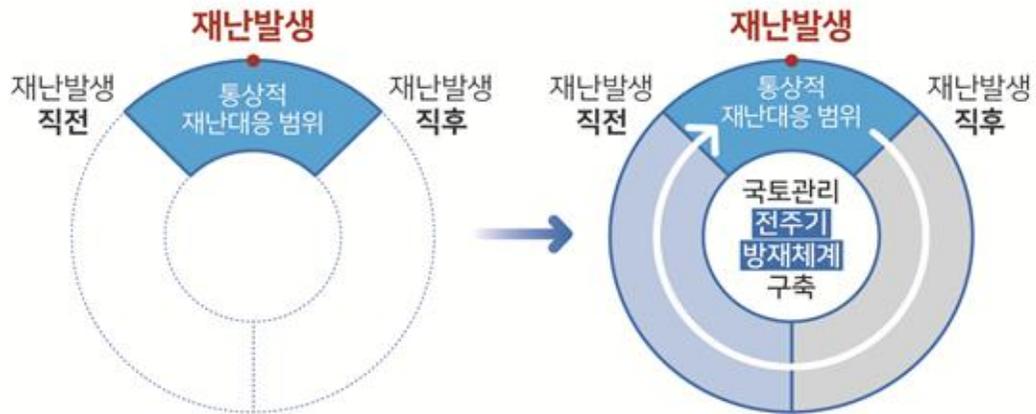
□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

- 재난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
 - 재난발생 직전·직후에 국한되던 통상적 재난대응 범위에서 벗어나⁷⁸⁾, 재난 대응의 범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전 주기 방재체계 구축·운영
 -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재해 위험도 분석과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 주기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과 해소, 노후 기반 시설의 안전투자로 사전적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국토환경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기반시설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력 확충, 관련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기술 개발 등 종합적 대응 강화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을 발굴하고 점검·관리체계 대상에 편입하며, 전력·통신구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소규모 교량 관리 추진
 - 난간, 이음새 파손, 건축물 외벽 노후화 등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구조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보수·보강 의무화
- 국토방재전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재난위험의 과학적 관리
 - 지역별 재난취약 특성과 대응 모니터링 결과를 DB화한 국토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측 향상, 재난예방전략 수립 등 재난 대응 강화

78) UN재난저감국제전략기구(UNISDR: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에 따라 국제적 기준의 국토관리 방재체계 강화 및 국민안심망을 구축

-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재난취약 지역별 지능형 국토 방재 정책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
- 재난발생 시에는 기반시설의 복구 우선순위 결정, 대피시설의 총량적 관리와 피난민 배분 등 사후적 회복을 위해 국토방재전략시스템을 운영

[그림 III-26]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 : 시간적·공간적 확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축

- 기후 영향에 따른 국토 회복력 제고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 토지이용 및 방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폭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 시설의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설계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상향하여 보강·관리
-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통합대응 체계 강화
 - 대형 태풍과 지진, 장기간의 가뭄 등 초대형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보강기준 마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 추진
 - 재난 유형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피난시설의 질을 향상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재난 예방체계와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관련 제도 개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 지역별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 예측 대응 연구와 지역별 재난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대형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산·학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 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주민 등 국토·도시 구성요소의 안전을 고려한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토·도시구조의 체질 개선
 - 지역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재난 공간관리 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지능적인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시스템 지원
- 재난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 상습적 재난 발생 및 고질적 위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정비 및 방재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도시계획에 반영
 - 재난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 기반시설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재난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에 대한 방재기준 강화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재난 예측·대응 역량 향상
 - 지역별 재난 관련 시스템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예측 기능을 향상하며, 재난 발생 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회복력 강화

□ 사람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

-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 주민대피동선, 대피공간, 재해위험지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교육하여 주민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가구당 재해대피소 지정 등 신속한 사전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지휘소 구성, 피난물 지원계획, 지원 교통수단 등 사전 지원체계를 마련
- 국민 안전복지를 세심히 살피는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공간정보 공유체계 구축·운영

- AI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감지와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체계, 첨단기술 적용 안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범죄, 교통, 화재 등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확산

○ 교통체계의 안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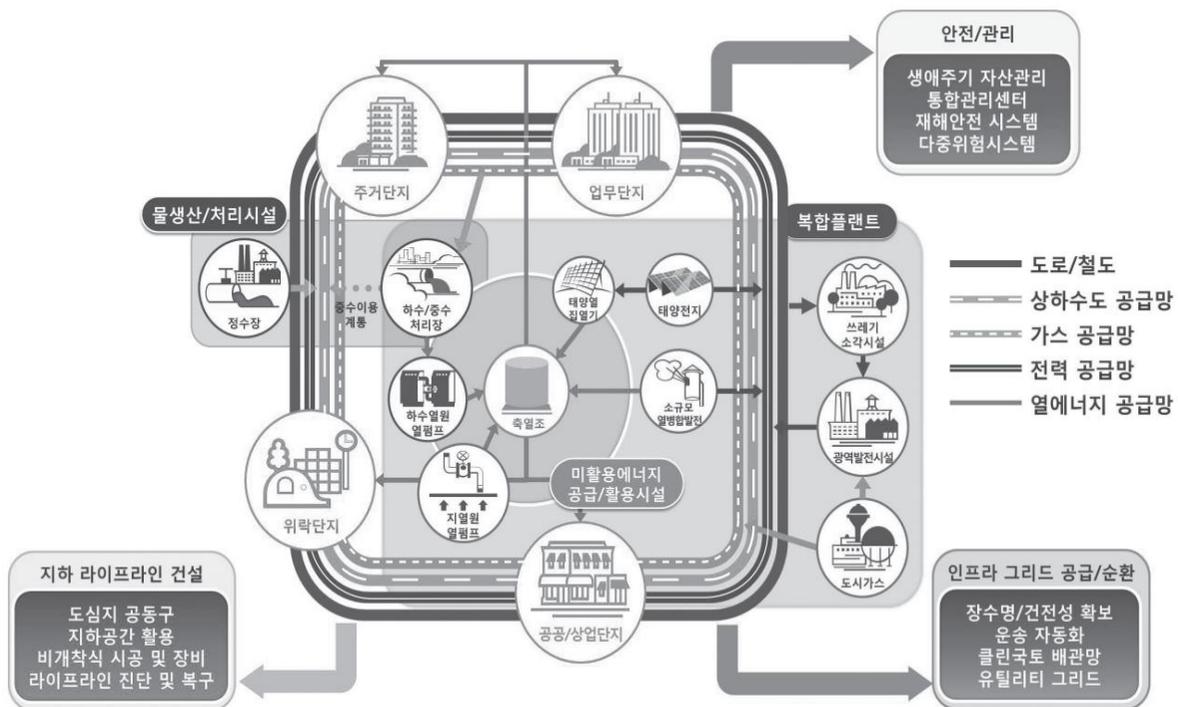
-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해 횡단보도 시간 연장 등 교통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로 개편
- 제한속도 하향⁷⁹⁾,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호체계의 지능형 연동 등을 통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 운영·관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한 사고율 감소 추진

□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의 고도화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 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재정보시스템 고도화

[그림 III-27] 국토 라이프라인 그리드의 개념도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세계 수준의 환경·플랜트연구소 달성을 위한 전략개발. 86면.

79) 도심 내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주행제한속도를 하향(60km/h→도심 50km/h, 주택가 30km/h)

○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 상·하수도, 철도망,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등 지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지하 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정보 공유
- 구축된 지하지도는 현장 굴착·지중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확인하고, 굴착 공사, 주변지역 공사 시 지하지도 활용을 의무화하여 사고 방지
- 지하 공간의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공동구 활용을 확대하고, 정밀안전 점검, 노후 하수관 교체, 상수도 정비, 통신구 난연화 등 안전 확보
- 지하 공간 기반시설의 사용성,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지능형 국토 라이프라인⁸⁰⁾ 도입을 검토하여 국민 안전과 인프라 개선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활용

- IoT·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R&D를 통해 교량·하부·수중·지하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
- 5G 기반 무선 CCTV, 원격제어 드론, 디지털 트윈 도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

계획지침 Ⅲ-3-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기반시설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와 재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복합재난 취약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배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재난취약성 분석하고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¹등급지역의 도시개발 추진 시 재난예방형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전 주기 관점에서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복적·연쇄적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난 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80) 국토 라이프라인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형의 기반 시설(물, 전기, 가스, 통신 등)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4장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1) 계획적인 국토환경관리 저조

□ 국토생태축의 통합적 관리 미흡

- 개발과 이용, 보전과 복원 간의 연계 부족,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개발은 주요 생태축을 단절시키거나 훼손하였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부분 시행
 -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친환경 용지로 볼 수 있는 산림, 하천, 농경지 면적은 1985년 대비 2018년 현재 각각 2.8%p, 3.7%p, 10.8%p 감소 등 생태계 훼손
 - 훼손 생태계 복원은 자연공원, 백두대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생태계 훼손 현황 조사와 사업 간 연계성이 낮아 복원효과 미흡⁸¹⁾
 - 주변 생태축과의 연계가 부족한 개발과 도시의 비계획적인 녹지 인프라 입지는 광역 생태축과 도시 생태축 간의 연결성 부족을 초래

[표 III-6] 국토생태축의 단절·훼손 현황

구분	백두대간 (2011~2016)	정맥 (2011~2016)	DMZ 일원 (2015~2016)	국립공원 (2016)	계
단절	65	768	22	208	1,063
훼손	208	972	123	83	1,386
합계	273	1,740	145	291	2,449

자료: 환경부. 2018.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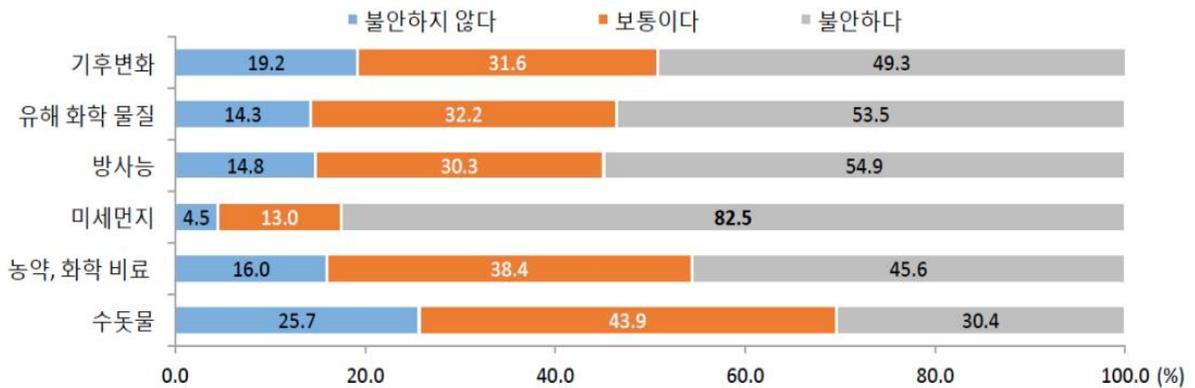
- 환경과 관리, 개발 담당 주체 간 협력 필요성 증가
 - 도시, 산림, 하천, 연안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도시와 산·강·바다를 잇는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통합 관리 미비
 - 생태계의 광역적 영향과 연결성을 고려한 단절 없는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간 협력 필요성 증가

81) 환경부. 201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미흡

-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크게 상회⁸²⁾하고, 폭염, 가뭄, 한파 등으로 도시·농업·해양·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 심화
 -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화석연료 소비 급증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
 - 국토개발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 관심 증가는 정부역할 강화 요구
- 미세먼지에 대한 계획적 대응 취약
 - 서울의 미세먼지($50\mu\text{g}/\text{m}^3$)는 WHO 권고기준 $20\mu\text{g}/\text{m}^3$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나, 정밀 관측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 미흡
 -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방사능, 유해화학물질보다 미세먼지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그림 III-28]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자료: 통계청, 2018. 사회조사.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갈등 심화
 -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간계획 미흡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과의 마찰·갈등 증대

8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산하 국제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2006-2015년 0.87℃ 상승, 우리나라는 국립기상과학원 조사(2018) 결과, 지난 106년(1912-2017) 동안 1.4℃ 상승

□ 매력적인 국토경관 창출 부족

-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도시경관 저해
 - 획일적인 디자인과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건축물 입지, 미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반시설 입지 등으로 도시경관이 저해
 - 경제성을 중시한 주거지역 재개발은 고층아파트 위주로 공간을 조성하였고, 상업지구는 전선·옥외광고물·가로시설물 등으로 가로경관을 훼손
- 대규모 개발 및 난개발에 의한 자연지형 훼손과 비도시지역의 관리 부족
 - 경관자원의 훼손과 인구감소로 방치된 빈집의 증가는 주거환경·경관을 훼손하고 무질서한 농어촌 경관 초래
 - 지역의 역사문화 고려 없는 도로, 철도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지와 유�휴토지의 증가로 인해 환경적 관리 저하 및 국토공간 매력 저하

2) 국토 자원의 활용과 관리 미흡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형평성 저하

- 토지소유의 편중 고착으로 이용의 한계가 있고, 부의 편중 발생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10%가 전체 사유지의 77.0%를 소유하며,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중⁸³⁾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
 -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17년 현재 238.9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0.24%, 2002년의 0.14%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산활동 및 사업보다는 투자 목적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사회적 문제 야기
- 토지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 부족 등 사회적 형평성 저하
 -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투기적 수요에 의한 지가 상승과 토지비용 증대 초래
 - 가치 보전, 환경 보전, 공공개발 등에 따른 규제 손실에 대한 보전 미흡

83) 100분위별 사유지 소유비율은 상위 1%세대가 31.7%(면적기준), 22%(가액기준)임 (국토교통 통계누리). 2017년 말 현재 토지소유자의 지역 내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이며, 세종시(20.0%)는 외지인 소유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활용 미흡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 증가
 - 예상을 벗어난 국지성 호우와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폭 증가 등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발생빈도 증가 및 피해 발생
 -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요구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미급수지역, 지역 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급수지역, 용수공급량, 용수가격 등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 개선 미흡,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하굿둑 해수유통 등 다양한 수자원 갈등 지속
 - 수도관망 노후화 등에 따른 상수원과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요 및 관리비용 증가
- 해양 관리와 이용의 통합성 부족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 특성으로 인해 연안과 해안공간이 넓으며⁸⁴⁾ 7개 부처,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 등 관리기관 간 상충과 갈등 발생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등 연안-해양환경 관리의 외형적 실적은 제고되었으나,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지역 확대로 건강성 위협⁸⁵⁾
 - 해양공간 및 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각종 개발 행위들이 미치는 환경·생태적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미비

2. 여건 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증가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폭염, 장기간의 가뭄 등 극한기상 현상의 비정기적 발생으로 인해 피해 증가, 국민의 불확실성과 위협 증대

84) 연안지역은 국토 전체의 32.3%를 차지, 해양공간은 약 44만km²으로 육상면적의 약 4.4배

85) 2019년 현재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 해양보호구역이 28개, 1,777,449km²로 지정 확대. 반면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2.5%가 감소(1987년 3,203.5km²→2018년 2482.0km², △721.5km²)하고 항만용지, 해양에너지 개발 등에 따라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이 지속(해양수산부. 2018. 2018 전국 갯벌면적조사)

-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극한기상⁸⁶⁾, 온난화와 함께 2020년 3.6조 원(GDP의 0.31%)에서 2050년 6.9조 원(GDP의 0.59%)에 달하는 피해비용 초래 전망
- 기후난민 유입, 농산물 수입가격 상승, 어종의 변화, 해수온도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국토환경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한반도 대기 순환이 정체되어 심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조건 빈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속적인 도시 집중과 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 고층건물 개발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국토환경관리 협력 필요성 증대
 -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주민 참여와 지역 간 협력 필요성 증가 등 관리주체 간의 협력 요인 증대
 -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합의와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감축대상 확대 등 국제적 요구가 증가할 전망

□ 국토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질적 향상 요구 증대

-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체감 가능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도시·환경 등의 총괄적 대응 요구 증대
 - 토지의 공익적 가치 증대, 녹지인프라 확대, 깨끗한 물 공급, 친수구역 이용 수요 증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등 사회적 형평성 요구 증대
- 국토환경의 경관 가치로서 인식 증대
 - 우수한 경관은 국가와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경관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강화
 -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삶의 질 요구에 따라 경관 향상에 관심이 증가하고, 경관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주민으로 확대될 전망
 - 경제성에 밀려 경시해 온 경관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증대

86) 폭염일수가 2017년 7.3일에서 2100년에는 30.2일(RCP 8.5 기준)로 증가 전망(환경부, 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3. 주요 정책과제

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 국토생태축의 구체적인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복원·관리체계 등을 법제화하여 국토 생태기능 증진 및 연결성 강화
-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과 해양·연안수계축으로 구성하고 핵심보전지역, 관리지역 등의 설정을 통한 국토환경 공간관리 원칙 수립
 - 생태녹지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DMZ(군사보호지역+민간통제지역), 능선축, 산줄기 연결망, 광역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보전 및 복원
 - 해양·연안수계축은 생태녹지축과 연계하고, 해양·연안지역 법정 보호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지역 관리 강화

[그림 III-29] 국토생태축 구상



자료: 환경부. 201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토생태축과 핵심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하고, 단절되고 훼손된 지역은 생태복원을 추진하며, 국토 생태기능 증진, 생활환경 문제 해소,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된 보전 및 활용전략 마련
- 국토생태축과 도심지 녹지공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 국토생태축인 산줄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도시지역의 녹지·비오톱 확충을 통해 생태훼손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국토 생태환경의 연결성을 강화
 - 국토 생태축과 도시지역 녹색인프라와 계획적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자원 연계사업 활성화, 재자연화 등 복원과 활력 제고 병행

□ 녹색인프라 확충 및 환경서비스 접근성 제고

- 녹색인프라⁸⁷⁾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 산림, 연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도심지의 공원, 녹지 등 녹색인프라와 연결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환경을 제공
 - 도심지 내에 공원, 녹지 등과 건물의 옥상정원, 공개공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 등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어디에서 거주하든 기본적인 환경서비스를 보장
 - 생활소음, 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고령화, 생활 습관 및 환경성 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산림복지 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인프라의 입지·관리 최적화
 - IoT,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수집시설, 관련 통신망,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녹색인프라의 경관·생태·재해저감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입지·관리 최적화

□ 오염·방치 공간의 복원과 재생

- 오염 공간의 복원과 활용
 - 산업 쇠퇴에 따라 발생한 폐산업공간(브라운필드), 폐시설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생태자연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등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유도

87) 녹색인프라(그린인프라)는 Green과 Infrastructure의 합성어로 1999년 미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서 최초로 언급

- 지자체 등의 공유자산화, 국민건강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능 확보를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기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

○ 방치 공간의 활력 제고

- 도시 노후 불량주거지는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과소 마을은 녹색인프라 확충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휴양·치유공간으로 전환

□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토공간 구현

○ IoT, AI 등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국토·도시 환경문제 해결

- 환경감시·모니터링·예측·관리 혁신, 지능형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기술·산업 생태계 혁신 지원을 통한 국토·도시 환경 관리 강화

- IoT기반 대기오염물질(SO^2 , NO^2 , CO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보 등 활용방안 모색

○ IoT,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녹색인프라를 보급하고, 기존에 보급된 인프라의 친환경 성능 향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도시공간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친환경 산업 분야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

○ 친환경 모빌리티·자동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 친화적인 미래 유망 기술 개발

- 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융합·분석·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분야 R&D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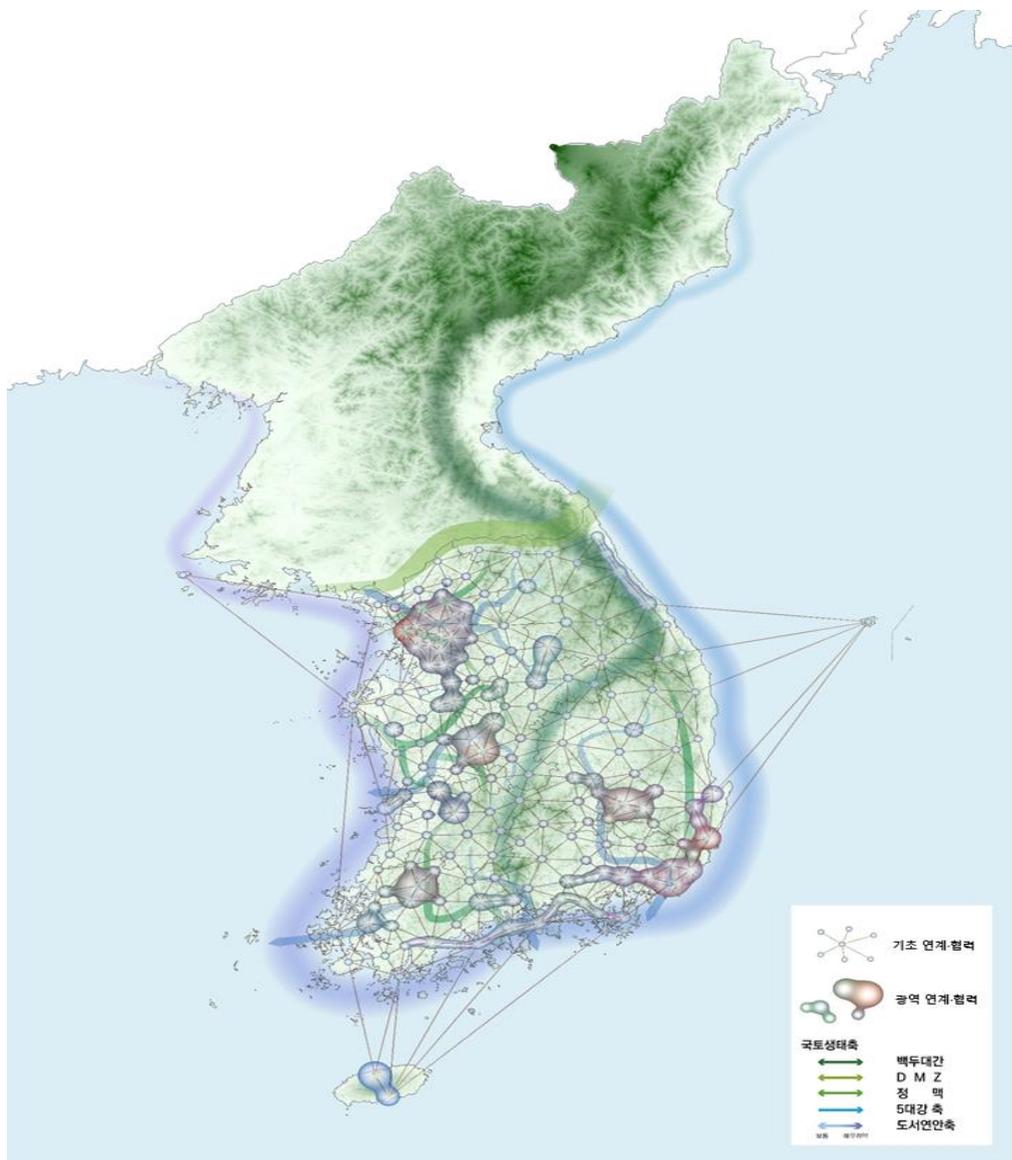
□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국토-환경계획의 수립 및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 민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토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체계 강화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계획, 산지관리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부처 공간계획 간 정합성 강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강화
 -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그림 III-3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구상



[표 III-7]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 전략

<p>전략1.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및 도시 적정 개발과 체계적 관리 - 집약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 재생과 복원을 통한 쇠퇴지역 활력 제고 - 오염·방치 공간의 친환경적인 활용 강화
<p>전략2.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생태축과 도시 자연공간의 연계 강화 -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강화 - 국토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성 제고
<p>전략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저탄소 국토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험 관리체계 구축
<p>전략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린인프라 확충 - 친환경 신산업 공간 조성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산 기반 구축 - 친환경 지능형 교통 인프라 확충
<p>전략5.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단계적 이행 - 환경분야 동북아 협력 확대 -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확립

계획지침 III-4-1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생태축을 복원하고, 파편화된 생태자원을 연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 수립 시 관련 환경계획,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계획, 산지 관리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부처 공간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토양, 폐산업 시설 등 폐공간의 재자연화 또는 기능 회복을 통해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녹색(그린)인프라 확충계획을 포함하고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주민의 환경권과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한 부문·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방안을 실천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
 - 파리협정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감축 등에 대한 이행 노력⁸⁸⁾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도시 물순환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비 용수 확보의 지속가능성 제고, 취약지역 기후재난·재해 안전관리망 확충
 - 도시미기후 분석, 바람길 및 물순환 개선, 도시녹화 사업 등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에 대응한 도시 공간계획 강화
-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적응기반 향상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녹색인프라와 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유도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교통과 연계된 토지이용 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 조성
 - 건축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 에너지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첨단 모빌리티체계 구축
 -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수요관리 강화,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인프라 조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배출원 관리 강화
 -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을 위한 기술연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배출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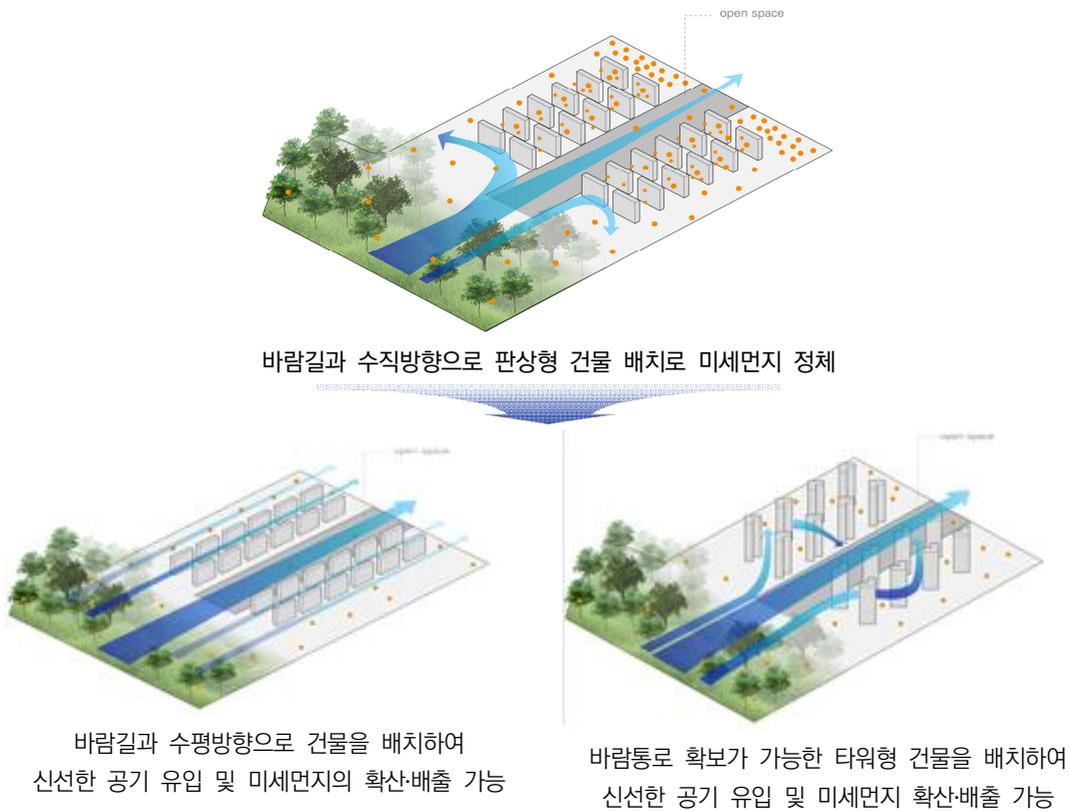
88)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설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미세먼지 영향을 검토하고, 주거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 확대와 친환경 차량 안전·충전시설 기준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 도시 개발 시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공기를 빠르게 유입시키고 정체된 미세먼지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 깨끗한 공기가 도심부 주거지역까지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산림·산지(생성·공급지)에서부터 도심부(수혜지)에 이르는 바람길 전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그림 III-31]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가이드라인 예시



○ 중국 등 인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미세먼지 유입 방지를 위해 중국 등 인접국과 공조하여 관련 연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초국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공조 확대

-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참여
 -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신기후체제(파리협정),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 등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 기후변화, 미세먼지, 해양 등 초국경 환경문제에 공동대응방안 모색
 - 동북아지역 내 환경재난에 대비하여 다자 간·양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과 이전, 역량 배양 등 역내 국가 공동 참여
-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환경문제 대응체계 마련
 -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DMZ 등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공원화 등 중점 관리
 - 남북 경협 시 환경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 선형 시설의 입지 선정

계획지침 Ⅲ-4-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과 웰빙,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에 적합한 실천 프로그램과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생활권 단위 미세먼지 분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의 적용을 검토한다.

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 토지의 공적기능 실현과 토지시장 질서 확립 추진
 - 토지의 공적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검토
 -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에 대응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등 제도 개선 검토, 투자자국가소송⁸⁹⁾(ISD)에 대응 가능한 토지규제 개선

89) 해외투자자가 투자 상대국 법령·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 토지 공시가격은 규모별, 지역별, 특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고, 공시지가와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 시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토지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보전가치에 따라 농산지 전용이익 환수를 차등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계 등을 통한 농산지 보전방안을 모색
- 농산지 보전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농산지 보전직불금 지원, 이익이 높은 개발권 양도 등 규제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손실보상 기준을 정비하여 공익사업 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

○ 국·공유지, 유휴토지 자원의 활용과 공공토지 비축의 효율성 제고

-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등 저·미이용 행정재산과 국·공유지를 생활편의시설과 연계한 공공청사 복합화, 경제활력 수단 등으로 활용
- 유휴농지, 빈집, 방치 건축물 등 유휴토지자원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특성 및 여건에 따른 활용 모색, 토지수급조사를 통해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및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비축 등을 모색

○ 토지정보 관리의 스마트화

- 기관별로 분산 관리 중인 토지정보체계를 연계·고도화하여 스마트 토지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지이용 관리방안 마련

□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 산지의 파편화 방지·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강화

- 백두대간과 주요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며, 이용과 보전의 원칙 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생태적·자연친화적 산지자원 이용의 체계화
- 과학적인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곳은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이용이 가능한 곳은 자연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용 유도
- 이용 가능한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건강지대이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문화지대로 조성

○ 도시 내 녹색생태계 구축 확산

- 도시재생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 숲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숲, 공원, 녹지 등 다양한 녹색생태계 조성
- 녹색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도시 내 녹지축을 구축하고, 녹색인프라와 생활 SOC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와 도시 내 정원문화 확산

□ 전 주기적 수재해 대응과 물 서비스 강화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종합적인 수재해 대응체계 구축

- 기관별로 관리 중인 가뭄과 홍수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신속한 홍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 대응 추진
- 홍수 취약성과 주변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홍수 위협에 대비한 하천정비를 추진
-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안전등급 및 노후도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치수안전성을 강화
-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강화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 상황을 신속히 해소

○ 취수원 다변화 및 안정적 물공급 확보

- 주요 취수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자원 다변화 및 지역 물자급률 제고방안 추진
- 정밀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방법 마련, 물수요 관리 및 하·폐수 재이용 등을 통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 유역단위 이수·치수·하천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 물 순환체계 회복으로 자연성·생태적 건강성 회복 및 활용가치 제고

- 수계 상·하류 간의 댐·보, 저류·방류, 수량·수질·수생태계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하천과 해안을 연계시켜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

- 하천과 지역발전사업을 연계하여 물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수변·수상 문화 콘텐츠 등 특색 있는 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물 이용을 증진
- 장래 수자원시설의 복합 활용 또는 최적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유역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유역별 물 관리 거버넌스로 맞춤형 물관리 구현
 -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등 유역 중심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물 관리 체계 구축
 - 미세 플라스틱, 의약품질, 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질개선 대책 등 유역별 맞춤형 물 관리 방안 마련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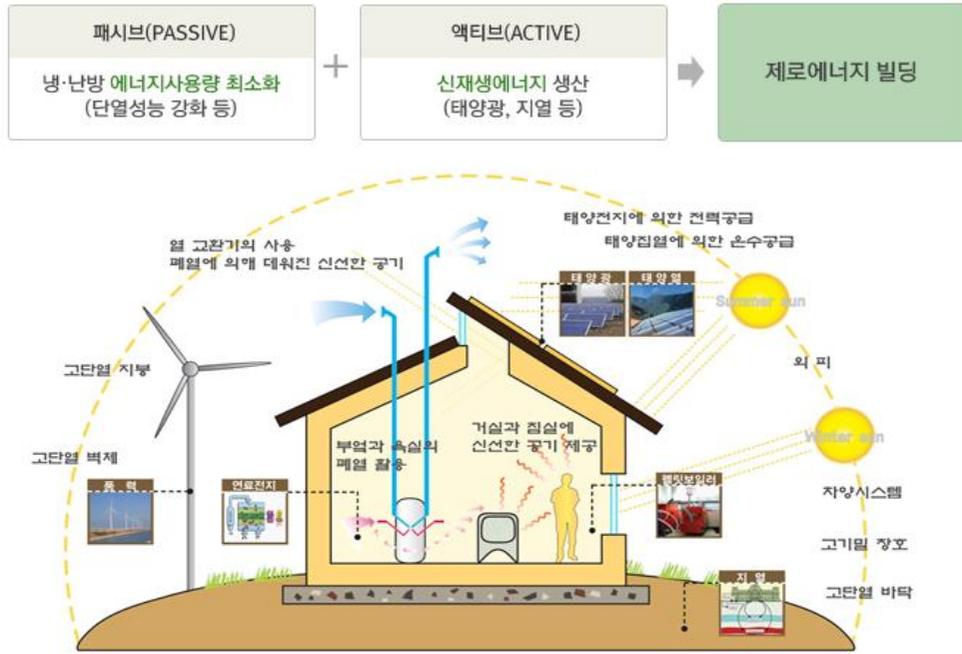
-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인 해양공간으로 조성
 - 연안육역과 해양공간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보전과 이용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시설물 정비 등 휴양공간으로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우려지역 및 생태계 취약지역의 토지이용 연계, 침몰 선박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연안지역의 안정적 관리
- 해양공간의 다차원적 보전·활용을 위한 해양공간이용체계 구축
 - 국가관할 해역 생태계의 통합조사체계 구축, 해양공간정보 조사체계와의 연계 강화,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해양영토 보호와 해양공간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기초 조사 확대
 -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평가·활용 체계 구축, 해양공간의 특성구분·평가 체계 구축 등 과학적 분석·평가에 기반한 해양공간이용체계 구축 및 고도화
 - 해양공간정보를 통합한 개방체계 마련 및 표준화를 통한 정보 활용 확대
- 섬 잠재력 극대화, 내수면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발굴·육성
 - 섬 등 해양관광자원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하수처리, 방제, 쓰레기 처리, 해양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전 추진

- 다양한 여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접근성 증대
- 해양 교육, 해양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해양가치 확산
- 풍부한 연안·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해양공간관리 위상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협력 추진
 -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역량 강화와 참여·협력 활성화
 - 한반도 주변해역의 공간 관리를 위한 남북 간 협력 강화 및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된 도시공간구조 조성

- 에너지 소비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
 - 도시 내 주요 에너지 생산·소비 시설에 대해 수송거리, 시간·계절적 부하변동 등을 고려한 에너지의 공간적 최적화를 위한 토지이용체계 검토
 - 주거 및 상업 용지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고려한 용도지역 설정과 도시기반 시설 중 에너지 생산·수송·소비와 밀접한 시설의 최적 배치 도모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탄소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성능 고도화 촉진
- 에너지 시설 적정입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현
 - 도시 내 태양광, 연료전지 사용 확대 등 소규모·분산형 전원을 확산하고,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을 통해 수요대응형 에너지 소비 촉진
 - 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른 에너지 시설별 적정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되, 난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 수소 등 미래형 에너지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도시 건설을 위해 생산과 저장·이송 기술을 개발하고, 주거·교통 분야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용성 검증

[그림 III-32]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양한 시범사업과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도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전략,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하며,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화, 녹색 건축산업 혁신역량 제고, 국민 참여 등 활성화 대책 추진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강화

○ 환경갈등 예방시스템 도입과 역할 분담

- 고도화된 환경공간 정보시스템 데이터에 근거하여 주민 참여, 보상 협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함으로써 환경 갈등 해소
- 수리권, 물분쟁, 물순환 등 시대적 여건에 맞게 물 관련 법령을 체계화·구체화 하고 분산되어 있는 법령과 계획을 유역별 관리기반에 맞춰 정비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자원 관련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 에너지 시설이 밀집한 도시의 환경·안전·경관 영향에 대한 입지 기준 마련
 - 경제성·환경성·안전성 이외에 에너지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경관 조화, 도시 내 에너지순환 최적화 등을 고려한 에너지시설 입지기준 정비
 - 노후 에너지 시설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강화와 개선 추진
 - 에너지 시설 입지 시 생활인프라와 복합화 등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갈등발생 시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 해소 추진

계획지침 Ⅲ-4-3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산지, 수자원, 해양, 에너지 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원 특성에 맞는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역권별로 산-강-바다가 조화되도록 수량·수질·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의 파편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대형·노후 에너지시설 입지의 사회적 수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관조화, 에너지순환 최적화, 주민참여 및 갈등조정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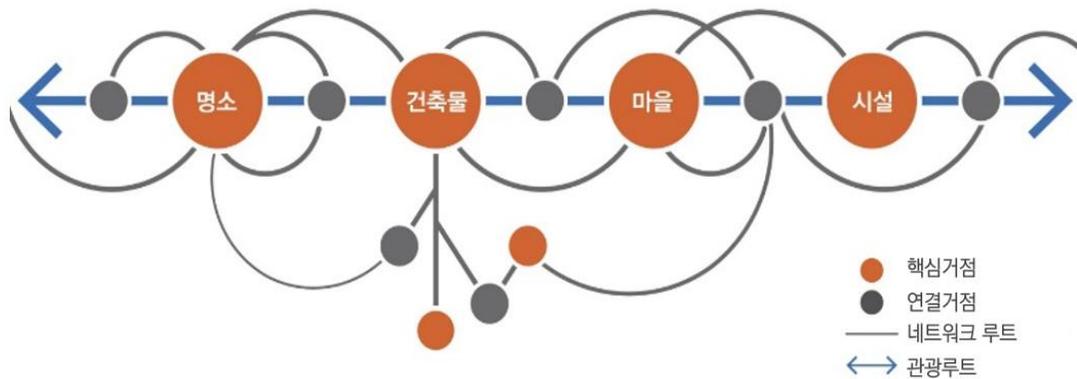
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 고유 경관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통한 국토의 매력도 제고
 - 우리 국토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산-강-바다를 보전·복원·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매력을 유지
 - 한옥 등 대표적인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공공건축물 등 근대적인 현대 건축물을 경관자산으로 관리하고 복원하여 매력 있는 국토경관 창출
- 지역의 경관자원을 발굴·관리하여 특색 있는 경관 구축
 -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보존·관리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관 자원과 새로운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관 정체성 확립
 - 지역 주민의 경관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경관인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경관 경쟁력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심 제고와 역량 향상

- 사찰 등 문화경관자원, 전통시장, 마을 등 생활경관자원, 도로, 골목길 등 가로경관자원 간 연계와 조화를 통한 특색 있는 국토 경관 창출
- 주요 기반시설의 다기능화와 경관 품격 제고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국가 주요 SOC 시설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품격 제고
 - 기존의 시설물은 조명 부착, 벽화, 외벽 리모델링 등을 통해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물은 기획 단계부터 경관 요소를 고려

[그림 III-33] 경관도로 구상



□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 공공건축물 경관 개선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고, 사업시행 단계별로 경관요소를 검토
 -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의 역량 보완을 위해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
- 통합적 도시경관 관리 및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 도시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스카이라인, 경관 시각축, 주요 조망점 등의 관리를 위해 경관심의 원칙 재정립 등 경관관리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
 - 새롭게 조성되는 경관요소와 기존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내실화하고 경관 관리기준을 대상별로 구체화

- 소규모 건축물, 노후건축물, 달동네 등 도시경관 취약지역의 정비, 도시 재생과의 연계 등을 통한 경관관리 소외대상 해소

□ 자연과 조화된 농산어촌 경관 조성

- 농산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경관관리
 - 폐교·폐가 정비, 유희지 관리 등 공간의 유희화에 대응하여 농촌 환경을 재정비 하고, 농어업유산, 경관작물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다움 제고
 - 토지이용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물 난립, 나홀로 입지 등 농촌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방지
- 농산어촌 지역의 매력 있는 경관 조성 유도
 - 농어업 폐기물, 쓰레기, 오·폐수, 각종 악취 등 농어촌 지역 환경저해요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깨끗한 농어촌 경관형성 유도
 - 농산어촌이나 농공단지, 어항, 포구 등 생산기반시설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 경관 향상

□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경관 향상

- 국민의 삶터, 일터 등 일상생활 속 경관 개선
 - 공동주택, 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상업 이나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의 경관 개선과 디자인 향상
 -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교, 육교 등 기초 생활 인프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체육공원 등 휴식·여가공간의 품격 향상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시설물, 보도, 벤치, 가로등 등 가로환경 시설물, 도로표지판, 도로 유도선, 지하철 노선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 등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
 - 버스정보시스템 등 IT 기술과 연계한 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을 고려

계획지침 Ⅲ-4-4

- 지방자치단체는 매력적인 경관 창출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적 차원의 경관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관리하고, 주민 일상생활공간의 경관 개선에 노력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1.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 서비스 격차와 대도시권 혼잡 심화

□ 국가 교통망 골격 형성과 서비스 격차 발생

- 도로,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교통망의 골격은 형성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미흡⁹⁰⁾
 - 도로 총연장은 110,714km로 국가목표 간선도로망(7×9+6R, 7,330km)의 약 65%인 4,767km의 고속도로망 구축·운영
 - 철도 총연장은 5,444km로 일본(7,457km), 프랑스(29,190km), 독일(33,440km), 영국(15,848km)에 비해 스톡 규모가 부족⁹¹⁾할 뿐만 아니라 수송분담률 미약⁹²⁾
 - WEF 글로벌경쟁력 보고서(2019)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전체 13위, 인프라 부문 6위이나 도로 연결성(26위), 철도 밀도(23위), 공항 연결 정도(16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도로 연결성, 철도밀도 미흡 등은 지역 간 시설 및 교통서비스 격차 유발
 -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축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였고 단절구간 및 교통 수단 간 연계, 지역 간 연결성 미흡으로 인한 교통낙후지역이 발생
 - 철도는 고속철도 지역과 일반철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동일노선의 전철·비전철 혼재, 철도망 확충에 따른 병목구간 발생,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병존으로 인한 열차운영 효율성 저하와 안전문제 야기
 - 전국 지역 간 평균통행시간은 2017년 현재 171분(간선도로망 기준)이며, 주요도시 접근성 분석 결과(도로+KTX), 수도권과 충남 내륙의 접근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20% 양호한 반면, 남해안, 강원도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은 평균에 비해 40%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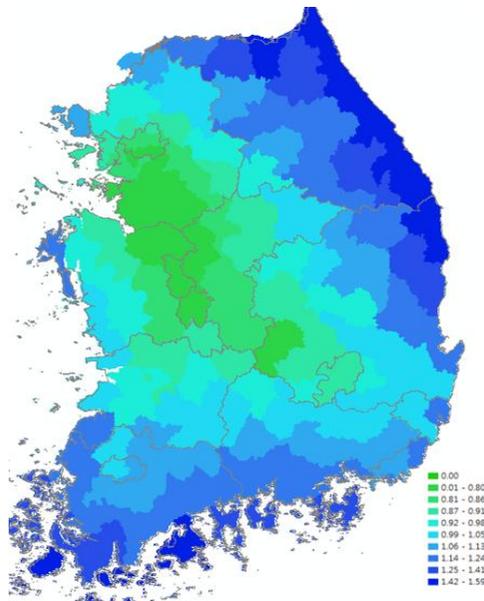
90)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간선도로 연장은 OECD 중위권 수준

91)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경제규모, 소득수준, 국토면적, 인구밀도, 교통량 등을 감안한 국제비교(OECD 17개국) 결과, 적정 철도연장은 6,000km로 제시(한국교통연구원, KDI)

92) 2016년 여객수송률 기준, 철도는 4.4%, 지하철 10.8%, 도로 84.7%(e-나라지표,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5)

- 도로이용자의 통행패턴 변화에 따라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국가도로망을 재편하고 교통안전, SOC 노후화,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비책 필요
- 국가도로망을 권역별로 도시 간, 주요 시설과 연결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망으로 골격 재편
- 고령자, 화물차,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계획 및 설계·운영 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도로 SOC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 위주의 SOC 투자지침에 따라 도로시설의 지역 간 편차 심화

[그림 III-34] 주요 도시의 접근성 (도로+KTX 기준)



주: 국가교통DB 네트워크 활용하여 분석

자료: 국토연구원, 2019. 포용국토를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 대도시권 혼잡 심화

-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증가로 교통 혼잡 증대
-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의 시간 차이, 대중교통 이용의 저조⁹³⁾와 자동차 수 증가 등으로 대도시권 혼잡 가중⁹⁴⁾

93) 대도시권을 비롯한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어(2016: 39.3%→2018:38%) 교통혼잡 악화 (e-나라지표, 도로교통 혼잡비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48_

94) 도시부 혼잡비용 : ('10) 18.1 → ('15) 21.3조원 / 자동차 수 : ('06) 1,643→ ('17) 2,253만 대 (e-나라지표, 자동차 등록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57)

-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왕복기준)은 58분(수도권 80분)으로 OECD 평균 28분에 비해 약 2배 수준⁹⁵⁾이고, 출퇴근 피크시간대 대중교통의 혼잡도는 광역철도 175%, 광역버스 132%⁹⁶⁾로 국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
-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의 한계
 - 대도시권 혼잡 문제는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할구역이 정해진 지자체의 한계, 지역 간 갈등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
 - 대중교통의 굴곡진 경로, 대기과 환승 등으로 평균 출퇴근 시간이 자가용보다 1.4배(약 30분) 더 소요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 자가용 의존도⁹⁷⁾ 심화
 - 연계 교통 간 환승센터 등 시설 부족과 긴 환승거리 등 이용의 불편으로 연계 교통 활성화와 교통 수요의 분산 미흡

2) 교통·물류 서비스와 스마트시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급

□ 물류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저하

-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 심화 및 지역공항 활성화 미흡
 - 글로벌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중국⁹⁸⁾,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대부분의 국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여객수요가 많은 제주, 김해, 대구공항 등을 제외하면 다수의 국내 지방공항은 여객 및 화물실적이 저조해 지역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⁹⁹⁾
 -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첨단 기술을 공항 운영에 접목한 스마트공항으로 고도화되어 서비스 편의 향상 전망
- 글로벌 허브항만 구축¹⁰⁰⁾에도 불구하고 항만인프라 효율성과 기여도 하락

95) OECD. www.oecd.org, 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왕복 평균기준)

96) 2019 광역교통 비전, 2019.10, 국토교통부

97)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대중교통 38.7%, 자가용 57.6% 수준(광역교통비전 2030, 2019.10, 국토교통부)

98) 중국은 '19.9월 단일 터미널로는 세계최대 규모의 베이징 다싱 신공항을 개항, 서우두공항과 합산 시 '25년까지 약 1.7억명 규모 여객 처리 가능

99) 여객 및 화물운송의 비중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4개 공항이 15개 공항 전체 대비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국내 지방공항은 미미한 수준

100)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17), 환적화물 세계 2위('18)로 환적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으며, 광양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항만으로 성장

-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화물운송 기여도에서 항만부문의 기여도 하락¹⁰¹⁾
- 세계 주요 항만은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4차 산업기술 도입 등 물류여건 변화 대응은 미흡
- 글로벌 물류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우리의 물류 경쟁력은 미흡
 - 총물동량이 지속 증가¹⁰²⁾하는 추세에서 권역별 경제·정보 물류 네트워크가 강화¹⁰³⁾되고, 국가별 인프라 개선 등으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 심화
 - 우리 물류산업은 낮은 생산성, 국제 운송 경쟁력 부족, 물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경제력 대비 물류경쟁력이 낮은 반면,¹⁰⁴⁾ 세계적인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물류의 자동화·스마트화를 가속화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필요

-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
 -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세가 예상되며, 2023년 약 7,17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¹⁰⁵⁾
-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신도시 내 인프라 보급 위주로 진행되어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스마트시티 모델을 육성하는 데 한계
- 최근 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성장에 맞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통해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기존 도시와 노후 도심에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방안 발굴 필요

101) 2013년 아시아국가 중 3위(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한국 3위)를 기록했으나, 2014-2017년 기간 동안 경쟁국인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에 추월당하는 현상이 발생

102) 총 항만물동량은 '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연평균 3.85%), '4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전망

103) 권역별 자유무역협정(FTA) 단계에서 더 나아가 경제연대협정(EPA)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초광역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EPA는 FTA 협약에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인력이동, 비즈니스 환경 정비 등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한 협정)

104) World Bank 물류경쟁력 순위는 '18년 23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19년 13위

105) MarketsandMarkets, 2018

2. 여건 변화와 전망

□ 교통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로 관리 필요성 증대

-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교통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향후 노후화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 시설물 안전법상 1,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교량 및 터널 시설물 (15,283개소)¹⁰⁶⁾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전체의 7.7% 수준(1,181개소)으로 현재의 노후화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
 - 하지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설물은 36.7%(5,607개소), 10년 미만 시설물은 38.9%(5,939개소)로 향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전망¹⁰⁷⁾
 - 준공 30년 이상 1, 2종 시설물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인 안전등급 C 이하 시설물은 33.0%(390개소)를 차지하여 향후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 확대 예상
- SOC 시설의 수명 연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소요 증가 전망
 - 현재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 유럽 등의 유지보수·보강(50% 내외) 사례를 고려할 필요
 - 도로는 노후화 진행으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철도도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관리와 함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성 증대

□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서비스 정책수요의 다양화

- 관광, 여가, 업무 목적의 지역 간 통행수요 충족 요구
 - 혁신도시 등 신규 균형발전거점 조성으로 인해 국토공간구조가 분산되고, 여가 중시 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 수요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 요구

106)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종 시설물 중 교량, 터널 기준('18.12.31.FMS등록기준)

1종시설물: (교량) 특수형식 또는 500m 이상 등 도로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 또는 500m 이상 등 철도교량 (터널) 1,000m 이상 또는 3차로 이상 등 도로터널, 고속도시철도 터널 또는 1,000m 이상 등 철도터널
2종시설물: (교량)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 100m 이상 등 도로교량, 100m 이상 등 철도교량 (터널) 1종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 고속일반국도 터널 등 도로터널, 특별사광역시 내 등 철도터널

107) 30년 이상 비율 : 10년 뒤('28년) 24.2%(3,692개소), 20년 뒤('38년) 60.8%(9,299개소)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종 시설물 중 교량, 터널 기준, '18.12.31.FMS등록기준, 신규 등록 시설물 미고려)

- 도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방문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 승하선 시설 부족·낙후 등 기반시설 미흡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고속 서비스 등 차별화된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 결절점의 역할 확대

○ 교통 안전의 중요성 증가

- 자동차와 교통시설의 안전도가 향상되면서 사망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¹⁰⁸⁾이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아¹⁰⁹⁾ 교통안전 정책의 내실화 요구

[표 III-8] 도로 교통사고율 변화

(단위 : 명, %)

연 도	자동차 1만 대당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2008	2.9	166.3	12.1	697.4	16.0	926.1
2017	1.7	128.1	8.1	627.5	11.5	884.5
연평균 증감률	-5.8%	-2.9%	-4.4%	-1.2%	-3.6%	-0.5%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

-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 일반 성인인구와 다른 통행패턴을 보이는 고령인구를 고려한 교통정책과 횡단보도 통행 시간 증가 등 교통시스템 개편 요구
- 인구감소에 따라 압축형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 간 고속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농어촌 등 교통낙후지역은 수요응답형 서비스 필요
- 교통정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수요자 이용의 단순화·일원화 요구 증대

108)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29위/30개국)으로 3배 수준
 보행 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로 2배 수준

109) 2018년 보행 중 사망자 1,487명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 개인용 이동수단 등장으로 도로 체계 개편 요구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¹¹⁰⁾됨에 따라 충전소, 통신·교통관제 등 도로 인프라의 첨단화와 안전 시스템 구축
 - 소형 모빌리티 등 개인용 교통수단이 확대될 전망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보행자로만 이뤄졌던 도로 체계의 전면 개편 요구 증대
- 드론 확산에 따른 항공교통체계 개편 필요
 - 레저용, 산업용 교통수단으로서 드론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드론의 기술 향상과 상용화에 따라 항공교통체계의 3차원적 개편 필요
 - 항공 교통수단 증가에 따라 관제 시스템의 확충과 혁신이 필요하며,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교통수단의 다양화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 필요
 - 자율주행차, 드론, 하이퍼루프, 대심도 고속철도 등 미래형 혁신 교통수단의 등장은 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친환경 이동수단 개발·보급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소 등 기반시설 확보 필요

□ 데이터 기반 국토관리에 따른 정보 보안 필요성 증대

- 모든 교통수단의 정보화와 개인정보 수집 대상의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보안문제, 시스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필요성 증대
 - 블록체인 등 정보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며, 공공시설의 정보 보안에 대한 정부 역할 증대

110) 2030년 수소차와 전기차가 신차의 20~30%를, 자율주행차는 레벨3 이상, 신차의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정부부처 합동, 2019.10, 「2030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3. 주요 정책과제

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고속 교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 X축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
 - 국가 간선도로망의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고속 도로서비스를 확대하고, IC 설치 등 접근성 제고와 스마트톨링 등 도로 운영의 스마트화 추진
 - 제주 제2공항, 김해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서비스 강화
-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고속서비스와의 연결성 강화
 - 도로 단절구간의 연결, 기존 철도의 전철화·고속화, 간선·지선 버스노선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 기존도로 정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환승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고속도로 IC, KTX 정차역 등 고속서비스 결절점과 연결성을 강화
 -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를 통해 교통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최적의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모바일 플랫폼 정보서비스를 강화
 -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전국의 주요 지점 간 교통량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수요에 기반한 교통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을 검토

□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 교통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간선도로망(7 X 9 + 6R) 계획의 개편을 통한 국가 도로네트워크 보완
 - 성장에서 성숙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국가간선망을 신규건설 위주에서 유지관리 및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등 전략적으로 운영
 - 도로망의 단절구간 보완 및 연결 강화로 네트워크형·순환형 국가간선망 완성

- 수도권 내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수도권 고속도로망 보완 및 완공
- 국가도로망의 권역별 통합운영관리 체계 구축
 - 여객·화물 통행수요가 높은 국가도로망을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축 단위의 통합 구축·운영관리 추진을 통한 전략적 국가도로망 관리
 - 대도시 간 및 중소도시 간선도로축의 우회율 개선과 속도 개선
- 국가도로망의 이동 효율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보완
 - 국가도로망의 이동성, 접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도 및 국지도 도로망 네트워크의 재편 및 보완
 - 국가물류거점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망의 건설 및 운영, 관리체계 강화

□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 국토공간을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철도망 구축
 -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X자형 국가철도망 지속 추진
 -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수도권 내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 해소
 - 기존 철도 인프라의 용량 부족 해소, 단절구간 연결과 시설 수준 동일화
-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한 체계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을 수립,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 및 낙후철도 고속화 등을 통한 포용 성장 실현
 - 수송력 증강 등을 위한 기존 철도 인프라의 용량 부족 해소
- 국가철도망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철도 운영
 - 단절구간 연결 및 단일노선 철도시설 수준을 동일화하고 투자 대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연계노선 발굴
 - IT 기술을 접목한 철도시설 관리 효율화 추진
-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 대비

- 경의선, 동해선 등을 연결하고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 검토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6개 참여국(중국·러시아·몽골·북한·일본 및 미국)과의 외교적 네트워크 강화

□ 광역대중교통 혁신과 협력·조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 대도시권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급행노선 검토 등을 통해 광역 고속 서비스 범위 확대, 일반 광역철도는 대피선 신설 등을 통한 급행서비스 확대
- 비수도권 역시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검토
-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 조기완성으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촉진하고, 주요 간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심도 지하도로¹¹¹⁾ 신설 검토

[그림 III-35] 광역대중교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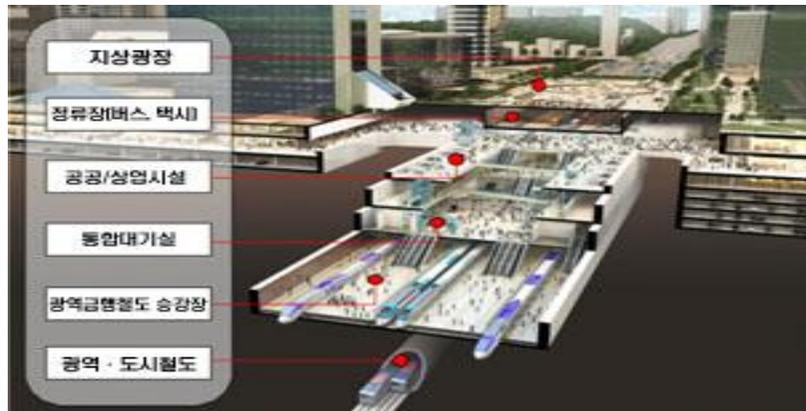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10. 광역교통 비전 2030.

111) 대심도 지하도로의 지하부는 자동차 도로로, 지상부는 BRT, 중앙버스차로 등 각종 대중교통 이용자로 활용

○ 버스·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를 향상, 수요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 M버스 확대, 광역 BRT 구축사업 확대, 고속 BTX¹¹²⁾ 도입 등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출퇴근 예약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향상
-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철도역, 터미널 등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센터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
-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과 안전 강화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그림 Ⅲ-36]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10. 광역교통 비전 2030.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협력·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운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광역교통 문제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조정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¹¹³⁾
-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를 간선축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지방대도시권은 주요 교통축 중심 광역철도서비스 확대와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
- 지자체 협력·조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혁신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존 도시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상생적 교통체계 마련

112) BUS TRANSIT EXPRESS(광역교통비전 2030, '19.10, 국토교통부) : 고속 전용차로, 종점부 지하 차도 및 환승센터 설치로 기존 보다 30% 이상 속도를 향상하는 버스교통체계

1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위원회, 5대 권역별 위원회, 실무 위원회 등 체계 마련(광역교통 비전, 2019.10, 국토교통부)

[그림 III-37]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2030)

□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를 간선축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급행철도망(GTX-BC) -외곽순환 복층화 검토 및 제2순환 완공 -S-BRT(왕숙), 환승센터 구축(덕정, 별내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지역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간선망(GTX-A) -간선도로 확충 (구라-세종 오산-용인 등) -신시가지를 트램, BRT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방향 광역급행망 확충 (GTX-BC, 신안산선) -외곽순환 복층화 검토 및 제2순환 완공 -S-BRT(부천대장 등), 환승센터 축(부천운동장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급행철도(GTX-A) -제2순환(김포-양주) 완공, 제1, 2순환망(서울-문산 등) 연결

[그림 III-38]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2030)

□ 지방 대도시권은 주요 교통축 중심 광역철도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동해 지하고속도로 (사상-해운대) 검토 -양산-울산축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확충 -거점역 환승센터 (울산역, 태화강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추진 -군위축-경산축 혼합해소 위한 광역도로 신설 검토 -거점역 환승센터 (서대구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순환 고속도로 단절 구간(분량-진원) 완공 -광주2호선(시청-광주역)-시청) 구축 -거점역 환승센터 (광주송정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서울-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환승센터(유성터미널) 구축 및 세종시 인접도시 (공주, 조치원) BRT 연결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19.10. 광역교통 비전 2030.

- 중앙정부는 도로·철도 등 국가교통기간망의 전략적 운영과 교통수단 간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항·항만·KTX역 등 광역교통거점과 지역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통행패턴·이동편의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관리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도시권 교통서비스 개선대책과 지역 간 교통인프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노후 인프라의 적기개량을 통한 안전성 제고

- 노후 인프라의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생활안전 위협요인 제거를 위해 긴급 점검,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SOC 시설물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
 -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등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시설물 점검 내실화 및 소규모 취약시설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노후 교통SOC에 대한 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와 개·보수 시행, 안전시설의 현대화
 - 댐·저수지·하천 등 방재시설의 안전투자 확대, 상수도·하수도·열수송관 등 노후관로 조기교체 개·보수, 통신구·공동구 등 지하구의 난연케이블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
 -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의 안전 투자를 촉진
-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위해 노후 SOC의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별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은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 유지관리 신기술을 통한 안전한 SOC 관리체계 구축
 - 시설물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SOC 관리체계 마련과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해 지반정보·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 노후 SOC 점검·진단 등에 IoT·5G·AI 등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고, 적기 유지관리·보강 실시를 위한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
- IoT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노후인프라 개량 및 성능고도화
 - 도로, 철도 노후인프라 점검과 관리를 위해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5G 활용 등을 통한 인프라 정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환경 전환
 - 도심 내 교통사고 대폭 감축을 위해 하향된 주행제한속도(60km/h→도심 50km/h, 주택가 30km/h) 정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주택가 등에 차량의 저속 운행 유도를 위한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도입 등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조명시설 확충
 - 도심 상점가 도로의 폭을 축소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만 통과하도록 하고 도로변에 보행자를 위한 휴식·문화·상업공간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구축
 - 어린이 왕래가 잦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표시 보도·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 정차, 속도 감소 등 어린이보호 운전문화 정착·확산
- 고령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

-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전통시장, 병원 등 여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등 시설 정비 추진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개선 등 시스템 개편
- 장애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
 -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무장애설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성을 도모하고,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 안전 중심의 국가도로망 계획 및 운영체계 구축
 - 국가도로망 계획 및 운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 평가지표 중 교통안전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국가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운영
 - 차량운전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안전시설(휴게소 및 쉼터, 조명, 차량유도시설 등) 확충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확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개인용 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한 안전도로 구현

□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 교통취약지역 교통SOC의 질적 수준 향상
 -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차 분리 추진, 통행속도 관리 등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치사율이 높은 농어촌지역 도로망의 질적 수준 제고
 -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도로망의 투자평가방식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 결정의 다양화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
- 교통취약지역의 수요응답형 교통 확산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 준공영제·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100원 택시·여객선, 유동적 노선버스 운영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확산
 -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

○ 교통 취약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저조한 지역은 행정구역을 벗어난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부족한 교통인프라의 공동투자를 통한 주민 교통편의 개선

계획지침 Ⅲ-5-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교통인프라의 실태 파악과 적기 유지보수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포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3)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통체계 개편

- 육상교통은 자율주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상용화와 개인용 소형 교통수단의 확산에 따른 도로 체계 전면 개편 검토
 - 친환경차 라인 구축, 성능 우위 유지·확대로 친환경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보급 가속화
 -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점검수리를 위한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첨단 도로시설의 실증을 거쳐 주요 도로에 적용하고 성능점검, 보험 등 관련 제도 정비
 - C-ITS 등 도로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동차와 인프라 간의 쌍방향 정보교환 시스템을 확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의 안전 확보
 -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정보, 자율대중교통 등의 실증 테스트 및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 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조성
 - 플라잉카(Flying Car) 등 신 교통수단 서비스 실용화와 개인용 소형 교통수단의 확산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방지 등 새로운 안전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전용도로 신설 등 도로체계 개편 검토

- 항공교통은 소형 개인비행기, 에어택시,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고 산업용, 레저용, 교통수단용 등 용도별 대응체계를 구축
 - 드론, 에어택시, 사업용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하늘길 구축을 위해 공역 및 관제 등 항공교통 관리체계 구축
 - 항공 교통수단 확산에 따라 통신, 충전소, 정비수리소, 보험 등 새로운 항공 인프라 구축을 연구하고,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검증 추진
- 지하교통은 GTX 등 대심도 교통수단의 확충, 하이퍼루프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체계 개편 검토
 - 대심도 교통수단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지하역사 개편 검토
- 해상교통은 자율운항 능력을 갖춘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스마트 선박과 항만, 물류자동화 등의 연계를 통한 가치 향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면허체계 정비와 안정적 운수생태계 조성
 -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 교통수단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제도와 여객 면허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종사자의 새로운 교통서비스로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동시장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독과점 방지장치 마련

□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 교통 이용서비스 혁신
 - 실시간 정보, 서비스 다양화 등 교통 정보제공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모바일 플랫폼을 결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¹¹⁴⁾ 확대
 - 광역알뜰카드 전국 확산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GTX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기간, 이용시간대 등 이용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할인권·정기권 도입 등 요금체계 개편 검토
 - 프리미엄 고속버스 확대, 광역급행버스 등 대중교통의 고급화 추진

114)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자동차 외에 버스나 철도 그리고 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고 통행자에게 최적 수단의 조합을 제공하는 서비스

- 수요 대응형 O2O¹¹⁵⁾ 서비스 확산
 - O2O 서비스 확산에 따른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업계 체계 개편과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업무영역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병행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개편
 - 교통카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과 배차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 확충 등 인프라 개선

[그림 III-39] 교통수단 통합 결제 개념도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한 번 결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하는 스마트시대 열린다.

□ 공항인프라 혁신을 통한 글로벌 항공강국 구현

- 공항인프라 스마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 여행객의 집에서부터 공항 출국까지 정보제공, 체크인·수하물 처리, 생체인식 출입국 수속, 보안검색 선진화 등 공항인프라의 스마트화로 여객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공항을 최첨단 기술 적용의 장으로 활용
 - 전국 KTX 및 도시철도 등과 공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공항접근성 강화, 정시성 확보 및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 이용자 중심 항공교통서비스의 질 제고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115) Online to Offline

○ 미래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 인천공항은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공항은 항공-관광 연계 협력을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비즈니스 수요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항 인프라 확충
- 도서지역 등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울릉·흑산 등 소형 공항 건설, 항공레저·훈련비행 수요 등에 대응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계획지침 Ⅲ-5-3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인프라 신설이나 개량 시 새로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 시장의 변화에 맞춰 물류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택배·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화물차 기반의 전통육상물류는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위·수탁제, 다단계 등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력 제고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확장 지원
- 일자리 매칭, 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우수 인재가 물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 갈 융합형 물류인력을 양성
 -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물류 혁신 아이디어, 신기술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마케팅 지원·투자유도 등으로 성장 지원

□ 도시물류 거점 육성과 철도 물류 효율성 제고

- 생활밀착형 도시물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유형 물류시설 개발 지원
 - 택배 등 생활물류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 국·공유 유희부지 발굴 등을 통한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 지원
 - 트럭베이, 무인택배함 등 말단 배송인프라 구축도 지원하여 도심물류체계 효율화 및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
 - 도심의 높은 지가를 감안, 다수의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육관·영화관·공원 등 선호 시설을 물류시설과 복합 개발하는 주민친화형 물류인프라 개발
-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
 -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도화물역을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
 - 철도화물열차 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표준화·정보화·고속화 추진
- 교통·물류 거점과 지역발전 연계
 - KTX, 공항, 항만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개발 등 경제권 형성
 - 교통거점에 환승센터 설치 등 복합화, 교통거점과 지역 교통과의 연계 강화, 지역 물류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한 활용 극대화

□ 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와 지역발전 연계

- 국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 항공수요의 증가 및 허브공항 경쟁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제4 활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5단계 확장을 검토
 - 신선화물, 의약품 등 특송화물, 해외직구 등 화물수요 변화에 대응해 공항 배후 물류단지의 화물처리시설 확충 및 복합화 추진
-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Air-City)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 개발

- 공항 주변에 관광·레저, 국제업무·컨벤션, 쇼핑 등 다기능 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 위락단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
- 공항과 배후도시 지원기능이 연계된 Air-City를 개발하여 공항 지원기능 강화, 신규 항공수요 창출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공항주변 산업단지 유치 등 공항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 강화
- 지방공항은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별 항공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특히 방한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별 인바운드 항공관광 모델 구축

□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 스마트항만¹¹⁶⁾ 도입을 통한 물류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제고
 - 자동화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항만시설의 효율성을 구현하고, 자동화 항만장비와 터미널 간 정보가 실시간 공유 활용하는 통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선박·트럭 등 운송체계들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물류체계 운영
 - 지역별 항만의 특성화 전략¹¹⁷⁾ 수립을 통해 물류경쟁력 제고
- 항만서비스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 하역, 보관 위주의 항만기능을 서비스영역¹¹⁸⁾으로 확대하고,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여 배후단지 기능을 배송·제조·가공으로 확대
 - 크루즈 부두, 해양 문화공간 조성 등 항만을 해양레저 관광 문화와 접목시켜 해양관광 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116)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를 통해 물류흐름을 자율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하여 ①자동화, ②정보체인화, ③지능화 단계를 거쳐 자율운항선박·차량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물류체계로 발전

117) 부산항 신항 - 동북아 중심항, 광양항 -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 제주신항 - 해양관광 허브항만, 서해권 신항만 - 대중국 교역 중심항, 동해권 신항만 -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 육성 위한 항만

118) LNG병커링터미널, 수리조선소 등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기능 도입

○ 항만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 강화

- 신항만의 배후도로를 주요 도로망과 직결시켜 항만-배후도로망 간의 육상 수송 네트워크를 강화¹¹⁹⁾하고, 대륙 간 철도인프라 연결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내 철도시설 확충 등 인터모달(Intermodal)¹²⁰⁾ 기능 강화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거점 항만 기능 강화

- 미·중·EU·ASEAN과의 FTA를 연계한 서남권·환동해권에 특화된 거점항만을 집중 육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발전

[그림 III-40] 항만별 특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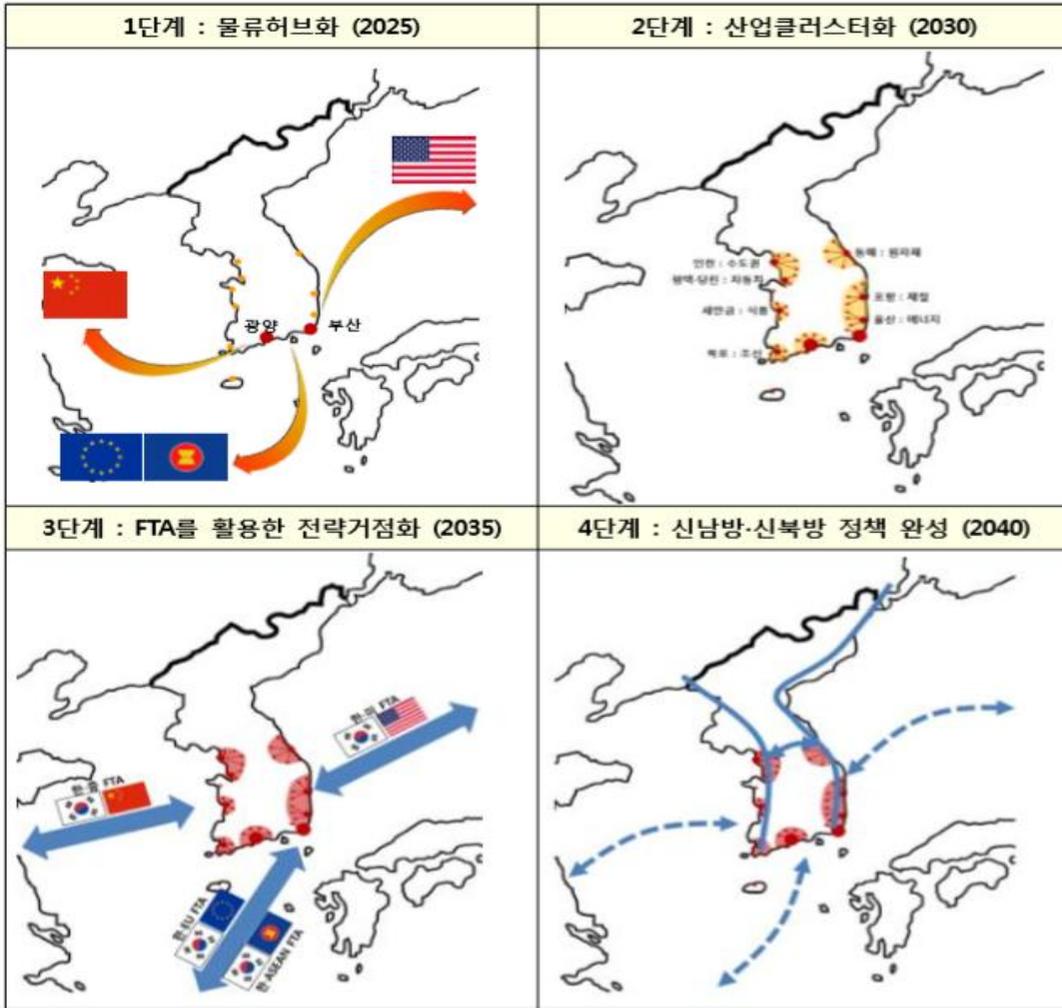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참고 작성

119)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신항, 북항), 남해고속도로(부산항 신항), 서해안 고속도로(평택·당진항) 등 주요 도로망과 직결하여 교통혼잡 완화

120) 2개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일괄 수송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시스템

[그림 Ⅲ-41] 단계별 글로벌 진출 전략



자료: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과 산업 간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물류신기술 지정제 등을 통해 물류로봇, 자동 하역장비 등 첨단 물류장비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적극 유도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물류R&D 투자를 확대
-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한·중·일 항만당국 간 동북아 항만물류 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등 IoT 기반의 스마트 물류정보화 추진

- 산업 간 융복합물류체계 구축 및 신규 물류시장 개척
 - 신선물류, 바이오물류, 조달물류, 군물류 등 새로운 물류시장 발굴 및 지원
 - 해양금융, 선박관리업, 선용품산업, 선박금융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고부가가치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 물류스타트업, 퀵서비스, 유통, IT 등 산업·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계획지침 Ⅲ-5-4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시설계획 수립 시 도로, 철도, 공항 등 다른 수송 교통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5)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

- 스마트시티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 및 확산
 -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 창출을 견인
 -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함께, 혁신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
- 성장단계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스마트 공간을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관계 부처 R&D 및 연계사업을 발굴·접목하여 시범도시 성과를 신도시 등 국내외 확산 도모
 - 기존 도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민 체감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접목하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 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병행

- 노후도시에 대해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중장기 뉴딜사업으로 확대
- 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소외되는 지역 없이 스마트시티 정책을 확산하여 장기적으로 전 국토의 스마트화

□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통합플랫폼 고도화,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강화
 -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도화 추진
 -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여 교통·안전·환경·에너지·복지 등 스마트서비스 개발 및 확산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하여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고, 인재양성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
 -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 제도 활성화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리빙랩(Living Lab) 구축·운영
 -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시티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축과 운영

- 디지털트윈¹²¹⁾ 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축적·이용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정비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를 추진

121)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 국토정보 데이터 생산·유통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국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검토
-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와 공공·민간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국토의 이용·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검토
-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국토관리 강화
 - 공공·민간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와 인공위성·유무인항공기·자율주행차량·사물인터넷·SNS 데이터와 연계된 상시 국토 모니터링체계 구현
 - 재난·재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조사 및 도시기초조사 사업의 고도화와 지하 공간 및 노후시설물 데이터 구축·공개
 - 행정·지형·지적·영상·주소¹²²⁾정보의 품질관리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등 민간 기술개발과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
 - 데이터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육성

[그림 III-42]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구현 및 지능화된 공간 활용 연계 구상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8. 지능공간 구현을 위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122) 주소(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람 간의 위치 소통수단)는 디지털트윈의 객체로, 지형·지적정보와 함께 구축·제공될 때 산업화가 용이(2013년 이전에 주소는 지번을 사용하여 '지적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로명주소법」 시행('07년) 및 공법관계 전면사용('14년)에 따라 '주소정보'로 독립)

□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 국토공간 데이터 활용성과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활성화
 -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토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관리
- 데이터 및 정보개방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 국토정보의 민간·공공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국토정보가 보안문제 없이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 추진
 - 데이터 보호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계획지침 Ⅲ-5-5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발전 수준 및 유형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적인 신산업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 여건 진전

- 남북관계는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노력
 - 1990년대 초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이후 2000년대 개성·금강산 남북공동사업,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등 많은 변화 발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
 - 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 2차 회담(2018.5.26)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 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20)에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합의
- 남북 교류·협력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
 - 철도·도로, 산림, 농축산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협의와 자료 교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한 합의 내용 추진이 소강 상태

□ 동아시아 국가와 경제협력을 위한 초석 마련

-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동북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추진 중
 -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 新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 新남방정책을 추진
- 철도를 매개로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제안¹²³(2018.9)하고 추진방안 마련 중

2. 여건 변화와 전망

□ 남북한 교류·협력 기회 상존

- 북한의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과 경쟁 가능성 증대
 - 북한-미국 간 상호신뢰 회복 등 여건 진전 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한 남·북 양자협력과 남·북·중, 남·북·중·러 등 다자간 협력 등 국가 간 협력과 경쟁 발생 가능
- 북한 개방정책 추진 시, 도시 인프라·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 수요 증가 전망

□ 동북아경제권 주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 가속화

-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 심화
 -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및 해상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를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와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는 구상 추진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¹²⁴⁾을 결성하여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대외전략 추진
 - 일본은 인도와 태평양 지역 간의 연결성 제고를 천명하고,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주도
- 동북아 국가 간 교통물류 인프라 연결 노력 증대
 - 중·몽·러 경제회랑¹²⁵⁾ 구상은 인프라, 산업, 경제·무역, 인문교류, 생태·환경 및 지방·접경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전망
 -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교통회랑인 프리모리에 I·II 노선 개발 본격화¹²⁶⁾로 한반도 북방지역 중심으로 산업협력 및 인프라 개발 확대 전망

123) 유럽연합의 모태였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동북아 6개국(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 제안

124) 러시아(Russia), 벨라루스(Belarus), 카자흐스탄(Kazakhstan), 아르메니아(Armenia),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인구 1억 8,380만 명(전 세계 2.4%), GDP 1조 9,000억 달러(전 세계 3.2%) 규모의 경제 연합체

125) 한반도와 가장 인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회랑사업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 각국의 대외발전 구상을 연계시켜 공동발전을 추구

126) 프리모리에 I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미국 서부 연안과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수송로로 주로 활용되며, 프리모리에 II 노선은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일본으로 수송되는 역내 화물 수송로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국토분야 초국경 협력 수요 증대

- 기후변화, 해양 오염 등 초국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역할 요구 증대
- 우리나라는 국토개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에 국토발전 경험과 제도 확산 노력
 - 정부 부문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개발, 스마트시티 등 시장성이 확보된 민간 개발협력 활성화 및 협력 확대 전망

3. 주요 정책과제

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추진

-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한 신뢰 형성과 기반 구축에 주력
 -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들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 간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동해관광·서해경제공동특구(이하 ‘남북공동특구’) 조성 등은 향후 남북간 긴장완화 및 협력분위기 조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 검토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행과 경제협력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 도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
 - 평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여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경제 실현 목표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합의 및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안정성 확보

[그림 III-43] 한반도 신경제구상 개념도



자료: 통일부, 2019.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표 III-9]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을 통해 구현

□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 러시아와의 에너지(가스, 석탄) 협력, 단천특구 등에서의 광물자원(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공동개발을 매개로, 동해축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南(영동권)·北(동부권)·中(길림·흑룡강성), 露(연해주)의 발전적 협력축 개발

□ 환서해 물류·산업 벨트

- 풍부한 인구와 산업시설 등 기존 인프라, 서울-평양을 잇는 서해축의 지리적 인접, 남·북·중 교역규모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중국의 일대일로 진전에 따른 복합물류 혁신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물류와 산업을 특화하여 개발

□ 접경지역 평화 벨트

- 군사지역인 DMZ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접경지역을 산업단지로, 한강하구를 공동관리·이용의 장으로 조성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견인

□ 하나의 시장 협력

-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하나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상품과 생산요소, 기술 교류의 촉진과 협력을 통해 3대 벨트 기반 조성 및 생활공동체 구현

□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 과제의 지속적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남북 공동의 이익과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 북핵문제 진전 등 남북협력 여건에 맞추어 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 모색
 - 국제사회 참여·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여건 조성에 대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및 교류협력 기반 확충
 - 당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별 수요·특성, 지자체 역량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지원
 -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분야 협력, 북한인력 역량개발, 인구조사사업 등 기반 조성 노력
- 동·서해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공동특구 조성
 - 우리의 산업협력 수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특구·개발구 계획, 기반시설 및 그간의 협력경험 등을 고려하여 조성 검토
 - 관광, 농수산,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과 배후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특구개발 효과 확산 추진
 - 남북 공동연구·조사, 남·북·해외지역 경제시찰 등 단계적 추진
- 한강하구(임진강) 공동수로 조사 실시 등 하천분야 협력 강화
 -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협력,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검토

□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경의선, 동해선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
 - 한반도 서해지역(서울-개성-평양-신의주)과 북·중·러 접경지역(중국 동북부-극동러시아)에 대해 철도·도로 기능의 정상화 방안 모색
 - 철도는 남북 연결(경의선, 동해선)과 북한 간선철도망 성능의 복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단계적인 고속화 방안도 모색
 - 도로는 경의선, 동해선의 기존도로 개보수 또는 신설을 통해 남북 연결 방안을 모색하고, 동아시아(AH1) 및 북한동부·극동러시아(AH6) 연계 검토
- 항공·항만은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보완과 물류망 구축 검토
 - 항공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 항공망 등 협력방안 모색
 - 항만은 북한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하역장비 교체, 신규 선석 건설 등 검토

□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및 관리·개발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UNESCO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관련 국제기구 유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비무장지대(DMZ) 국제 평화지대화 추진
- 접경지역 공동관리·이용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를 위해 북한 지역 댐 정비, 유역 공동조사·관리 등을 통한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접경지역 산림복원, 사방사업, 산림협력 등을 통해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 예방
 - 기존 남북연결 도로 복원 및 접경지역 도로교통망 확충
- DMZ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벨트 구축
 - DMZ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의 단계적인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 중장기적으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광역적 관광벨트 구축 검토

[그림 III-44] DMZ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사업 구상



계획지침 III-6-1

- 중앙정부는 남북한 간의 협력 하에 한반도 통합적 국토개발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는 남북한 간의 협력 하에 남북접경지역의 공동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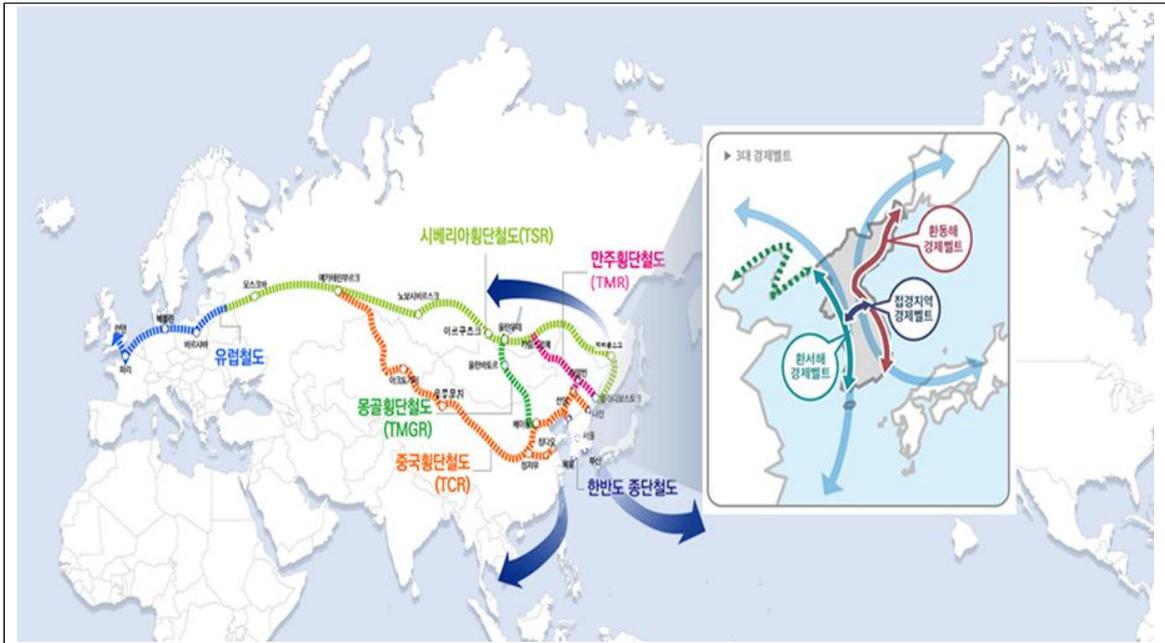
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와 대륙 경제간 연결성 강화로 물류 효율성 제고와 교류협력 확대
 - 한반도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대륙 횡단 국제수송노선인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아시안하이웨이(AH)127 협력
 - 대륙 연계 철도 노선에 블록트레인 확대, 도로·항공·물류·철도 등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유라시아 주요국과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127)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총 연장 14만 2,800km의 간선도로로 한반도를 통과하는 간선은 AH 1호와 AH 6호임

[그림 III-45]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



- 광역두만개발계획(GTD),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 철도협력기구(OSJD)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대륙 간 제도적 연결성 확보
- 초고속열차 시대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상
 - 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등 이용 시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와 동북아 주요도시(단둥, 선양,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간 1일 생활권 형성

□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단계적 이행방안 정립
 - 동아시아철도공동체¹²⁸⁾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과 역내 다자 평화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동아시아철도 인프라 사업과 관련 경제협력사업(경제특구, 물류, 관광,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을 논의하는 국가 간 협의체
 - 최적 철도노선을 결정하고,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국제정세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

128)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TCR과 TSR을 포함해 28만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

[그림 III-46]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철도노선(안)



주: 향후 물동량, 경제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노선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마련

- 관계국 정부,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공동체 설립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민관국제포럼, 정례적 국제세미나, 장관급 협의체 등)을 마련하고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 설립 추진

○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아태-유럽 복합물류회랑을 구축

- 아태지역,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의 물리적·제도적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완성
-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 및 복합교통물류체계 완성을 위해 철도·도로 교통신호, 운행방식 등 기술 표준화, 환적 및 통관개선 등 운영방안 협의

□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추진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 및 동남아 국가를 잇는 대륙-해양경제 창조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

-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와 협력, 남·북·러 3각 협력 등 중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한·중·일 등과 FTA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주도
 - 한·중·일 FTA를 통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발휘¹²⁹⁾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¹³⁰⁾과의 FTA 체결을 통한 산업협력 증진 및 양자·다자협력관계 구축

□ 동북아 산업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활성화

- 기술·인프라 협력을 통한 산업협력 기반 조성
 - 국내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러시아 산업시설을 현대화,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업의 글로벌화 등 기술 경쟁력 제고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공동시장 진출
 - 러시아를 포함,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¹³¹⁾
 - 한·러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 지속과 기자재·인력·해양플랜트 협력 범위 확장
 - 몽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지속¹³²⁾
-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콘텐츠 진출 전략을 수립 추진
 - 주요 국제관광박람회 상호 참가 지원 및 정부·민간·부서 정책협의 채널 재개·활성화
 - 문화·체육·관광 ODA 확대 및 활용을 통해 북방지역과 상생하는 관계 구축
 - 북방지역 콘텐츠 진출전략 연구 및 콘텐츠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구축·운영

129) 한중일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역내 거대 통합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기준으로 13차례 진행되었으나 농산물, 공산품 개방에 있어 3개국 간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130)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 유라시아 신 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의 다양화, 미래혁신기술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통상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 제공

131) 기존 우즈베키스탄 가스액화시설, 탈리마잔발전소,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액화시설 등 협력 진행

132) 남부발전 2018년 9월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흐구 지구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착공

- 중앙정부는 대륙연결·개방형 국토 형성과 미래 국토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및 유라시아 국가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연계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등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초국가 간 협력 강화

- 지구환경관리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과 지구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 공동 이행
-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주도권 획득과 선도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기술개발과 이전, 역량 배양 등 신기후변화체제에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 강화
 -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등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관측망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환경협력체제 강화
 - 동북아 방사능 자동감시망 시스템 구축, 측정 데이터 공유, 긴급 공동대응 시스템 공동 구축 및 이행 추진
-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다차원적 파트너십 형성
 - 해양공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 강화와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한·중·일 해양생물다양성 협력체계, EEZ 내 수산자원 실태조사 등 현안문제 도출 및 공동 협력방안 추진
 - 국민의 안보와 해양자원 및 한반도 고유영토 확보를 위한 국제분쟁 대응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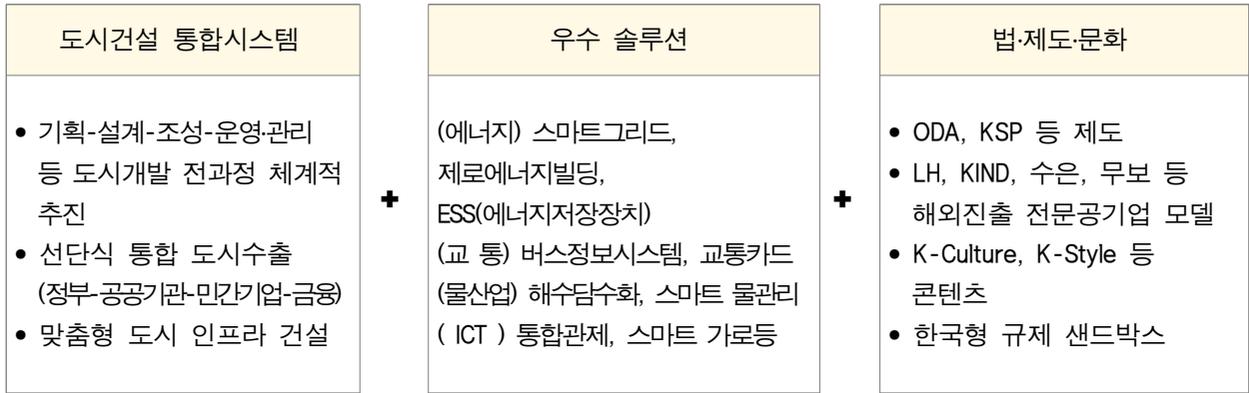
□ 글로벌 국토프론티어 개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영역 확대

-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수출 및 개도국 국토개발 지원 체계화
 - 개도국에 대한 한국형 국토관리, 도시개발 모델 등 수출 및 지원
 - 아세안 지역 등 개도국의 국토개발 및 도시화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센터·연구기관¹³³⁾ 지원 확대 및 협력단지 조성
 - 국토개발 경험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글로벌 국토 프론티어 개척
-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도시건설·ICT솔루션·법제도 등이 패키지 형태로 결합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여, PIS 펀드 등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K-SCON)를 통해 한국형 모델 확산 지원
 - 한국과 해외정부·국제기구 간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국내 대·중소기업이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지원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의 주요 통로로 적극 활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 G2G 협력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사업 등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의 글로벌 확산 추진
- 정책금융 지원 확대로 해외인프라 건설·수주 활력 제고
 -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¹³⁴⁾를 통한 사업 전 주기 관리 강화
 -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관협동(PPP)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

133) 2014~2019년간 무상원조사업으로 KOICA가 추진한 미얀마개발연구원(MDI)은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 '개발원조정책' 등 미얀마 정부의 주요 국가개발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역할을 수행

134) KIND는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 금융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단계를 유기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III-47]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교역 대상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집중된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위한 수출산업 확대 육성
 -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점협력 대상국, 남미, 아프리카 등의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해 무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토 및 도시개발, 산업입지 등 제도와 전략 및 정책, 제반 법에 대한 노하우를 패키지화하여 수출
 - 수출역량 강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물류 및 운송 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진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소프트인프라 패키지화 추진
 - 해외건설 및 해외개발협력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 지원 및 인적 교류 확대
 - 우리의 법·제도를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전수·지원하고, 개도국의 인적 역량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국가별 소프트인프라 패키지화 추진

계획지침 III-6-3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도국의 국토·도시개발을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공간관리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주변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제4편 계획의 실행방안

1.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 수립과 정책환류 강화

-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을 수립(국토기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토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중장기 부문계획 및 정책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세부 실천전략 수립
 - 부문별·지역별 발전방향을 기본적·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 중심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
 - ※ 국토기본법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과 부합하는 세부 실천계획 및 실증사업 발굴·추진
- 지침형 전략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과제별 계획지침을 국토계획평가 시 참조하여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
 - 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을 부문·지역계획 수립시 적극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계획평가 과정에서 계획간 정합성 검토의 근거로 활용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 전략에 부합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필요
 - 국토정책위원회, 전문기관을 통한 실천계획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여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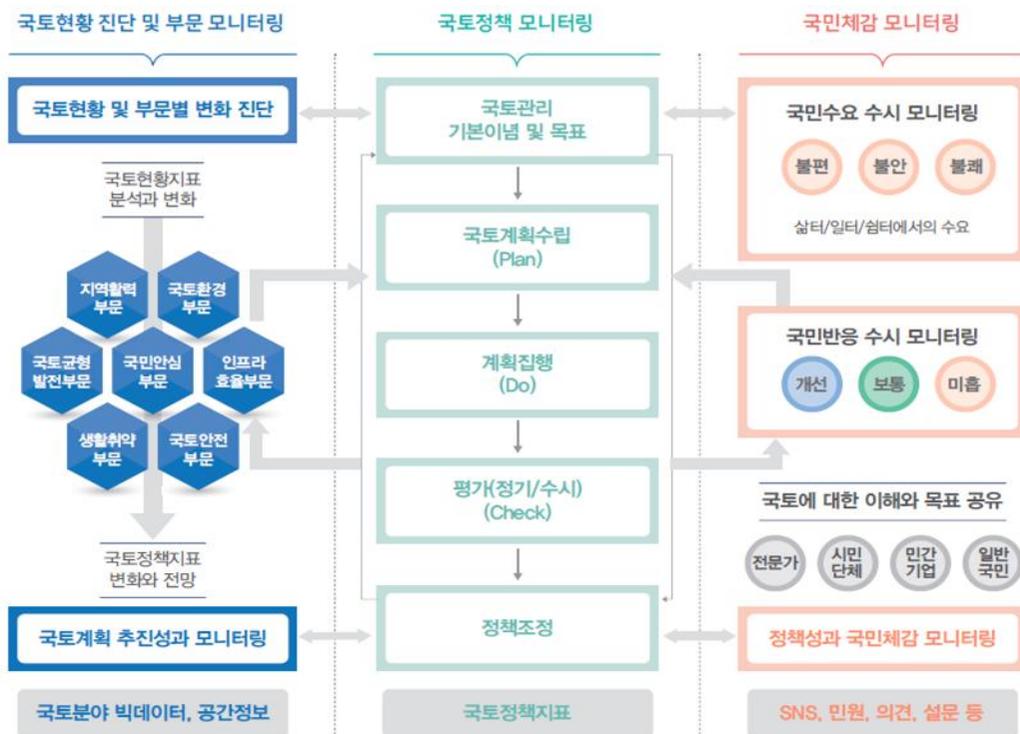
계획지침 IV-1

-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한다.
- 국토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등을 통해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2.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 국토 변화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국토조사를 통해 수집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 등에 환류·반영
 - 국토계획 모니터링의 결과는 국토계획평가와 연계하여 계획 간 정합성 제고 및 국토정책 수립, 정책 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그림 IV-1] 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의 구성 방향



- 국토조사 개선과 체감도가 높은 지표 발굴
 - 모니터링 기초자료는 「국토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한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각 기관들이 관리하는 있는 자료를 통합·활용하여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 구축
 - 국토조사는 갱신주기 단축(1년→수시), 관리 플랫폼 고도화 등 기초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 국토조사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국토 변화상을 분석하거나 국토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발전 전략별 정책지표를 개발

[표 IV-1]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모니터링 지표 예시

발전전략	모니터링 지표	발전전략	모니터링 지표
전략1.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수도권 인구 집중도	전략4.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녹색인프라(환경기초시설) 확보율/ 접근성
	지역 간 불균등 수준		공원시설 접근성(격자)
	인구과소지역 비율(격자)		토지이용(건물) 복합도(격자)
전략2.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		토지이용(건물) 압축도(격자)
	지역문화종합지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략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기초생활SOC 접근성	전략5.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지능화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재해복구비		스마트도시 인증지역(구역) 거주자 비중
	교통사고 사망자(보행) 건수	30분 내 간선교통망 접근 인구 비중	
		전략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노후인프라 비중
			남북 간 연결인프라 확대
			개도국 국토개발 지원

○ 국토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국토계획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내실화를 지원하고 활용방안 모색
- 국토조사 및 국토계획 모니터링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책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토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하고, 시각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와 민간 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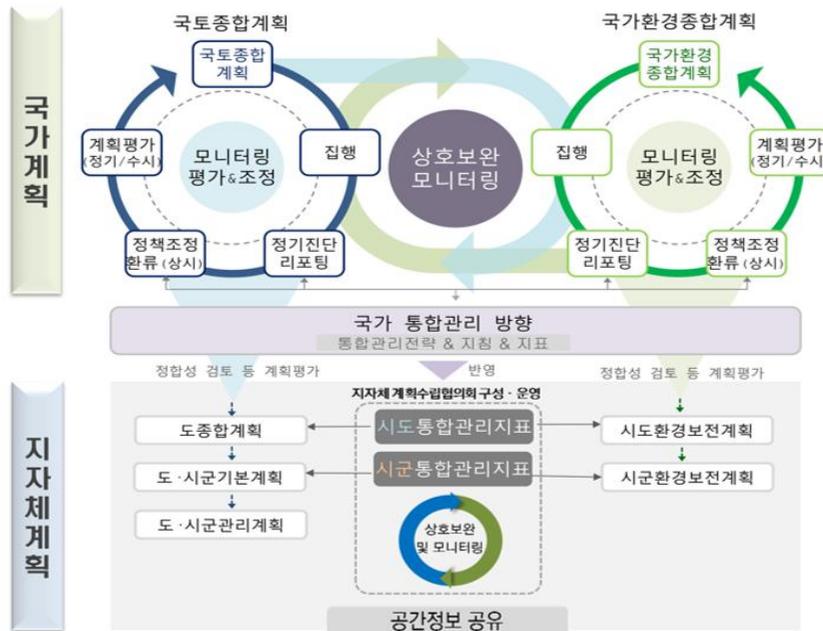
계획지침 IV-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계획, 대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수립 시 국토 조사, 국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 하며,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국토 및 지역의 변화상을 진단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평가체계 구축운영

-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토-환경계획의 점검·평가 및 정책조정 등에 활용하는 환류체계 마련¹³⁵⁾
 - 통합관리 모니터링 지표 마련 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지표의 공동 발굴과 모니터링 추진
- 도시·군 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지자체 단위의 국토-환경계획 연동은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의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평가·관리
- 통합관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관리 추진기반 구축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전략을 반영한 계획지침을 제공하여 지역 단위 통합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등 수립지침도 개정
 -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을 공동개발·보급하여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하고, 지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지역의 국토환경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통해 통합관리 작동기반을 강화

[그림 IV-2] 국토-환경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안)



135)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에 따라 2040년 국토·환경 통합관리 비전과 목표, 미래상을 공유하고, 추진전략 발굴과 통합이행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노력

계획지침 IV-3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통합관리전략을 반영한 지침 등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에서 관련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지역의 국토환경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한다.

4. 협력적 국토정책 추진과 국민참여 활성화

-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확대
 - 지자체는 광역연계·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낙후·위기지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지원을 강화
-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
 - 온라인, 오프라인 등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계획·정책 수립 단계에서 부터 국민의 직접참여를 다양화
 - 국토계획 및 각종 중·장기계획의 모니터링·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강화
 -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이념, 지역, 계층 등 복잡한 갈등에 대한 민주적 갈등해결 방식 강화와 협력 지원
 - 국토정책과 지역개발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예방적 갈등관리 체계 도입 및 조정 강화

계획지침 I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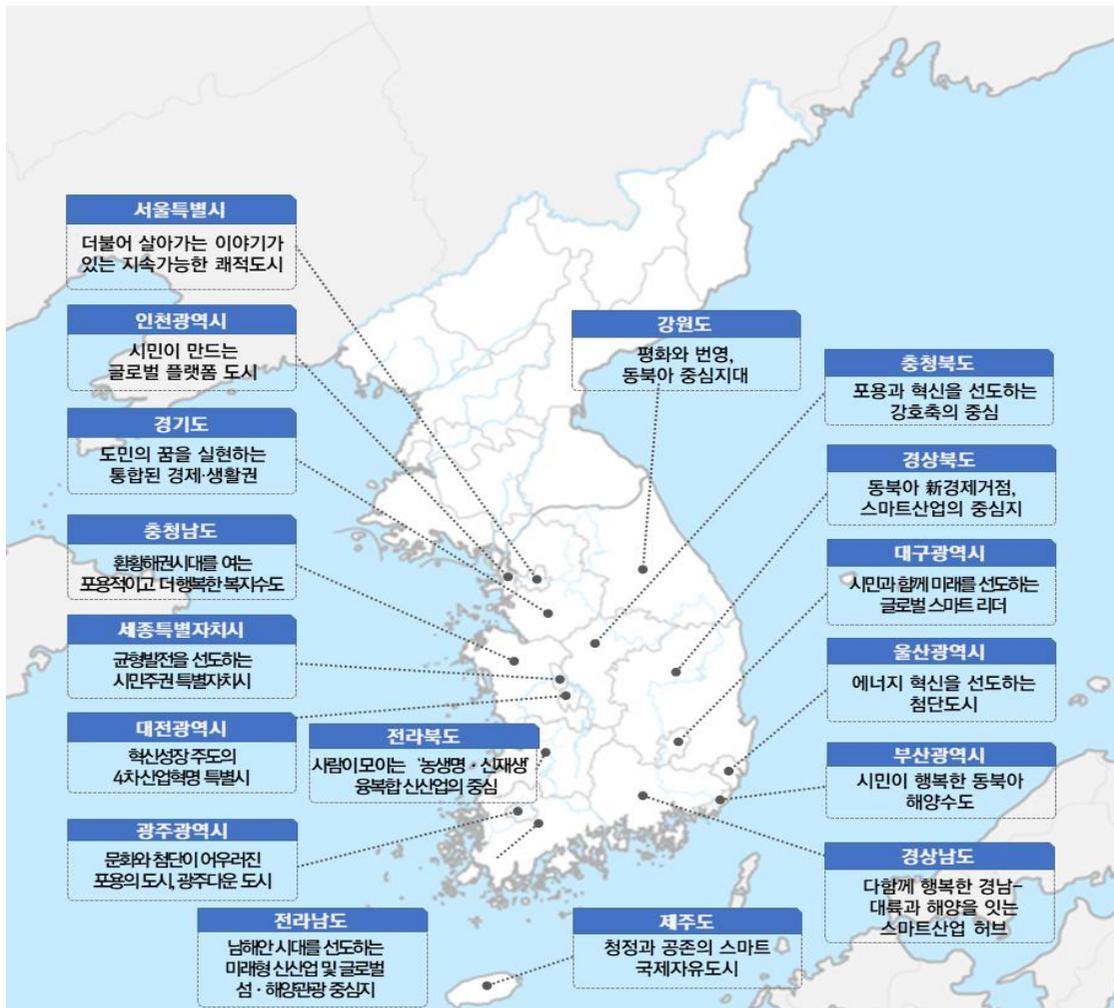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문·지역의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모니터링 과정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적으로 이행한다.

제5편 지역별 발전방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촉진·지원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위해 시·도별 목표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자율적·다원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검토
- 시·도별 발전목표와 전략은 향후 도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로 활용되며, 시·도는 제시한 목표와 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 추진
 - ※ 지역발전방향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추후 정부 계획, 타당성 조사,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과제 추진여부 결정

[그림 V-1] 시·도별 발전 비전



서울특별시: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가. 기본목표

-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 :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서울 지향
- 이야기가 있는 서울 : 다채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서울 지향
- 지속가능한 서울 : 회복탄력성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지향
- 쾌적도시 서울 : 친환경적 발전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 지향
- 경제수도 서울 : 공존과 상생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서울 지향

나. 발전방향

①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 자연환경보전 도시, 역사문화보전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대중·녹색교통 도시, 생활안전 도시,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조화로운 경관 도시, 장소성의 도시, 참여와 소통의 도시, 배려와 공존의 도시를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으로 설정

② 남북협력시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국가적 위상과 역할 정립

-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 세계 도시 간 국제경쟁력 선도를 위한 준비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정비 및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 서울역~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공간으로 조성
- 유라시아 철도시대 국가의 중앙역으로 서울역의 지상과 하부 공간구조 재편
 - 서울역 지하 통합역사를 설치하고, 국제관문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부에 상징성과 공공성을 강화
- 新 국가 중심공간 비전에 부합하도록 용산역세권 및 주변부 개발·관리
 -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부 관리방향을 설정
- 정부 협력에 기반을 둔 용산기지 국가공원 조성사업 추진

- 용산기지 내 근대건축시설 공동조사, 공원주변 경관관리 공동연구, 온전한 공원경계 회복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조성

③ 서울과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적 전략거점과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교통망 정비
 - 인천국제공항~서울 중심지 연결 고속교통망 정비, 김포공항을 아시아 주요 도시로 연결하는 비즈니스공항으로 활용,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
-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및 광역철도망 구축
 - 교통 혼잡 완화와 서울~수도권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광역철도기반 확충
- 인천, 경기지역을 고려한 서울의 주요 발전축 형성 및 공간구조 재편
 - 주요 지역거점과 교통결절점(공항, 철도역 등) 간 접근성 제고, 인천국제공항~서울 3도심 연계교통망 정비, 서울~인천·경기 간 모빌리티 제고
 - 마곡, 온수, 김포공항 등 기존 산업중심지를 기반으로 국제거점 육성 및 연계 강화

④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미세먼지, 소음, 빛, 진동 등을 수집·저장·활용·공급하는 공공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
-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공간 조성
 - 거점별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홍릉(바이오·의료), 마곡(R&D), G밸리(IoT), DMC(문화콘텐츠), 양재·개포(R&D, AI, 빅데이터), 마포(블록체인, 핀테크) 등
- 구로·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로의 산업집적 촉진과 준공업지역 관리
 - 제조업 및 연구·개발, 유통, 무역, 업무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합용도 개발, 공원·문화시설 설치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준공업지역 총량 관리
 -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의 계획적 관리(지역 거점 조성 및 산업단지 연계 지원)

⑤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 보존·계승·창조 및 활용

- 지리적 여건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도시정체성 유지 및 강화
 -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고 한강과 지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변경관 창출
 -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역사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도시건축혁신’을 통한 아름답고 공공성 높은 도시건축 유도
 - 도시건축혁신(선제적 공공기획, 정교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설계공모·공공건축가 활용 디자인 수준 제고, 정비사업 전체 과정 책임관리방안 등) 추진

⑥ 공원·녹지체계 강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 공원·녹지 네트워크 강화
 - 공간기능적으로 단절·훼손된 녹지축 복원, 주요 산맥과 연계한 광역 녹지네트워크 강화
 - 미집행시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능 유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훼손 최소화
 -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되, 교통·주거 환경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공영 개발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

⑦ 역세권 중심의 다핵 도시공간구조 형성으로 균형발전 유도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중심지의 중심기능 강화
 - 중심지별 특화 육성과 기능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유도
 - 서울 대도시권 및 권역 생활권 차원에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
- Compact City, 대중교통 중심발전(TOD)을 지향하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 관리
 - 중심지 간 직결노선 확충으로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 역세권의 주거·비주거 기능의 입체 및 복합화를 유도하여 총 통행발생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직주근접의 콤팩트도시 형성

⑧ 저렴한 주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동반한 도시재생과 시민 주거권 신장

-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종합적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주민 주도의 다양한 주거지 정비사업 및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⑨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장기적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프라 관리체계 확립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기술 적극 활용
- 적정 예산 투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필요
 - 중장기 인프라 소요 예산 조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확보방안 모색

⑩ 서울 대도시권에서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형성 및 계획체계 구축

- 도시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계획체계로 전환
 - 국토발전에 기여하고 지방과 동반성장하는 수도권 발전 모색
- 지방자치·분권을 확장한 협력형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 국토종합계획 실행과 도시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⑪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
 - 친환경 자동차 및 인프라 보급·확충
- 저탄소 에너지자립도시, 서울 지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장려
 - 마곡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통한 저탄소 도시모델 확산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 적용과 비오톱 보전

부산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가. 기본목표

- 동북아 신경제벨트 및 경제혁신 중심지
- 신공항·항만·철도 연계(TRI-PORT) 동북아 물류 중심지
- 동북아 국제무역·금융·영상·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과학·생태관광의 국제거점
- 환태평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글로벌 안전·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거점

나. 발전방향

①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신남방·북방 경제권의 글로벌 브릿지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 신북방·신남방정책 거점 연결 게이트웨이로서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공항-항만-철도(Tri-Port)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 중심기지 구축과 국제교류 관문기능 강화
 - 유라시아의 중심 거점기능 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동북아 국제 물류·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해양·물류 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
 -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
 -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연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산업물류 및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
 -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건설 검토, 동남권 환상형 내륙순환도로 구축, 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사상~해운대) 연계 고속 교통망 정비 검토
 -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 울산, 창원 등 KTX 역세권과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광역철도망 구축

②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영상 산업의 거점 육성

- 신항만 중심 포트 비즈니스(Port Business) 육성
 -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허브항만으로 육성, 국제물류지원단지,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배후물류단지 확충
- 부산을 동북아 선도 금융중심지로 육성
 - 해양산업 기반 금융특화 전략으로 해운·항만·물류·수산산업의 역량 강화
 - 주요 해외거래소와 연계 및 24시간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 e-해양금융허브를 통한 해양관련 전자금융의 국제화로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파생상품 개발의 집중 투자
 - 선박금융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 영상·컨벤션 산업의 중심기능 제고
 -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영상후반 작업기지 구축 및 첨단영상·정보통신기술 부품산업 육성으로 영상·정보통신(IT) 산업클러스터 조성
 -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으로 대형 전시회 및 해외 유명 글로벌 전시회 유치 등 국내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환태평양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별 기능 특화를 통한 다핵연계형 발전거점 육성
 - 부산대도시권(물류국제비즈니스금융), 울산대도시권(자동차조선에너지화학), 진해만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의생명),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 소재산업), 서북부성장축진권(녹색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 동남권 선도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송기계산업(그린카,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산업(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력 기간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국가기간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해 동남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검토
 - 부산(항만, 조선기자재), 울산(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창원(기계, 해양플랜트, 로봇), 사천·진주(항공), 거제(조선) 등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검토
- 북항 통합개발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철도시설 재배치로 도심공간구조 개편
 - 경부선(구포~사상~부산진) 지하화 및 부산지역 철도시설(부산역·가야 조차장, 부산 철도 차량정비단) 기능 개편 방안 검토

④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 및 기반 마련

- 주력산업 스마트·저탄소 시스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 산업 유치
 - 산업·교통(물류)·주택 등 도시 전 분야에 저탄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단지 조성
 - 에너지 관련 산·학·연 시설을 활용한 동남권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태평양권의 풍부한 자원과 연계 발전
- 문헌혁신지구 중심으로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검토
 - 주변 혁신지구와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생태계 육성
 - 문헌(금융, 핀테크), 영도(해양 R&D), 센텀2지구(4차 산업, 첨단 ICT 융복합산업) 등 3개 거점에 특화벨리를 조성하여 창업·혁신생태계 조성

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및 국제교류·관광 기능 강화

-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
 -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품질 향상,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저탄소 사회시스템 구축 및 동남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 낙동강 종합정비를 통한 홍수가림 대비, 워터프런트 개발 및 정온해역 창출

- 취수원 다변화 및 낙동강 하굿둑 개방
 -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남강댐 하류, 합천댐 하류 활용 및 담수화 클러스터 조성
 - 물산업 육성
- 문화·관광 콘텐츠화 및 특화로 역사, 문화, 생태가 있는 국제관광거점 육성
 - 탐조, 습지, 섬, 산악 등 생태체험형 관광자원 및 국제적 관광네트워크 구축
 -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설립을 통한 동남권 광역관광상품 개발·공동마케팅
 - 국제해양스포츠 육성, 크루즈 도입, 친수관광 활성화 및 해양리조트·마리나 개발
 - 2030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 유치 및 성공적 개최

⑥ 다 함께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탈원전 시범도시 및 원전해체산업 거점도시 육성
- 생활SOC 확충 및 제도적 기반 정비로 격차 완화
-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주거사다리 구축, 주거복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⑦ 광역거버넌스 및 분권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 거버넌스기구 설치를 통한 지역 간 협력시스템 구축
 - 동남권 특화산업 발굴·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 추진
- 초국경 광역경제권 클러스터 구축으로 동북아 핵심경제권으로 도약
 - 동북아 통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상생 발전모델 제시
 -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내외 다양한 지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한 소통, 참여, 분권형 도시관리 기반 마련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도시균형 발전 도모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

대구광역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더

가. 기본목표

-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플랫폼 도시
-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도시
- 광역권 혁신성장 중심도시
- 글로벌 미래산업 선도도시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나. 발전방향

①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 지역 재도약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
 -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공항철도 건설 검토 및 도로 건설·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공항 연결철도 건설, 조야~동명 광역도로 및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 교통·물류 글로벌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해양 및 유라시아대륙 네트워크 구축
 - 대구~포항영일신항 직결 교통망(고속도로 및 철도) 확충을 통해 항만 연계체계 구축 추진
 -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시대 대비, 내륙 출발점으로서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 지역 간 협력 발전을 통한 취수원 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도민 물복지 강화
 - 취수원 다변화 등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물공급 안정성 제고
- 환황해 경제협력 및 국토 동서간 내륙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동서 내륙철도·도로 확충으로 국민대통합과 상생 도모

- 동서3축(새만금~무주~대구) 고속도로 개설 및 산업벨트 형성 검토
-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사업 추진 검토
- 광역권 도시 간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 등 상호유기적 연계를 위한 광역도로 구축
 - 군위~구미~성주 고속도로, 현풍~청도~영천 고속도로 개설 검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하화 및 기하 구조개선 검토
 - 경부고속도로 도심 우회노선 이설 및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신천대로 지하화 건설
 - 국도4호선·국도5호선·국도30호선 확장 및 군도3호선 건설 및 국지도 승격 검토
 - 대구 부산선(동대구~수성) 확장 및 연결로 설치 검토
 - 금호강변도로 건설 및 국지도 79호선 개량 검토

③ 광역대도시권의 중심성 강화 및 중추관리기능 재정립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심성 강화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다핵 공간구조 설정 및 상생 거버넌스 육성
 - 서대구(산업·교통), 도심(역사·문화), 동대구(벤처·금융·비즈니스)의 3대 광역중심 강화
 - 7대 중심지(칠곡·성서·현풍·불로검단·안심·수성·달서화원) 기능 특화 및 경북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
- 광역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 대구공항 후적지와 인근 금호강 수변공간에 대해 스마트기술 기반의 미래 도시모델 구현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교통·환경·주거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옛 경북도청 복합공간 조성 등 특화 거점 조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메가시티 네트워크 강화

- 대구권 광역전철망, 대구선 복선전철, 대구산업선철도 경남마산 연장(대구~마산신항) 검토
- 광역교통체계와 도시내부 교통수단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연장(엑스코선, 2호선 성주 연장,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순환선 구축, 공항 후적지 연결 등)
-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인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여 대중교통 체계 활성화

4 미래 신성장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 기반의 5+1 전략산업(물·의료·에너지·로봇·미래형자동차+스마트시티) 집중 육성
 - 스마트 워터시스템 구축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확대 등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 육성
 - 맞춤형 정밀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구축 및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 육성
 - 스마트 에너지 산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가스공사 연계 수소콤플렉스 조성 등 청정에너지 기반 자립도시 조성
 - 로봇 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로봇산업 교류 활성화 등 대한민국 로봇산업 메카 건설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연구 및 인프라(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 등 대구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충전인프라) 검토
 - 민·관·학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실증사업 추진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산업 전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생태계 혁신
- 창조적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첨단산업환경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기술·인프라 기반 생태계 구축
 - 성서산업단지 등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업종 구조고도화

- 금호강과 EXCO, 이시아폴리스를 연계한 도심형 산업단지, 관광·MICE 핵심 거점 조성
- 전통 제조업(섬유·기계·안경·뿌리산업 등)에 대한 스마트기술 기반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생존 경쟁력 강화
 - 신소재산업, 물 없는 컬러염색 산업, 웨어러블 섬유패션산업 등 K-Textile 육성
 - 지능형 기계제품 및 공정 혁신산업화, 스마트 뿌리산업 혁신단지 조성
 - 첨단 맞춤형 안경제품 개발 및 유통망 구축, 스마트 안경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화
- 전략형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중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국가·지방산업단지, 전략형 도심첨단산업단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5) 쾌적한 명품 정원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자연과 어우러진 ‘숲’의 도시 및 명품 정원도시 조성
 - 환상형 가든(팔공산~앞산~비슬산), 블루가든(신천~금호강~낙동강) 네트워크 구축
 - 제2수목원 조성, 대구대공원 개발, 100개 도시숲 조성 등 시민 산림휴양 공간 확충
- 도심역사 및 창의 축제·공연문화를 활용한 영남권 대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근·현대문화 관광인프라 기반과 광역교통체계를 활용한 소비형 도시관광 시스템 구축
 - 해외 직항도시 연계를 통한 해외관광시장 다변화 및 대구 대표축제 글로벌 명품화
 - 소공연장 집적화 및 특성화, 공연 크리에이티브 양성 등 글로벌 공연문화 기반 강화
 -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 대구 정신문화의 계승과 세계화

인천광역시: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가. 기본목표

-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도시
-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일자리도시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관광도시
-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해양도시

나. 발전방향

1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축소 등 도시성장관리방안 마련
 - 도시공간구조 집약화, 기반시설 미흡지역의 신규개발 억제 등 압축도시 조성
 - 장기간 개발 지연사업 조정, 사업추진 지연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등 조정방안 마련
 - 역세권 주변 유휴부지에 1인 가구 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
 - 수요가 감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해 취약계층·고령화를 위한 시설 확충
-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전환
 - 도시철도 확충, KTX-GTX 광역환승체계 구축, 역세권 복합개발로 도심 생활거점 조성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및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등과 연계하는 재생사업 추진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유도
- 원도심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뉴딜 추진
 - 노후산업단지·항만, 노후·불량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 폐·공가, 공장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

②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연구시설 집적, 융합기술형 산업혁신클러스터 기반 마련
 - 청라국제도시: 로봇 R&D산업·연구단지 로봇테마파크, 첨단부품 R&D·생산단지 조성
 - 영종국제도시: 항공정비단지(MRO)와 항공인력기관 설립, 첨단물류단지 등 복합단지 조성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재생 추진
 - 노후산단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 혁신산단으로 전환
 - 원도심의 노후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특화산업단지로 조성
 - 인천항 첨단선박수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항공산업, 로봇산업 등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 GTX-B노선과 연계한 송도~부평~서울의 BIO, MICE 등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 주변 제조업 벨트의 광역 벤처기업 클러스터 조성
- 남·북한 긴장 완화에 따른 수도권 서해평화협력시대에 대응
 - 서해평화협력지대(인천~개성~해주)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연계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추진 검토
 - 경기도와 함께 한강하구의 해양평화공원 및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 조성 추진 검토
 - 인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땅·바다·하늘길 추진 검토(남북평화도로 건설 검토, 동서평화고속도로 연장 검토,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검토, 백령공항 건설 검토, 인천~순안(평양), 원산공항길 개설 검토)

③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 해양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전개
 -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의 해양관광문화단지 조성 및 크루즈산업 육성
 - 유희 항만시설 등 항만 재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수도권 통합 관광 네트워크 구축
- 해양·해안 친수공간 재생 및 개발로 새로운 관광레저공간 조성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에 특화된 문화·관광·레저 공간 조성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내항 친수공간 개발과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촉진
- 다양한 유형의 명품섬,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섬 만들기 사업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섬 유형별 특화테마관광사업 추진
 - 강화 도서지역의 다양한 역사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국제 수준의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

- 해양물류시설의 세계화 추진
 - 북항 배후단지 조성 및 해양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통일대비 물류네트워크 거점 확대
- 공항 물류체계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 단계별 공항시설 및 화물터미널 확장, 해·공 복합운송시스템 및 환승클러스터 등 구축
-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검토
 - 인천국제공항~수인선(KTX)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등 신설 검토
 - 제3연륙교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지상부 광역대중교통망(영종~청라~부천~여의도 연계) 구축 검토

-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인천항 및 경인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체계 강화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기능 연계로 경인아라뱃길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
- 인천신항 교통·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신항선(인천신항~수인선(월곶)) 검토

㉔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구축과 집행력 강화방안 마련
 -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신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주변도시 간 서해안 거버넌스 구축
 - 미세먼지 등 광역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대응 상설 기구,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서해평화협력 거버넌스 설치
 - 서해안 해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도서지역 등을 포함한 해상 지역계획 강화
- 수도권 지자체간 연계·협력에 기반하는 다양한 광역사업을 추진
 -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인천 해상자원~한강~여의도 등의 연계를 통해 인천 및 서울 서남권 산업문화자원 활성화 촉진
 -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2호선(인천대공원)~신안산선(독산)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청학역~구로역 간 제2경인전철 건설, 서울2호선(청라국제도시역~신도림역·홍대입구역),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수도권 서부권(인천) 급행철도 건설 검토

광주광역시: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포용도시, 광주다운 도시

가. 기본목표

- 세계 일류의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문화적 포용
- 호남권과 협력·상생을 도모하는 지역적 포용
- 미래 세대를 포용하는 일자리 포용

나. 발전방향

1 세계 일류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5대 전략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제작·생산·유통의 창·제작플랫폼 기능 강화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협력네트워크 확대,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 추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5대 문화권 사업의 시너지 효과 확산
 - 5대 문화권 사업 추진으로 특성화된 문화인프라 공급 및 도시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 문화예술행사 육성 및 브랜드화
 - 광주비엔날레, 광주아트페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및 세계화, ‘오월예술축제’ 개최 등 전국적 파급효과와 국제적 공감기 가능한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
- 신(新)남해안 문화관광벨트 구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자원과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기존 또는 계획되는 국토개발 SOC와의 시너지 효과 도모
 - 영산강·황룡강을 활용한 워터프론트 조성으로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문화관광정책 실현

② 타 권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

- 목포~광주~부산의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산을 위한 철도망 확충 추진
 - 경전선 개량을 조속히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호남고속철도2단계를 활용한 고속전철 연계 등을 검토하여 목포~광주~부산 축 강화
- 지역연계교통망 구축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 촉진
 -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검토 및 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및 지선과 더불어 도시 내 구간을 공유하여 효율적 건설 도모
 - 강호축 연계 촉진을 위한 광주TG~삼례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 광주·전남 공동발전 및 소외된 전남 동부권의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광주-나로우주센터(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광주대도시권 외곽순환 광역교통망(제3순환선) 구축
 -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③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에너지 분야 실증타운 조성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등을 ICT와 접목하고 한전·전기연구원의 에너지신기술 실증인프라 간 연계·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지역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실증타운 조성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IT기업과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반응 관련 에너지기술 보유기업 매칭사업 지원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주력/한계산업의 업종전환 지원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유도
- 기술과급력 확대를 위한 리빙랩 및 시범단지 조성
 - ICT와 접목한 전력망 지능화기술 테스트베드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광주에너지밸리 리빙랩 사업’ 추진
 - 태양광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P2P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빛고을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 시범단지 조성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대촌~송정~첨단을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 확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배후단지 조성
- 광주·전남이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및 연구개발지구 조성
 - 광주전남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혁신·연구기관들의 실시간 협업·공동연구 가능 가상물리융합센터 구축, 동 센터와 혁신·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화로 광주전남 가상 물리생태계 기반 조성

4]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 산업생태계 실현

- 빛그린 산단 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구축
 - 노사민정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인 고용 유도
- 도심에 위치한 공업지역의 외곽 지역산단으로의 이전을 통해 주민과 갈등 해소 및 광주형 일자리 창출
 - 도심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 고용 증가 기대
-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AI연구원 설립과 AI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및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으로 상생발전 도모
 - AI 컴퓨팅과위·특화 데이터센터, 3대 분야 실증환경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중심 개방형 산업융합 집적단지 인프라 조성
 - 지역 혁신기관과의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선순환 체계 구축
-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미래 광·융합기술 서비스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지원체제 구축
 - 광반도체 공정 단계별로 주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 기술혁신 능력 배양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로 매년 10개 광융합 전문중소기업 창출 기대
 - 한국광기술원에 광융합기술지원 전담조직을 두고, 첨단3지구에 광반도체 파운드리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광융합 기술공급기지를 운영

- 광주의 기 구축된 가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공기산업으로 대체 육성
 - 에어 가전혁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기산업 실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공기질 개선제품 보급·확산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광주 친환경 자동차 혁신 전진기지 조성, SW기반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및 신산업 벤처생태계 조성
 - SW융합기술, 자동차부품기술, 전자기술 등을 연계해 차세대 자동차 기술 수요 증대에 따른 SW기반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 스마트 플랫폼 구축·친환경 전기차 공유도시, 충전 기반 기술 구축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 안전운행, 주변 상황 인지 등 자동차 SW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
 -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5 도시기능 전환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광주전남권의 허브로 상생 개발
 -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시티,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광주전남권 미래발전 견인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군공항 종전부지로의 이전,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이전부지 조성 지원 등 정책적 지원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의 혁신적 개편 유도
 - 광주역, 광주송정역, 송암산단 등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 발굴하고 중심시가지형 및 주거지원형 등과 연계하여 구도심의 재생 추진
-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하남산단 내 노후기반시설 개선·확충, 구조고도화사업, 혁신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입주기업과 산단 경쟁력 강화
 - 본촌산단은 공간재편, 업종 재배치로 ICT·지식산업 등 도심형 업종 고도화, 창업과 혁신생태계, 청년친화형 단지, 주거·편의 시설이 확충된 스마트산단으로 조성

대전광역시: 혁신성장 주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가. 기본목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
- 혁신성장동력 기반의 상생발전 중추도시
- 경제문화가 풍부한 활력 있는 균형성장도시
- 시민주도 공동체 기반의 풍요로운 포용도시
- 품격 있는 삶을 담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나. 발전방향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 조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도시형 복합혁신공간으로 재조정하여 산·학·연 간 교류 협업 및 기술창업 환경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2021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첨단 의약바이오, 에너지 분야, 스마트 융복합 부품 소재 분야에 특화된 첨단 기술집약 산업 육성
 -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전형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환경 조성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소·벤처기업 육성 및 대전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특화기능별 혁신성장 산업단지(대동·금탄국가산단, 장대도시첨단산단, 안산 첨단국방산단 등)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스마트 재생으로 강소·벤처기업 육성 기반 마련
 - 기업친화형 기술이전 활성화 플랫폼 조성 등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으로 산·학·연 간 연구성과 공유 및 지역·기업 간 연계 강화

②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광역적 상생발전 도모

-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시 간 상생발전 기반 및 충청권 중추도시 기능 강화
 - 대전과 동·서해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4-1축 고속도로(보령~대전~보은/상주, 영덕), 대전시와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 순환 고속도로망(대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과 대전 및 인접도시(세종, 청주 등)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교통망 확충(대전~청주공항 간 효율적 연계, 대전~세종 간 대중교통망 보강·구축 등) 검토
 - 고속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 도시철도,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 조차장~청주공항, 대전조차장~옥천), 호남선 고속화(논산~대전 가수원)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검토
 -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단지 확충(북대전 종합물류단지)과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교통인프라 유지관리 강화 및 위험도로 선형 개량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효율적 연계 도모
 - 첨단산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와 기능지구(천안·아산, 청주, 세종) 간 효율적 연계 도모
 - 대덕특구(R&D)~유성(벤처)~세종(지식서비스)을 연계한 첨단과학지식산업 집적단지 조성 추진

③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생활거점별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대전형 도시재생 추진
 - 대전형 도시재생 추진으로 원도심을 도시재생혁신지구(원도심 역세권 도시재생, 서대전역세권 활성화 등)로 조성
 -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청년창업, 시민커뮤니티시설 건립, 가로환경정비, 자율주택 정비 등)의 지속적인 추진
-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 충청유교문화권 구축과 연계 협력사업(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의 지속적인 발굴·추진
- 과학기술 접목 체험형 스포츠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제적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지역문화자산 및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원도심 역사문화거리 조성, 보문산 일원 관광거점화 등)의 지속적 발굴
- 기존 문화시설과 노후시설 및 빈집,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공간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거점 체육시설 건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시민체력인증센터, 시민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
- 지역 자립형 스마트 일터·쉼터·삶터 환경 조성
 - 대전형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 및 지역청년 일자리 연계로 양질의 일터 환경 조성
 - 녹색문화 기반시설(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의 기능 강화와 산림·수변공간과 연계한 도심 속 쾌적한 쉼터 환경 조성
 -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주거안정 지원 및 특색 있는 주거공간 공급, 빈집 재생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 매력 있는 도시경관 창출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터 조성

4 자치분권·교육·복지 기능 강화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구현

- 시민참여와 공유 기반의 자치분권 강화로 시민 주권도시 구현
 - 민·관 소통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과 시민 주도형 시정 참여제도(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 구축) 추진
 - 대전형 풀뿌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빙랩 시범마을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지원공간(시민공유공간 100개소 조성, 공동체 지원센터 등) 조성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으로 살기 좋은 교육, 보육·노후, 의료복지 환경 조성
 - 우수한 지역 인재양성과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첨단 교육공간 확충 및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조성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공공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0세아 전용 공공어린이집 건립, 공공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자립 지원의 지속 추진

- 중부권 최고수준의 의료시설(대전의료원 등) 건립과 지역응급 의료체계 구축으로 대전 및 주변 도시민의 의료복지 강화

5]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담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

- 과학문화와 연계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
 - ICT 기반 도시 인프라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화로 시민체감형(생활정보·시설관리·환경·안전·교통서비스) 스마트시티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증하는 테마형 거리 및 스마트 특화단지(과학기술 관련 인프라 연계,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조성 및 기술사업화 거점지구) 조성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 친환경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특화사업 추진과 안전한 수자원 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속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 및 공급
 -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분진흡입차 도입 운영, 미세먼지 먼지배출량 관리 강화 등)의 지속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환경 조성
 - 친환경 신교통수단(대전형 트램 등)의 도입으로 완결형 도시철도 체계 구축,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수단(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보급 확대
 - 통행시간 단축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 첨단교통체계(C-ITS) 구축, 자율주행차량 운행 여건 조성
 - 편리한 여행 지원을 위한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구축
- 시민 모두가 안심하는 스마트안전 생활환경 조성
 -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도시 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도 안전공동체 구현

울산광역시: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가. 기본목표

- 사람과 공간의 포용도시
- 동북아 에너지 허브도시
- 환동해 교통물류 거점도시
-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나. 발전방향

1 도·농 통합 공간구조 및 광역도시권 형성

- 도·농 통합형 압축 도시공간구조 형성
 - 장래 인구감소를 고려해 현재 도심과 언양·삼남(KTX 역세권)을 주핵으로 하는 2도심 공간구조 형성 추진(다핵 공간구조보다는 도시 기능을 도시중심부나 생활 거점으로 유도)
 - 도심과 주요 거점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망(철도망) 중심의 압축적 도시개발 추진
 - 도시와 농촌 연계 및 도시성장축 형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검토
 -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특정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을 집적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간구조의 효율화 추진
-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 정주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연구개발인력, 외국인 등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유형을 개발·공급
 -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정주기반 확충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기반 제공으로 삶의 질 수준이 높은 도시환경 마련

- 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울산과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광역거버넌스체계 마련
 - 하나의 도시권 형성보다는 울산과 기능적 연계가 많은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도시권(해오름 동맹, 동남권 등)을 추진하고, 연계·협력 사업 발굴

② 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육성

-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과 R&D 실증화, 연구소기업 육성,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복합연구단지 조성 및 관련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정 검토
 -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미래 산업 여건변화에 대응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창업 활동공간 조성(한국수소산업진흥원·한국해양플랜트산업진흥원 유치, 국립체험형 미래과학 건립,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등) 검토
 - 농촌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대응형 스마트팜 산업 육성
-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개척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능 및 연계단지를 집적화한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검토
 - 국내 최대 액체화물처리항만 및 부생수소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산업 중심의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수소도시 구현 추진(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검토)
 -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체 기술의 연구·실증·인력양성·산업생산 기능이 집적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검토
 - 에너지산업 분야의 네트워크와 기업 지원, IT 분야와의 융복합 및 트레이드·금융·홍보를 위한 에너지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에너지산업 분야 기반 확충 검토

③ 환동해 교통·물류 거점도시 육성

- 지역 내 및 지역 간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도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시내부 철도망(울산 도시철도) 구축 추진
 - 울산과 주변지역 간 광역적 이동성 확보 및 연계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검토(울산외곽순환도로, 국도·국지도 건설 검토, 울산(신복R)~양산(북정) 광역철도 구축, 동해선 고속철도 운행, 송정역 시설개선 및 광역철도 운행)
-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 거점시설의 기능 강화
 - 울산공항을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시설 개선, 남북경협 대비 노선 확충과 신규 취항 검토
 - 울산항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오일 허브항만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한반도 통일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기능 강화
 -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기존 산업인프라와 항만 간 연계방안 모색,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 육성

④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및 산업시설, 발전시설 등의 관리와 재난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 지진 등 재난에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방재 및 감재를 위한 거점 조성·운영(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추진
- 스마트 대기환경 구축 및 맑은 물 확보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친환경 항만환경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마련(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검토 등)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 및 사연댐 청정원수 부족분에 대한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방안 마련

⑤ 지역자원 특화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육성

- 울산형 문화도시 육성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 예술기반 구축(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 조성)
 -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한글문화 및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선사 시대의 문화 등을 토대로 지역 특화상품 개발(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국내 최초 계획적 공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노후 산업유산을 도시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도시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을 문화·예술에 접목하여 신산업으로 육성
-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글로벌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시민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태화강대공원, 대왕암공원, 울산대공원 등 거점공원 기능 강화
 - 울산의 대표 자연자원인 영남알프스, 간절곶 등을 힐링의 메카로 조성하고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자원화
 - 남·북 간 관광 및 동북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해양크루즈산업 육성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가.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발전
-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 살기좋은 품격도시

나. 발전방향

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기능 강화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주요 기관(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설치와 함께 미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
 - 국제기구 유치와 함께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행정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 등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경부선 및 고속철도를 활용한 서울-세종 간 신속한 철도교통체계 구축 검토,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충북선 고속화,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 검토,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추진

②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 충청권 광역도시공간구조 재설정
 - 세종시와 주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도시 간 기능 연계·조정 및 광역시설 정비를 위하여 광역도시권을 구성하고, 통합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발전기반 마련

- 광역도시권 내 생활권 조성 촉진 및 연결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검토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에 이어 2단계 구간 건설 추진, 광역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및 노선 연장과 다양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검토
- 역사문화자원을 공유하는 연계협력사업 추진
 - 선비정신과 풍류문화를 주제로 한 금강누정선유길 조성, 누정 관광권(세종~공주~부여)을 대표하는 금강 누정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충청권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

③ 지역 모두 고르게 잘사는 도농 균형발전 도모

-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지역주민 이용시설 확충 및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복지수준 향상
 -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
 - 농촌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대 공급
 - 농업 분야 평균소득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산 분야에 ICT 융·복합시설 확산 지원 등 세종형 스마트농정 시스템 구축
- 도·농 상생발전 추진
 -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로 경제·문화 거점 조성
 - 신도시~읍면 지역 간 소통·교류 확대, 도농 상생을 위한 연계·협력 사업 활성화
 -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테마사업(조치원 청춘문화거리,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세종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등) 추진으로 문화도시 정체성 확보

④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 지자체가 경찰 설치, 유지 및 운영을 주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시범 시행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과 확산
 -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풀뿌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 시민 주도로 마을의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대 분야를 이끌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검토

⑤ 스마트 혁신기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 스마트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 조성
 -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설립,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 및 빅데이터 전문관 신설
- 국가 전략핵심 신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 지역특화산업 전·후방 혁신성장을 위한 신소재·부품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국제과학벨트법 개정, 대덕 연구개발특구 확대 추진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국가혁신융합단지(클러스터) 육성 검토
 - 자율주행 친화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구현 등 세종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반기술 및 지식서비스산업 중점 육성
- 청년 창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창업 육성·지원 시스템 구축
 - 청년 창업벤처 플랫폼 구축(창업 보육 및 창업 정보교류 지원), 창업 네트워크 조성(창업벤처협의회 확대·개편) 및 창업 지원사업 추진
- 국제적 수준의 MICE산업 육성

-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통한 도시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마련

⑥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구현

-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각종 지원시설 확충
 - 중부권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 지구 지정, 캠퍼스타운(4생활권) 조성 등 의료, 보육, 교육·문화 등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공급
-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 거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TF 운영 활성화,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망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현장교육 추진

경기도: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가. 기본목표

- 공정과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경기
- 삶의 질과 환경생태가 보장되는 경기
-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를 가진 경기
-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
- 남북교류와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기

나. 발전방향

①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발전

- 토지의 난개발 방지
 - 개별입지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며,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로 난개발 가능성 최소화
- 입지·상수원·군사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상수원 수질과 물공급의 안정성을 제고
 - 입지·군사 규제 등 중첩규제 개선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이용
 - 대도시권의 장기 비전과 미래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전과 이용 정책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도시적 생활서비스시설 이용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북부·동부지역, 구시가지 등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동두천 캠프케이시,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과 저발전 낙후지역 철도·도로망 건설 조기 추진

-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거점 조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농촌지역 거점 강화 프로젝트 추진

②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 지역주도형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취약계층 주거서비스 개선
 -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62만 호 공급하고, 공공임대 거주율 18.4%까지 제고
- 생활SOC 확충과 균형 배치
 - 문화·체육·의료보건·교육 관련 생활SOC를 확충하고, 도 내 시·군 간 접근성 격차 해소
 - 김포평화누리길 등 올레길 네트워크화사업을 추진하고, 양평·가평 등의 산악 휴양관광벨트 및 남양주·여주 등 강변휴양관광벨트 조성과 수요자 중심 스마트관광 전략 추진
- 도시재생·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중소도시와 소도읍·마을 대상의 경기도형 지역 재생사업 추진
 - 미군반환공여구역,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대학캠퍼스 연계형 또는 경제 도시형 재생 추진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의 연동화 체계 구축
 - 탄소저감형 도시계획 확대와 경기도형 환경생태계획 기법 개발
 - 경기도 환경정보 데이터통합 플랫폼 및 대기질 측정·모니터링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격차 완화
 -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에너지효율 향상 20% 달성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인프라 보급으로 낙후지역, 계층 간 에너지서비스 격차 완화
- 경기도 지속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구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상시 모니터링 추진

④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의 구축
 - A노선(파주~삼성~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양주~수원) 등 3개 노선 건설
 -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개통 추진 및 교외선(능곡~의정부) 운행 재개, 의정부~남양주 철도 건설 검토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추진과 BRT 및 트램 노선 확대
 - 노선입찰제 방식 등 버스노선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및 철도 신설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 광명~시흥(전용형 1개)/시흥~구로, 구리~잠실, 고촌~강서, 성남~수서, 인천~시흥 등(고급형 8개)/파주~은평, 양주~의정부, 별내~성북, 김포~강서 등(기본형 13개) 등 22개 노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및 친환경 노면전차(트램) 도입 검토
-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완성 및 부천·남양주 등 혼잡구간의 도로시설 개선
 - 인천 영종~강화~북한 간 경기만 고속도로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간 평화고속도로 건설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 AV(Auto Vehicle) 테스트베드 확대 및 AV 시범도로 확충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충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 자동차·게임·MICE·방송문화·패션가구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와 서비스업과의 융·복합 및 청년인력 접근성을 반영한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
- 안산 방아머리, 김포 아라 마리나항 건설, 평택호 내수면 마리나 조성과 항만 유희지 개발 추진
-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 및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 제2기 테크노밸리 조성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한 권역별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 시화·반월·성남·부천·군포·동두천 등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스마트산업단지 사업 추진
 - 서해안 자동차~기계~부품소재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추진
-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 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드론·AV 등 ICT 활용한 물류·유통시스템 혁신

⑥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거점 조성

- DMZ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 구축
 -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과 연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추진 검토
 -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한강하구·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및 개발 추진
- 한반도 유라시아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
 - 유라시아 연결철도망 건설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기도 접경지역과 북한 접경지역 연결 검토

강원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가. 기본목표

- 체류인구 250만 명 달성
- 전국 4% 강원경제권 실현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나. 발전방향

① 동북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신발전축 구축

- 한반도 통합경제권과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신발전축 조성
 - 국토의 중북부 내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형성,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남북교류와 ‘평화벨트’ 연계 내륙종단 고속교통망 완성 추진
 - 북방자원에너지 경제권 및 물류클러스터(자원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북방경제 게이트웨이 선도 기능 확충
- 강원도 G-HI 벨트를 중심으로 공간 재편
 - 춘천-원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 환동해 경제벨트(한반도 신경계구상), 스마트 생명·관광벨트(원주-평창-강릉)를 연계하는 H벨트를 중심축으로 육성
 - 평화지역(접경지역), 강원내륙(강호축 연계), 강원남부(고원·자원지역)를 연결하는 I벨트를 강원도 신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

② 활력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환경 조성

- 청정 자연환경과 고품질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농복합타운형 스마트 헬스케어단지 조성
 - 역세권 중심 대중교통중심지 단지 조성, 어메니티 헬스케어 서비스 특화, 전기차·수소차 중심 도시교통시스템 구축 및 주거시범단지 조성
- 인구소멸에 대응해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공공서비스를 집적한 스마트 생활공동체타운 모델사업 추진

- 스마트 평화빌리지 국가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강원도 평화지역(접경지역) 활력 증진과 미래국가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평화 빌리지 국가시범사업 추진
- KTX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거점개발 추진
 - 역세권별 차별화·특성화된 지역 핵심거점 개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③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교통망 확충

-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기 위한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추진
 - 동해선 및 동서고속화철도, 내륙종단선 등 평화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제천~삼척, 철원~고성을 연결하는 중·횡축 대륙화 전진기지 고속도로망 구축 추진
 - 환동해권 신해상 교역항로 및 평화크루즈 항로 개설 방안 모색
- 양양국제공항 경제권 육성 및 국가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모색
 -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 동해공동관광특구 내 남북교류 전담공항 지정 운영 및 양양 공항경제권 조성 방안 모색
 - 동해선 및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연결로 동북아 Fly-Cruise 허브 육성
- 접경지역 연결도로망 구축, 평화지역(접경지역) 연결도로(국도, 지방도 등) 구축 등 통일경제·평화지역(접경지역) SOC기반 구축
- 국토 내륙 통합·포용국토 기반 광역교통망 구축
 - 강원(제진~강릉~원주)~충북~호남 철도 연결을 통한 강호축 연계망 구축 검토, 강원 남부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건설, 수도권 순환철도망 및 용문~홍천 철도 연장 검토
 -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단계적 추진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추진

④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스마트 헬스·모빌리티·관광 등 스마트 라이프산업의 중점 육성

- 스마트토이, 플라즈마 소재, 드론 콘텐츠, 수소산업, 탄소산업, 재난안전 등 6대 산업을 지역주도 특화사업으로 육성
- 국가산업단지 및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신성장거점 육성
 - 부론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집적지로 육성, 혁신도시를 국가 혁신융복합단지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조성,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및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미래 강원 농도(農道) 실현을 위한 푸드테크 거점 조성
 - 강원도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유치로 푸드테크 거점 조성
- 남북평화경제 협력모델 구축
 - 평화통일 선도지역 운영, 평화통일특별지구 설치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검토
 - 남북 산림협력센터, 남북 백두대간 민족평화트레일 조성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 모색
- 글로벌 평화관광지대 조성 추진 검토
 - 동해관광공동특구를 감안하면서 강릉~설악산~금강산~원산을 국제관광 자유지대로 조성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설악~금강권 개발 및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
 - 설악~고성~강릉의 관광자원 개발 및 국제관광 자유지대로 육성 추진
- 동계올림픽특구 평화관광벨트 및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관광휴양클러스터 구축
 - 평화올림픽 개최도시로서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평화관광 브랜드 도시 육성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의 지역산업화 촉진
- 힐빙(Heal-Being) 포용 국민여가공간 조성
 -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다기능·고도화된 여가공간 조성
 -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빙(Heal-Being) 개념의 포용적 국민여가공간 조성

⑤ 365 안심·행복한 안전공동체 실현

- 자연과 공생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방재 실현
 -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해 도시·교통·물류 기반시설 관리 강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도시계획 지침 마련 및 기후적응 도시모델 개발·보급
-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재난취약지역 스마트 예·경보시스템 구축 검토
 -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 생활안전지도 작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티드) 적용 관리, 취약지구 안전 정비 및 농어촌 안전, 소방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 접경지역 탄약저장고 등 군사위험시설 안전관리,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의료사각지대 벽지 응급체계 및 원격의료 접근성 강화사업 추진

⑥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형성

- 글로벌 산림관광, 고원경제산업 및 생태자원 중심지대 육성
 - 한반도 고원생태자원 연구와 휴양 거점지대 조성 및 백두대간 천연자원 산업 기반 구축, DMZ를 포함한 평화지역 및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복원, 산림복지 빌리지 조성 등 사람중심 산림복지서비스 구축 확대
- 설악산-금강산(DMZ 연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설악산-금강산(DMZ 연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유역관리 기반 통합 물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
 - 상·하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수질오염관리시스템 고도화, 노후 상수도 현대화, 대체 수자원 확보, 스마트 상수도 기반 확충 등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추진
- 환경·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연안의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연안정비 및 침식관리 시행, 국민 향유의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

충청북도: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가. 기본목표

-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상생지역
-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신산업 중심지역
- 감성이 충만한 문화관광 창출지역
- 안전하고 청정한 지속가능한 지역

나. 발전방향

1]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 광역 산업·관광 및 교통 연결망 구축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 유라시아 교통물류 기반 네트워크 보완
 - 강원~충청~호남(강호축)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토 교통망 구축(충북선 철도 고속화, 오송연결선 등), 백두대간 경관도로(백두대간 순환도로망) 추진 검토
 - 강호축 연계 미래 신산업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추진
 - 강호축을 통한 한반도-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보완으로 평화국토 기여
- 광역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지역 간 연계·협력 인프라 조성
 - 충청권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거점(대전~세종~오송~청주~청주공항) 간 연계 검토
 - 중부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확장(남이~호법) 검토
 - 충북 동부축 간선도로망(영동~보은~괴산~충주~제천~단양) 구축 검토
 - 동서 연결성 및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제천~단양~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오송~청주공항~보은~영덕 간 철도,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3~4축 보완(증평~합천), 대전~옥천 광역철도, 감곡(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 건설 검토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 역할 확대
 - 행정수도 및 제2항공화물 거점공항 역할을 위한 세종~청주공항 고속화 도로, LCC 전용 여객 터미널 신축, 공항 활주로 확대, 공항화물터미널 신축 검토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모두가 편안한 생활·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 친환경주택 보급 확대, 저에너지 소비형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농촌에 도시 수준의 경제·생활인프라(삶의 질 향유 등) 확충(農市)
- 잠재적 가용토지의 계획적 관리,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관리체계 정비
 -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통합적 토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 신교통수단에 대응한 자율자동차 안전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도로교통 관리체계 정비

③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 산업공간 확대

-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바이오헬스 선도지역 조성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추진
 - 천연물·화장품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등)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클러스터 거점 구축 및 신에너지기술 활성화
 - 호남(태양광 폴리실리콘)~충북(태양광 셀·모듈)~강원(풍력, 지열)~함경도(신재생 에너지) 에너지벨트 구축 추진
 -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과 저장·운반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존 산업 지능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 5대 핵심산업(친환경스마트에너지, 미래수송기계,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바이오 헬스, 스마트농축업) 집중 육성 추진
 - 태양광·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재활용센터,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시스템반도체 융복합타운 조성 등 핵심산업 거점 구축
 -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오창하이테크밸리 조성, 미래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오송), 엘리베이터 산업(충주) 등 혁신기반 조성
-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 농·축산업 육성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온실 단지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 유기농 특화로 위상 강화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 먹거리 순환체계 등 농식품 가공·유통 혁신
- 축산분야 유전자·질병연구센터 추진 및 곤충산업 클러스터 등 신산업 발굴
- 충북 증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
- 미래형 산업공간 확대 및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을 통한 구조적 전환 모색
 -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중소규모 특화산업시설 공간(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정(스마트안전제어, 바이오의약, 화장품 산업) 추진·확대
 - 청주산단 등 노후 산업단지과 농공단지에 대한 스마트 재생 등 리뉴얼화 모색
- 정부 시스템 반도체 육성정책과 연계, 충북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을 통한 반도체 특화지역 거점 구축
 -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 추진
 - 시스템 반도체 시험인증 종합지원센터(가칭)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지원 센터 등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추진
 - 후공정 생태계 조성으로 상호 연계를 통한 시스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

4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호수, 백두대간 등 지역 생태자원의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민쉼터 조성
 - 내륙의 바다 호수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충주제천·단양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및 생태관광의 잠재력을 지닌 괴산·보은·옥천·영동 연계 협력형 관광벨트 조성 추진
 - 백두대간 둘레길이야기길 조성, 자연휴양림 등 힐링시설 연결, 등산로·탐방로 연결
- 지역 고유자산과 개성을 토대로 지역 문화관광의 신가치 창출
 - 무예마스터십,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한 무예와 스포츠의 관광 자원화 추진
 - 충청유교문화권, 중원문화권 등 지역 고유자산을 집중 발굴·확대
-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해양문화인프라(미래해양과학관) 구축 검토

- 국제교류 중심기능 확충과 MICE산업 육성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
 - 한반도~아시아~유럽 연결 新관광실크로드 거점인 국제회의 도시(오송) 육성
- 역사, 무예 등 전통 문화가치 활성화 및 인문가치가 살아있는 문화 환경 조성
 - 역사·문화 전시관 확대, 국제무예센터 등을 통한 전통 무예가치 제고
 -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공간과 삶의 숨결이 담긴 인문학 경관 창출

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청정 충북 실현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공업 용수 공급,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한 수자원 관리 추진
 - 댐 주변, 상수원보호 등 중첩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활력 제고 방안 강구
 - 물길 보전, 생태하천 복원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친수공간 조성
-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의에 따른 환경보전전략 수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연동계획 수립, 환경용량 초과 오염원 적극 관리
 - 대청호, 충주호의 상수원 오염원 유입 차단 및 하천과 연계한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⑥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기반 확충

- 기후변화에 대비, 안전기반 구축 및 재난 수용력 강화
 -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도시 바람길 조성, 미세먼지 관련 정보센터 설립 등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재난현장 통합지휘 정보 시스템 구축, 재난현장 대응 교육 등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 고령자 재택 돌봄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창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기능 강화 및 확충

충청남도: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가. 기본목표

- 누구나 살고 싶은 포용사회 구현
- 도민 행복경제 및 문화·환경기반 조성
- 다층적 성장거점을 통한 균형발전 추구

나. 발전방향

1] 공간통합적 지역발전 유도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압축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권(Smart city & region)을 육성
 - 압축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성장경계선 확정 검토, 개발축과 중심지에 근접할수록 밀도 상향, 비시가화 구역의 개발행위 억제 및 구도심의 내부충진식 재생을 유도
 - 서북부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을 중심으로 스마트 가로(街路),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국가지식산업단지 등 혁신형 스마트도시 조성
 - 대도시 근교형 지역(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네트워크(하이퍼루프, 무인자율주행 DRT 등) 구축 검토 등 스마트 도시권 조성
 - 도농·농촌형 지역(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중심으로 스마트팜(Smart Farm)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빌리지 조성
- 농어촌 커뮤니티 재편 및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
 - 농어촌마을 간 기존 커뮤니티 바탕으로 접근성 양호한 다양한 형태의 작은 거점 조성
 - 과소마을 활성화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농사관학교 설립 및 운영

② 대한민국 복지수도 건설

-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치, 충남형 보육도우미제 확대, 소규모그룹 홈케어 방식의 지역친화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 주민 밀착형 생활SOC 공급 확대
 - 고령화된 농촌지역에는 읍면소재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결절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를 복합화하며 스마트 건강주구를 조성
 - 도시공원은 환경복지 차원에서 효율성(양적균형), 형평성(질적균형), 친환경성(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저감,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성

③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

- 지역혁신과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 충남 북부권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지원과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천안아산 R&D집적지구, 한국형 제조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국가기간산업 구조 고도화(철강, 첨단화학, 수소) 추진
 - 충남 서해안권에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와 해양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검토
 - 충남 내륙권에 농업테크 기반 스마트팜 혁신벨리와 힐링 디자인 푸드 R&D 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자원(온천치유, 산림치유, 농업치유 등) 활용 맞춤형 힐링거점 구축
 - 충남 남부권에는 軍문화 활용형 밀리터리-한류우드, 라이프 케어(Life-care) 융·복합 콤플렉스, 국방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방과학클러스터 육성 검토
- 충남형 경제순환과 지역자립 토대 구축

- 영업잉여의 현지화를 위해 유통자본 및 분공장의 지역법인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 주민 개방형 신상생산업단지 중심의 직주환경 조성
- 산업부문 역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특화단지 조성, 거점대학별 일자리 연계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 문화복지 실현과 여가·위락 융·복합 관광인프라 구축
 -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을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유희공간, 빈집, 상가 등을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 지역 문화유산에 기반한 재생과 문화콘텐츠화 추진, 천안·공주·서산 문화 도시 조성
 - 서해안 해양·생태경관 등 융·복합된 관광기반 구축, 유교문화권·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 활성화, 관광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
-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
 -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공간 환경정책을 통해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
 - 천수만 등 자연공간 복원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인공습지로 조성하며 금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생태거점화 추진
 - 산줄기, 물줄기를 연결한 그린인프라 구축, 바람길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며 산림일자리 창출형 경제립을 육성

⑤ 신성장거점 네트워크체계 구축

-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육성
 - 내포신도시에 국가기간산업의 헤드쿼터를 조성하고, 서해안 벨리(Golden Valley) 구축 추진
 - 내포신도시를 수소도시로 조성, 주변지역에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기반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 수도권에 대응하는 행복도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을 육성하여 세종시와 함께 공주, 논산, 내포 등 주변지역도 국제기능·국가기능·광역기능을 특화
- 환황해 직교류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국가핵심기간시설 교통 네트워크 체계화
 - 환황해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고, 수도권 이남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고창~대산~개성) 검토
 - 전국 간선도로망(7×9 교통축)의 비대칭적인 동서축 간격 정비 검토(중부권 4-1축고속도로: 보령~상주, 중부권4-2축고속도로: 세종~내포신도시~서산공항~태안)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 추가검토사업(보령선: 보령~조치원,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충청권 광역철도 등 철도인프라 확충 검토
 - 국토 중앙부 다양한 산업과 자원 연계, 고속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성장능력 확보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 고속철도 구축 검토
- 기추진 국가정책 사업과 충남 여객·물류·관광거점 연계네트워크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거점지역(내포신도시, KTX공주역) 간의 광역 교통망 확충,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연계한 내포신도시의 수도권 전철 연장과 고속철도 연계 검토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 인접, 관광·물류거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대산~이원 간 연륙교 건설, 내포신도시와 여객·물류·관광 거점 연계 내포 철도 구축 검토
 -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및 다목적부두 확대를 통한 수출입 거점항만 확보, 서산공항 민항유치 검토로 여객·물류·관광의 항공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 중·장기적으로 보령 신항만(예정지 지정고시) 건설 및 당진항 석문·송산지구 항만개발 검토를 통해 중부권 수출입 관문 항만 기반 확보 추진

전라북도: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

가. 기본목표

- 스마트 농생명 산업 수도
- 에너지신기술 융복합 新산업 거점
-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 글로벌 SOC · 안심 삶터

나. 발전방향

①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 새만금을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
 -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 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
 - 중장기적으로 신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및 고품격 도시로 조성
-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단계적 개발방안을 보완·확정(1단계: 2020년 완료, 2단계: 2040년 이내 완료 등)
- 5개 권역·5대 축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국토의 신성장 지대로 도약
 - 5권: (새만금권)신재생·해양관광레저거점, (중추·혁신도시권)미래주력산업거점, (동북권)태권시타·휴양·힐링거점, (동남권)식품·의료 체험관광산업거점, (서남권)방사선·해양역사 복합산업거점
 - 5축: (동서상생축)동서산업연계벨트, (내륙혁신성장축)농생명융합벨트, (동부휴양힐링축)산악형 레저휴양벨트, (서남부건강의료축)식품·의료 특화벨트, (해양레저축)신재생·해양체험관광벨트
- 공동자원을 바탕으로 초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선도

-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지리산권 광역연계협력 등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검토

② 전북에 집적화된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 식품·종자·농기계·R&D로 연계된 농·생명 산업벨트 구축
 - 농·생명 식품산업 집적화를 위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글로벌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으로 종자·농기계산업 거점 육성
-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이 융합된 농·생명 가치사슬 완성
 - 한국형 스마트팜산업 혁신거점과 지능정보기반 미래농업 플랫폼을 구축, 동남서남권을 중심으로 미생물유전 자원과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동식물자원소재 거점 조성

③ 에너지·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신산업지대로 조성
 - 군산의 산업기반을 재구축하고, 새만금에 대규모 수상태양광·해상풍력·수소 전지 발전단지 및 스마트 그리드형 제조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대규모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검토
- 신성장 혁신기반 구축과 금융중심지 조성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전주·정읍·완주 연구개발 비즈니스거점 구축, 전기와 방사선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추진
 -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연기금 및 농·생명 특화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 검토
- 친환경·지능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연계한 전기·수소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 군산, 완주 등 도내 자동차 거점도시를 전기·수소 자동차 제조와 연구개발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자동차와 조선산업 구조전환을 위하여 새만금에 지능형 이동체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검토, 탄소소재기반 항공기복합재 부품제작·정비산업(항공MRO) 등을 통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4] 문화·관광 기반 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 문화향유기반 확충과 체험·휴양 기반 고품격 관광거점 조성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지역별 생활문화센터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하고 곰소만 해양생태관광벨트, 옥정호 에코관광지,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동부권 에코사파리공원, 임실 반려동물클러스터, 말산업특구시설, 벽골제 농경문화체험관광지, 고군산 해양관광거점 등 추진
- 문화자원의 융·복합으로 신가치 창출과 MICE산업 등 관광자원의 명품화
 -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영화·음악, 게임 등을 첨단 ICT와 융·복합한 미래형 지역문화콘텐츠 육성
 - 가야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화, 전라무형문화와 동학·유학 재조명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전담시설 확보
 -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 기술을 기반으로 새만금 엑스포 등 메가이벤트 유치와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무주 태권시티 조성으로 국제 성지화 완성

5]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 지역 개발여건 혁신을 위한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 글로벌 접근성 향상과 서해안권 물류중심지 도약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선석 규모 확대, 익산 KTX역 중심의 유라시아철도거점·물류기지 건설 추진 검토
-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연계체계 구축
 -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과 국가철송망으로 새만금~대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고속화철도,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 검토
 -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연계 인프라(BRT, 트램-트레인 등) 구축, 지리산 전기철도 건설 추진 검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국2·전북1시간 교통인프라 구축
 - 동서·남북축 광역간선망 확충과 주요 도시부 혼잡완화사업을 추진하고 영·호남 연결 동서내륙 인프라로 전주-대구고속도로, 전주-김천철도 및 광주-대구철도 건설 검토
 - 남북고속간선망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개통 검토, 서해안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남원 및 국도 77호선 부안~고창 등 주요 국도 건설 검토

⑥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 전환

- 에너지·물·안전 중심의 지역특화형 스마트시티와 통합물관리 인프라 구축
 - 새만금을 세계적 스마트 수변도시로 건설하고 농촌형 스마트빌리지 시범 및 확대, 전북형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워터그리드 구축, 안전교육과 홍보를 위한 IoT 교통·산업안전체험센터, 소방관심신건강수련원 건립, 국제적인 안전도시 인증 등 추진 검토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생산·보급을 추진하고, 새만금호와 상류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이행·평가를 통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견인
- 보건의료 개선과 초고령·저출산에 대응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허브시설인 국립 공공의료 대학(원)과 국립의료원 유치,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거점산부인과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치매전문병동 및 국립요양병원 건립 사업 추진
 - 고령사회 대응 향노화 거점연구단지 조성,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추진
- 주거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정책
 -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동부·동남권에 고령자용 무장애주택과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라남도: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 중심지

가. 기본방향

-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해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
- 미래 생명산업 육성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
-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지역 개발·인재육성

나. 추진과제

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 전남의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천혜의 청정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블루 에너지,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프로젝트 등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19. 7. 12)에서 제시된 세부 프로그램 이행
- 한전공대 중심 산학연이 융복합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블루 에너지)
 -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규제자유특구,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등 신기술 개발 및 국가 차원의 랜드마크 연구 인프라 구축
 - 그린 수소 생산·연구·실증 등 수소경제 선도 및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8.2GW) 및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개발
- 생물·의약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블루 바이오)
 -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평가를 기반으로 난치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 전남의 풍부한 바이오·치유 자원과 메디컬 자원, 연구기관을 융복합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청정한 해양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심뇌혈관 질환 관련 R&D 및 치료법 개발을 총괄하는 국립심혈관질환센터 설립

- 우주항공·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e-모빌리티산업 육성(블루 트랜스포트)
 - 유·무인기 개발,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 종합 지원체계인 국가 유·무인기 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 비행체 성능테스트, 시뮬레이터센터 등을 갖춘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테스트 타운 조성
 - 무안공항 MRO 특화단지과 연계한 드론·항공부품 제조 생산단지 조성
 - e-모빌리티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 자율주행 스마트 e-모빌리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및 e-모빌리티 기업 육성
 -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실증을 위한 기술실험 및 성능평가인증시설 구축
-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조선 부품·기자재 연관산업 접목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친환경 선박 제조, 해경 제2정비창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등 다각화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산업 및 고기능성 금속소재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 고기능성 고무소재 부품, 정밀화학 등 첨단 석유화학산업 육성

②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통해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블루 투어)

- 남해안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육성
 - 남해안 주요 섬과 해양 관광자원의 연결로 관광목적지 다양화 및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등 남해안 전체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 육성
 - 부산경남전남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관광계획 수립 및 공동 추진체계 구축
- 남해안의 광역관광권 개발을 통한 다핵적 국토균형발전 도모
 - 목포·여수·완도권을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관광자원 간 융·복합화와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이순신 역사유적 연계 광역 호국관광벨트 조성, 마한문화권 개발

-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철도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등 광역관광루트 개발
- 글로벌 섬·해양관광 기반 구축 및 연관 산업 발전 도모
 - 목포·여수 크루즈 기반 확충을 통해 다양한 국제·연안 크루즈 항로와 프로그램 운영
 - 항공, 철도, 해상과 연계한 MICE산업 기반 구축 및 컨벤션 기획과 전시·박람회 유치 등 지역기반 MICE산업 생태계 구축 검토
 - 섬별 문화·역사·향토성을 살린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추진
 - 섬의 발전정책에 관한 종합적·전문적 연구기관인 섬 발전연구진흥원(가칭) 설립 검토
 - 섬의 전략적·균형적 개발을 위해 섬을 주제로 국제 공인 EXPO 유치 추진

③ 미래 생명산업 육성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블루 농수산)

-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기농업 복합타운, 생산·관광·체험 등 친환경 융복합 농원 조성, 첨단 농업 기계 농업생산 시범단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해양쓰레기 제로화, 스마트 양식 등 지속가능한 미래 생명산업 혁신모델 제시
 - 생산·교육·연구가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기반 확충, 대규모 친환경축산 융·복합단지 조성 및 ICT 첨단 양식어업 규모화
-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 인구 감소·고령화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어·귀촌 정책 추진
 -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 노후화 또는 유휴항만을 수산물 판매, 관광·레저시설, 친수시설 등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농어촌의 다원적 활용 및 기능 활성화
 -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④ 동북아 중심지로의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지역 개발·인재육성

-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연계망 구축
 - 호남축 고속철도망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와 전라선고속철도(익산~여수) 구축, 국토간선도로망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
 - 섬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의 지속적 확충, 흑산공항 건설, 해상 교통 확대 및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 확보
 - 철도·항만 등 내부교통망 개선 및 주요 관광지, KTX역, 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 결절점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체계 구축
- 동북아 교통 및 복합물류 거점 공항·항만 육성
 -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 MRO산업단지 조성,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을 통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항만물류 R&D를 육성하고 해양레저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복합비즈니스형 항만 육성
- 지역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체계 정비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 남해안철도 구축,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경협사업 등을 통해 전남을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전초기지로 조성
-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문화예술·의료·교육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 연관기업 집적화
 - 이전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에너지 선도모델 조성 및 미래교통 모범도시 육성
- 전남의 강점인 친환경 생태자원과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블루시티)
 - 웰니스 관광대학·글로벌 국제학교 설립, 글로벌 IT 데이터 센터 유치, 제로 에너지빌리지 등을 기반으로 조성한 스마트 블루시티를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
-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 꿈을 키우는 미래인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창의·융합형 선도 인재 양성

경상북도: 동북아 신경제 거점, 스마트산업의 중심지

가. 기본목표

- 차별 없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지역
-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산업 선도지역
-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역
- 세계로 통하는 교통물류망 거점지역

나. 발전방향

1)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권역별 신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권은 과학·에너지·관광벨트 조성과 해양인프라 기반 환동해권 발전 중심지대 구축
 - 서부권은 ICT융합산업벨트 조성과 국가 혁신산업발전 거점으로 육성
 - 남부권은 첨단 新지식산업벨트 조성, 대구광역도시권과 연계 발전
 - 북부권은 생명·바이오·신소재벨트 조성 및 도청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 추진
- 균형발전거점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
 - 동해안권은 환동해 바다시대의 물류·경제분야 국가 게이트웨이 조성 검토
 - 서부권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검토
 - 남부권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구시와 상생을 통한 경제공동체 육성
 - 북부권은 문화·복지·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청신도시를 명품도시화
 - 광역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발전권역 조성
-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경북형 상생발전모형 정립
 - 경북형 농촌개발 모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및 확산
 -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산·학·관·민 협력형 신농촌 발전모형 정립

②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
 - 농산촌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스마트교통체계 도입과 공유교통체계 확산
 - 지역별 특화개발 지구 조성과 기존 시가지와 상호보완적 기능 배분, 공공 자원배분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 등 도시 간 연계성 강화
 - 도심재생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도청신도시와 성장형 도시(포항, 구미, 경산, 칠곡 등)의 성장관리 등 유희공간 활용 및 난개발 방지
- 차별 없이 누리는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
 - 도심 유희부지를 활용한 녹색주거환경 조성, 빈집 주택재고 관리 강화 및 공공임대사업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
 - 중소도시 수준의 농산어촌 ICT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 고령친화형 생활SOC 확대 및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서비스 거점공간 조성
 - ICT기반 원격의료 거점기관 설립 및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 재해·재난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 지진·재난 대응 내진인프라 확충,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등 선제적 재해예방 기능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와 복구체계 고도화
 -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지진안전체험관 등 지진안전 인프라 구축 검토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과 농림어업 육성

-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전략산업 선도기반 구축
 - 미래형 이동수단 부품소재 산업기반 강화 및 차세대 배터리 집적단지, 무선충전산업기반 강화, 퍼스널 모빌리티·드론·항공 부품산업 육성 검토
 -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사성폐기물 분석·연구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방사성 융합기술개발 전문기관 설립 등 원전산업 전 주기 발전 거점 조성 검토

-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에너지 특화 융복합단지, 지능형 에너지자립 단지, 전력 빅데이터 신산업 등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검토
- 극동러시아 천연가스망 연계 녹색에너지 공급망 구축 검토
- 스마트산업에 대응한 과학기술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세계적 연구개발 인프라 및 벤처밸리 조성, 인공지능 가전산업 육성, 5G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전력 반도체, 로봇 생산연구 기반 강화 검토
 - 고기능성 철강소재 산업 육성, 첨단 베어링, 탄소, 타이타늄, 그래핀, 인조 흑연 등 미래형 신소재산업 육성 검토
 -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백신, 화장품, 청색기술, 천연물신약, 지능형 실버케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거점 조성 검토
-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산·어업 육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곤충산업클러스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경북형 생태축산단지, 골드시드 프로젝트 등 스마트농업 전환 촉진 추진
 - 백두대간 임산자원, 국가반려동물산업, 한약재산업, 힐링·치유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가목재산업단지, 산림자원활용 관광단지 조성 검토
 - 미항개발, 어촌뉴딜, 인공어초 및 어항시설 확충, 연안침식 방지·복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 등 해양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4]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 육성

- 역사·문화·체험이 함께 하는 글로벌 관광인프라 구축
 - 신라 천년고도 경주 문화유적 및 왕경 복원과 가야문화권 관광거점, 선비·유교문화 관광거점 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 ICT 기술과 문화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지역별 관광거점도시와 승마·경마 관광자원 개발 등 말산업 육성
 - 동북아 및 환동해권 MICE 관광거점단지 조성, 국제크루즈 및 국제페리 관광거점 구축, 동해안 마리나항만 조성,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 해양·생태 관광자원화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백두대간 어메니티 힐링지구 등 백두대간 산림관광벨트 구축, 낙동강권역 수변생태축 복원과 친수공간 개발로 문화관광거점 지정·육성 검토
 - 해양치유산업지구, 해양레저복합산업지구, 해중경관, 오션로드, 연안친수공간 등 개발로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인공섬 및 수상도시(Floating City) 추진 검토
 - 경북형 명품마을 조성, 농촌관광거점지구 육성, 경북산야 농촌테마공원 확충, 생활 속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콘텐츠 제공, 문화소외지역 공공지원 강화

⑤ 지역발전을 이끌 천(天)·지(地)·해(海) 종합 물류·교통망 구축

- 세계로 통하는 교통·물류기반 확충
 - 중장기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공항복합도시권 개발 검토
 - 통합이전한 대구공항을 중국·일본·동아시아 등 LCC노선 확충과 남·북평화시대 남북교류 관문공항으로 육성 검토
 - 대구·경북지역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도로·철도망 구축과 공항 인접지역 특화산업 육성 검토
 - 포항영일만항과 대구·울산·경북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해양내륙 연계형 배후단지 조성과 물류기반 대형화·첨단화로 동북아 거점항만 육성 검토
- 국토의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남북7축(포항~삼척)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동해선 고속철도 복선화(포항~강릉), 대구~포항 영일만 직결철도 등 남북교류와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동해안축 교통망 확충 검토
 - 남북6축(영천~양구) 고속도로, 문경·경북선 고속철도(문경~김천), 남부내륙 고속철도(김천~거제), 중앙선 고속철도 복선전철화(도담~신경주) 검토 등 국토 내륙연결성 강화 추진
 - 동서3축(대구~무주) 및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중부권 동서횡단 고속철도(서산~울진) 등 동서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검토

경상남도 다함께 행복한 경남 - 대륙과 해양을 잇는 스마트산업 허브

가. 기본목표

-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성장거점 구축
- 경남형 안전·복지모델 수립을 통한 사람이 우선되는 경남사회 실현
-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및 동북아 관광거점 구축
-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 구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남환경 조성
- 광역연합을 통해 동북아 7대 핵심 경제권 진입

나. 발전방향

① 경남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간체계 구축

-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반 균형발전 추진
 - 남부내륙고속철도로 서부경남 경쟁력 강화 및 지역혁신 성장거점 구축, 역세권 개발
 -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국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지구 활성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농촌·농업지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구 추진
- 광역교통·복지교통·고속교통체계 구축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광역교통수단 적기 도입으로 광역교통 불편 해소
 -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2시간대)으로 영·호남 교류 및 해양관광 확대
 - 창원~서대구 철도 물류망 구축을 검토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영남권 순환철도망 완성

② 동북아 진출거점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 활성화

- 동북아시아 물류 플랫폼 구축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남해안벨트 강화,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기지 구축 검토

- 동북아 물류 R&D센터와 융·복합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 신항 개발 및 배후도시 종합발전으로 인프라 개선,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
- 제조업 재도약 및 스마트산업화 확산
 - 스마트공장(산단) 보급 및 확산을 통한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 활성화
 - 항공우주산업 집적화와 핵심기술 확보로 서부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핵심기지로 육성
 -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과 조선업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남형 스마트시티 확산
 - 경남형 스마트시티 조기 조성·확산으로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및 관련 산업 선도
 - 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신산업 스케일-업 지원
 - R&D체계 혁신으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과 고부가가치화 달성
 -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소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생산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③ 균형과 포용의 경남경제 실현

-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구축
 - 혁신창업 허브 구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창업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사회적 경제 협업·네트워킹·혁신과 인적·물적 거점 구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이 경남에 정착하는 구조 조성
 - 청년에 의한 정책수립기반 조성 and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청년층 유입 유도 및 유출 방지
 - 청년일자리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연계구조 정착
- 지역산업 안전망 구축
 -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보장을 통해 안심영농 여건 조성
 - 어촌뉴딜, 수산식품 생산 스마트화를 통해 침체된 어촌의 발전기회 제공

- 소상공인 갑질 피해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생계안정, 재도약 계기 마련

4 문화균형 및 경남정신 확립과 지역기반 관광거점 활성화

-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예술 협치 강화
 - 문화예술단체, 예술법인, 전문가, 주민의 균형 있는 참여로 경남 문화예술 정책 역량 강화
 -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사업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가야와 유교문화 육성으로 경남정신 확립
 - 가야역사유적 및 유물의 글로벌 가치 재조명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 유교문화자원 보존기반 구축 및 유교문화 계승 발전
-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 남해안권 개발사업 거점으로 공간매력도 제고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 서북부권 특화 휴양체험형 향노화산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테마형 휴양지구 개발
-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보급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보장

- 재난위기 저감 및 대응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경남 실현
 - 예방 중심의 방재역량(resilience) 강화,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점검으로 상시 대비
-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
 - 보육과 출생수 중심의 저출생 대응에서 결혼·출산의 장애요인 완화와 지역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
 - 지역 내 고용·주거·결혼·출산·보육·교육 등 정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도민의 삶 개선

- 경남형 의료·복지 모델 구축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및 복지·고용·보건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및 주거복지 강화
 -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회경제적 약자에 임대주택 지원

⑥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 미세먼지 저감, 건강한 물환경 조성, 습지 보전 추진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 기후변화 지역특화사업 확대, 2030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보급,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⑦ 광역연합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 동남권 경제 공동체 조성
 - 물류·도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국제자유물류도시)
 - 연구개발: 동남권 산업과학진흥원 설립 및 공동 산업육성체계 구축
 - 수소경제: 수소산업 기반 구축, 기술국산화,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 광역관광: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협력, 광역관광벨트 조성
- 동남권 생활 공동체 조성
 - 광역교통: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고속철도망 구축
 - 광역재난관리: 동남권 재난 공동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공동체: 동남권 먹거리관리원 구축
- 남해안 상생 협력 및 영호남 네트워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

가. 기본목표

-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조성

나. 발전방향

① 생활기반형 주거와 서비스 확대

- 제주도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확대
 - 세대,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1만 호 공급으로 주거복지망 구축
- 생활밀착형 SOC와 연계한 제주형 우리동네 생활인프라 구축

②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친화형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 제주권역 간 교통연결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 제주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공항 간 도로 및 공항~서귀포 간 연결도로 계획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 동해안벨트(제주-부산-강원-원산-청진) 및 서해안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한 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

③ 자연재난에 대응한 회복체계 구축

- 제주도 자연재해에 대응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및 리질리언스 체계 구축
 - 재난관리 자원, 인력, 피해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제주 해양재난 대응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제주도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④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 제주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제주혁신도시의 인력, 인프라와 연계하여 MICE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서귀포 도심과 서귀포 혁신도시, 중문관광단지 간 연결 인프라 구축

⑤ 제주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 제주신항만(예정), 서귀포항 등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제주 신항만과 서귀포항을 주요 거점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추진 및 도심활성화정책과 연계
-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원도심 사업대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재생공간으로 전환 추진

⑥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
 - 제주시권(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중심)과 서귀포시권(혁신도시, 외국인투자지구 중심) 간 연계 가능한 제주 대표산업(프리미엄 식품 및 뷰티화장품) 육성 거점 조성

- 제주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조성 검토
 - 규제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
 - 제주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하여 연관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 제주형 웰니스관광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의료·힐링·뷰티 등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산업 확대 및 인프라 확충

7]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 빅데이터·이동형 IoT·데이터 허브·디지털 참여·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 스마트 모빌리티(MaaS)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
 - 관광지 및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에 공공 Wi-Fi 설치 등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충

8]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 자원 이용

- 제주 스마트 해양경제도시 조성
 - 해양관광, 해양생태, 해양산업, 해양문화 등 특화를 통해 해양경제도시로 조성
- 제주 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건설, 크루즈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크루즈터미널과 주변지역 연계 관광시설 정비
- 제주 전역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검토
 - 제주 탄소 없는 섬(CFI : Carbon Free Island Jeju) 비전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 등 제로에너지 도시 건설

9]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 조성

- 제주도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검토
 - UNEP·IUCN 등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등 설립 검토
-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 제주도의 청정환경 유지와 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고, 절대·상대지역, 관리보전지역, 우수환경지역, 경관관리 등 환경관리체계 구축

부록 : 국토계획 헌장

국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미래 국토발전
 핵심가치를 공유하다.



강영태
 강철욱
 강찬열
 고성문
 고희현
 정기완
 김경석
 김경숙
 김경진
 김만식
 김광수
 김대현
 김도희
 김동길
 김동연
 김동환
 김두현
 김명자
 김이경

김이형
 김민주
 김백규
 김상미
 김상욱
 김수연
 김서탄
 김신철
 김영규
 김영근
 김영란
 김영호
 김용섭
 김윤성
 김자화
 김장섭
 김재훈
 김준프
 김자현
 김찬영

김창환
 김철홍
 김태현
 김필성
 김한수
 김혁
 김희자
 김희철
 도현래
 류경림
 류한철
 박건우
 박건호
 박동호
 박문희
 박상현
 박수욱
 박승철
 박신영
 박신지
 박응삼
 박준준
 박준국

박지홍
 방보람
 배미란
 배상운
 서규환
 서영창
 차기택
 성기택
 성수민
 송재만
 신명수
 신서호
 신재욱
 심승섭
 심현록
 안금자
 안세진
 양승재
 양승현
 양재명
 엄기영

연영홍
 영창선
 오만봉
 오민철
 오상문
 오상진
 오중석
 옥돌이
 위재연
 위정후
 윤경희
 윤광식
 윤양호
 윤진수
 아가은
 아진호

이광철
 이금화
 이동석

이동희
 이상돈
 이상훈
 이석구

이진형
 이수형
 이오주은
 이흥숙

이윤석
 아은숙
 이광수
 이광현
 이종대
 이자현

이우현
 이진이
 이진화
 이창섭
 이재남
 이희양
 인철희
 암자우
 장동원
 장라린
 장윤실
 장인철
 장열리
 잼은수
 정대용
 정동화
 정명일
 정미선
 정순배
 정영진
 정의숙
 정은숙
 정인숙
 정자나
 정자현

정혜훈
 조문환
 조민지
 조보길
 조은주
 조희영
 조철호
 전천제
 채승재
 최동현
 최이애
 최은실
 최인길
 최재강
 최애민
 한성희
 한승희

한영호
 한인구
 한재현
 한거희
 한천정
 허만수
 홍연수
 황보승권
 황복원
 황서영
 황원규
 황재홍

국토계획헌장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국토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소중한 터전이다.
국토는 국민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어야 하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균형된 국토, 안전한 국토,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국토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 하나.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조성한다.
- 하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를 관리한다.
- 하나. 지역을 개성있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국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지역과의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 하나.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는 공동 이익의 실현을 우선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보전·관리한다.
- 하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특성을 살려 세계와 함께 번영을 누리는 경쟁력 있는 국토를 조성한다.

2019년 4월 20일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대한민국정부